

Title	:
Author(s)	大西, 広
Citation	京都大学大学院経済学研究科Working Paper (2004), 77
Issue Date	2004 - 10
URL	http://hdl.handle.net/2433/37953
Right	
Type	Research Paper
Textversion	author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군사적 제국주의로

-미국의 쇠퇴와 자본주의 세계의 장래 -

경도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교수

大西広(오니시 히로시)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Faculty of Economics
Kyoto University
Kyoto, 606-8501 JAPAN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군사적 제국주의로

-미국의 쇠퇴와 자본주의 세계의 장래 -

경도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교수

大西広(오니시 히로시)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군사적 제국주의로

부제: 미국의 쇠퇴와 자본주의세계의 장래

- 목차 -

I. 미국의 쇠퇴과정으로서의 군사적 제국주의

제 1 장 미국의 쇠퇴과정으로서의 군사적 제국주의

패권교체기로서의 전국시대 / 유럽의 자립, 미국의 쇠퇴/ 이슬람 제국의 자립/
중앙아시아 중국 신강성 자치구의 무슬림/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침 전환/
페르시아 전쟁의 교훈/ 아프가니스탄은 천미국가가 될 것인가

제 2 장 전쟁으로 향하게 하는 미국의 국민의식

반전운동의 고조와 그 한계/ 중간선거에서도 참전문제는 논의 되지 않았다
뉴욕주 중간선거의 미크로 분석/ 각론=민주당, 총론=공화당의 관계/
전쟁동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 미국 아이덴티티로서의 선악 이분론/
강대국이 아니면 안된다 라는 강박관념

제 3 장 전쟁국가의 경제적 기초

「군수산업을 위한 전쟁」설의 불충분성/ 「석유를 위한 전쟁」설의 가능성/
원유거래의 달러기준 표시 목적설/ 쇠퇴국가와 발흥국가의 국민의식설/
그러나 파멸적인 경비부담

제 4 장 미국인에 이용당하고 있는 유대인들

전쟁의 유대인 원인설에 대한 의문/ 「유대인·노동자 서클」에서의 토론회/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은 누구인가/ 오스만 투르크와 유대인/
「미국에게 빼앗긴 유대인」

II.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제국주의론으로

제 5 장 제국주의 시대로서의 현재

「제국주의」를 정당화 하는 영미의 논단/ 「제국주의」로서의 현재/
레닌의 「제국주의론」/ 전후의 「제국주의 전쟁」으로서의 미일 마찰/
자본주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제국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제 6 장 제국주의론으로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론

「평화적」, 억압적 그리고 진보적인 제국주의/ 이라크의 「해방」과 반미 운동/
계급 사회에 있어서의 「억압」의 본질/ 사회화의 추진자로서의 강자/
도시·농촌간 대립 문제로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적 「공장법」으로서의 국제협정
「정당화 수단」으로서의 국제기관의 역할/ 정당화 이데올로기의 역할/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로서의 생산력 발전

제 7 장 글로벌라이제이션론에서 제국주의론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론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는가/무역 경쟁에 있어서의 공수의 역전
불균등 발전의 현단계/ 「아시아 위기」가 보여주는 미국 패권의 후퇴
미국의 쇠퇴와 「일본 위기」/ 체제변혁론으로서의 평화 운동론

III. 아시아 세기와 우리의 과제

제 8 장 동아시아의 쇠퇴 국가 제국주의 동맹

미국에 있어서의 「북한 문제」/ 미국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반도 분단의 「이익」/
일본 외교의 문제/ 한반도 통일 문제는 동아시아의 「팔레스타인 문제」/
「미일 동맹」의 경제적 기초와 귀결/ 미국에 「도둑맞은 일본」

제 9 장 북한 경제와 한중의 역할

90 년대의 북한 경제/ 현재의 「재위기」와 경제제재/ 경제개혁은 진행되고 있을까①
경제개혁은 진행되고 있을까②/ 경제개혁은 진행되고 있을까③/
한국 「개방적 민족주의」의 가능성

제 10 장 중국 위협론과 민족적 장벽의 극복

「레닌적 분쟁」으로서의 중국 위협론/ 폐쇄적인 민족주의는 어떻게 극복 될 것인가
중국에 있어서의 「애국주의」의 문제/ 문화대혁명과 제 3 세계론/
「점진 개혁 노선」으로서의 반전 운동론

맺음말

「반전 배지」와 애국주의/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일본인/
「동아시아인」으로서 해야 할 일/ 본서의 구성에 대해

서문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부터 이라크 전쟁, 그리고 다음은 시리아 혹은 이란, 쿠바, 북한이 될지도 모르는 전쟁이 계속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UN 이나 타국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미국의 일국주의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는 차례차례 친미정권이 만들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법화된 세계를 우리들은 한탄만 하면서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다음 평화시대로의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확실히, 미국의 무법적인 행동은 더 이상 참고 보아줄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서고 있다. 이라크 전쟁 당시, 워싱턴의 어떤 전략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던 나의 친구는 이라크 시민과 매스컴에의 무차별적인 살육을 보고 미국은 미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발견도 되지 않은 대량파괴무기를 없애기 위하여 미국이 클러스터(Cluster) 폭탄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논리일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이 반전데모로 세계를 뒤덮을 정도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미국이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항상 UN 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어 전쟁을 해 왔지만 이번은 그것이 불가능했다. 미국은 자국이익을 위해 UN 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만들어진 친미정권도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 아프가니스탄의 타리반과 알카이다는 반소련파를 키울 목적으로 원래 미국이 만들어 놓았던 정치세력이었고, 이라크도 또한 79 년의 이슬람혁명이 끝난 후 반미성향으로 돌아선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군사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나라였다. 즉, 아프가니스탄의 타리반 정권도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도 원래부터 이러한 의미에서 친미 정권이었고 그것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어느 순간에 반미화 되었던 것이다. 비록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의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정권이 어느새 다시 반미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혹은 좀 더 말하자면, 미국이 보다 군사지향적으로 된 것도 경제력과 외교력이라고 하는 수단이 점차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동도 석유쇼크로 석유를 팔아 거두어 들인 수입이 운택해 질 정도가 되기 이전에는, 원래 경제적으로 미소의 어느 쪽의 종속국이 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이들 나라의 경제적인 자립과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저하가 미국에 남겨진 유일한 압력수단인 군사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깊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원래 미국은 1985 년 이래 이미 20 년 가까이 세계최대의 무역적자국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거액의 원조정책을 대외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의 힘이 현재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오해일 것이다. 사실은 역으로 미국은 역사적인 쇠퇴의 과정에 있다.

* * *

실제로, 이러한 패권국가의 쇠퇴는 다른 나라의 발흥을 의미하고, 그러한 파워 밸런스의 변화가 항상 국제분쟁의 배경이 되어 왔다. 1 차, 2 차 세계대전은 확실히 이러한 것이었고 중원에 대한 지방의 발전이 중국의 전국시대를 초래하고, 일본의 수도권 이었던 기내에 대한 지방의 발전이 일본의 전국시대를 불러왔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세계전쟁의 필연성의 근거로서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을 서술했던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였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라크 전쟁 시작 후의 독일과 프랑스의 변모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의를 위하여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외화를 유로로 만들고 또한 석유권리가 있는 이라크를 미국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반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제국주의의 상식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독일과 프랑스를 지지하기 위해 반전을 부르짖은 것은 아니다. 이라크 국민에 대한 미국의 무법적 행위를 용서하지 않기 위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이며, 한쪽의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하여 다른 쪽의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쨌든, 쇠퇴하는 미국과 발흥하는 독일과 프랑스, 게다가 중국. 이러한 세계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파워 밸런스의 변화)이 세계의 재분할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전쟁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배경에 이러한 사실이 존재한다.

* * *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잠시 우리들의 머리를 지배한 세계화의 시대라고 하는 관념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과 인간 그리고 상품이 국경을 넘어서 대규모로 움직이게 되었다. 당연히 이것은 사실이지만, 국경과 국익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국경과 국익을 둘러싼 대립은 한층 더 격렬해 지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관념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불식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확실히, 미국에서 부시 정권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평화가 있었고, 세상에서 운운하고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론은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미국이 다른 방법으로 세계경제를 지배하려고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IMF 와 WTO 의 회의장 앞에는 항상 많은 반글로벌라이제이션을 주창하는 활동가가 모여있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의 평화는 평화적인 제국주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세계의 모든 국민의 평화는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평화는 부시 정권에 의해서 왜 지속되지 못했던 것일까. 그것도 역시 불균등발전=미국의 쇠퇴라고 하는 상황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러하다. 클린턴 정권은 역사의 새로운 단계로서의 세계화를 강한 달러 정책에 의한 미국의 금융적인 세계지배의 전략으로서 추진하려고 했다. 즉,

거액의 무역수지 흑자국제수지적자를 그대로 둔 채 금융의 측면에서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대미유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은 강한 달러의 정책을 불가피 하게 만들었다. 당시 루빈 재무장관이 강한 달러 유도발언을 계속 했던 것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였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 처음으로, 국제자금이 월 스트리트로 모이게 되었고, 따라서 투기꾼이 세계의 기업, 국가의 부침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미국식의 경영을 실행하는 기업은 그들에게 호감을 얻어 자금조달이 가능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조달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의 의향에 따른 국가에는 국제자금이 대여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그렇지 못했다. 미국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 세계적 기준으로서 세계에 강제될 수 있다는 것에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린턴 시대에 8 년간 계속되어 왔던 이러한 전략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길게 지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강한 달러 정책은 미국의 제조업에 충격을 던져주었고, 그렇지 않아도 아시아의 갑작스런 압박에 고민하던 미국의 기초적인 공업기반의 약체화를 가속시켰기 때문이다. 그 기간 동안,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멈추지 않고 갈수록 늘어가기만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략의 변경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부시는 바보이면서 멍청이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어울리지 않는다. 금융제국주의로부터 군사제국주의로의 전략전환은 부시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우연히 초래된 일이 아니고, 세계사의 필연에 의해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어찌되었던 간에, 공업기반의 약체화=미국의 쇠퇴가 미국의 평화를 붕괴시키고, 그러한 결과로 미국의 전쟁, 재분할 전쟁의 시대에 세계를 다시 술렁거리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들이 어떠한 길을 선택할까 라는 것이다. 본서의 한 줄 한 줄의 논의에서 그러한 길을 찾아내 가고 싶다.

한국어판 서문

이 책은 1992년, 일본에서 출판되어 그 후 한국, 중국, 러시아의 삼국에서 번역 출판된 전서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주의」(한국어판은 한양대학교 출판사에서 1999년에 출판)의 속편이다. 그 책은 소련·동구의 붕괴라고 하는 사태를 마르크스주의적=사적 유물론적 해명의 관점에서 저술한 것으로 당시의 근본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과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대답을 저술한 것이었고, 본서도 또한 현재의 근본 문제로서 전쟁 시대의 사회과학적 이해를 과제로 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Lenin 「제국주의론」이 해명한 「세계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과 그것에 따른 세계의 재분할 전쟁으로서 아프간·이라크전쟁이 발발했다고 하는 설명이다. 전서에서는 소련·동구의 사태가 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이론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본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Lenin 「제국주의론」만이 아프간·이라크전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의 과제는 위에서 이야기한 그대로이지만, 이하에서는 그 하나하나의 세세한 주장에 있어서 일본어판 출판 후에 확실하게 드러난 일들을 부연 설명해 두고 싶다.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집필 당시에는 분명하지 않았던 이라크 국민의 점령군에 대한 반격이 하루하루 격화되어 가고, 「전사자」의 수가 「전쟁 기간」의 수를 웃돌게 된 것이다. 미국과 영국군의 바그다드 점령 직후에는, 이라크 군이 너무나도 빨리 전투에서 패퇴하는 것을 보고 미국과 영국군의 전투력이 너무나도 강하게 인식되어서, 매스컴도 당시는 「미국 패권의 부활」을 앞다투어 보도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다른 나라 군대의 협력 없이는 점령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그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게릴라화한 저항 세력의 진압에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이다. 파월 국무장관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은 벌써 개전 전부터 예측 되어 있던 것이었고, 그가 정말로 걱정하고 있었던 것처럼, 전쟁의 성공 여부는 실은 「공격 능력」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점령 능력」의 유무에 있었다. 혹은 좀 더 말하자면 본서가 숫자를 제시했듯이 「점령비용 부담 능력」의 유무에 있었던 것이다. 평론가 田中宇氏는 벌써 일년 전부터 이라크의 치안의 불안정성은 북 아일랜드의 상황과 비슷하며, 따라서 북 아일랜드와 같은 수준인 한 사람의 주민에 주둔군 하나를 미국과 영국군만으로 확보하려고 한다면, 미국 육군은 적어도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전군을 파견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이것은 병사들이 교대 요원 없이 파견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田中宇의 국제 뉴스 해설」 2003년 8월 6 일)

<http://tanakanews.com/d0806iraq.htm>

이러한 사실은 결국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점령 비용의 계산으로부터 나

는 바그다드 함락 직후부터 벌써 이러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독자는 이러한 내용을 본서 제3장에서 확인해 주었으면 한다.

두 번째는 이러한 「미국의 쇠퇴」가 미국의 경제와 관련해서 예측·단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서 출판 후의 미국 경제의 동향을 봄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우선 현재의 달러 하락을 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 군사지출의 확대는 지금 6%를 넘는 재정 적자를 경유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초래하기 때문에 달러의 감가=달러 하락을 초래한다. 즉 이라크에서의 점령 능력 결여의 증명으로서 이 달러 하락 경향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 실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거의 확실하게 된 직후부터 유로에 대한 달러의 감가가 진행되었고, 이라크 점령이 마치 수렁과 같이 빠져들기 시작한 초가을로부터는 약하다 약하다라고 말해지고 있던 일본 엔에 대해서도 달러 하락이 시작되었다. 환율의 높낮이는 단기적인 모든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 일시적 동향으로 경제력의 強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와 같이 군사력 부족→재정 적자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달러 하락이 전혀 축소되지 않는 무역적자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실은 앞의 재정 적자는 더욱 이 무역적자의 원인이 된다) 자체도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좌우되는 환율도, 장기의 관점으로부터는 각국 물가의 평준화를 실현하는 경제 변수이며, 이러한 점에서 무역수지의 적자는 해당 환율로는 타국 제품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 바꾸어 말하면 그 만큼의 경제 효율을 현재 미국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경제의 실제적 모습, 실력에 대한 조정과정으로서의 환율변동이 현재 달러 하락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화폐의 세계」에 속하는 환율 변동에 우리는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현상」의 세계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규정하는 실제 경제라고 하는 「본질」의 반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극히 중요한 사실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때마침 「미국 경제는 강하다」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따라서 그때마다 그러한 견해를 가지는 논자가 생기는 이유 때문에도 중시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미국 경제는 2003년 제 3/4분기, 연율8%를 시작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한 기업의 높은 이윤율도 실현되고 있지만, 이 「고성장」이 고실업의 지속과 무역적자나 재정 적자의 확대를 수반한다고 하는 좋은 면과 나쁜 면 즉 양쪽의 측면을 갖는다는 상황하에서 「좋은」 「나쁜」의 어느 쪽을 중시하는가 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높은 이윤율은 케인즈적인 의미로 총수요>총공급이 되는 상황을 시사하지만, 이것이 무역적자의 누적과 동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그 수요를 국내에서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

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생산=공급의 개선이 없는 경기순환적인 의미의 「고성장」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문제시 하고 있는 수준 정도로의 「경제의 회복」은 아닌 것이다.

*

*

*

또 한가지 이렇게 해서 미국 경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혹은 좀 더 말해서 이 가속화가 이라크 파병에 의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군사→경제의 인과관계는, 한층 더 경제→(그 마지막 형태가 군사적 행동인) 정치라고 하는 인과관계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군사적 수단에 의해서 자국 의지를 타국에 강제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수단에 의한 지배나 주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클린턴 시대에는 투명하고 「Crony 경제」를 허락하지 않는 「미국식 경영」과 인플레이션 억제적인 엄격한 「미국식 재정 운영」을 세계에 강제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되었지만, 지금은 Enron이나 world.com에서 「미국적 경영」의 실태가 폭로되었고, 미국 정부 수뇌의 석유 자본과 Harriburton 등의 건설 자본과의 유착이 세계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부흥 수요의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노골적으로 그 독점과 전쟁 비협력국의 배제를 공언하고 또한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도 「자유 무역 주의」와는 어떠한 관계도, 연관되는 해당사항도 없다. 미국이 일종의 농산물 보호관세로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 보조금도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삭감 노력이 없어져 버렸다. 이들 모든 것은 미국 경제력의 저하가 「글로벌라이제이션」적 방법에 의한 미국 세계 지배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즉 미국 세계 지배의 방법의 전환=군사적 제국주의로의 전환은 경제라고 하는 토대가 변화함으로써 생기는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경제→정치라고 하는 사적 유물론적 법칙의 구체적인 예로서 이러한 변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정치에 있어서의 이러한 경제→정치라고 하는 규정성의 발현은, 중국의 발언권의 확대라고 하는 형태로 본서 일본어판 출판 이후에도 지극히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위해서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를 의도했지만, 그 부작용은 인도 파키스탄의 관계 개선을 거쳐, 결국 파키스탄의 우호국인 중국과 인도의 관계 개선을 가져와, 또한 그것은 한층 더 중국에서 인도까지를 커버해 세계 인구의 과반을 넘는 확대 ASEAN의 성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대항하는 미국의 행동이 반대로 중국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 주된 원인은 그 경제력의 확대이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는 한, 이 이후에도 같은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본서 제 8장에서도 「ASEAN+3」의 성립에 있어서 일본 없이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ASEAN의 판단이 있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 경제력의 확대가 그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하자면, 이러한 점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도 그 속도가 정말로 빠른 듯이 보인다. 북한은 6자 회담의 지속이라고 하는 조건과 반대급부로 중국으로부터의 추가 원조를 획득했지만, 미일의 경제 원조는 축소·정체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원조가 계속되는 것은 그 자체 한국, 북한, 중국의 경제적 일체화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서 출판 이후의 새로운 정보에서는 북한의 경제개혁의 성공, 대중국, 대한국무역의 급속한 확대가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 그 경제력을 무기로 정치적 외교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 그 배경의 하나에는 북한 경제의 동향도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역시 경제가 정치나 외교라고 하는 상부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

*

그런데 이 중국 경제 규모의 확대에 대해서 최근에도 중요한 뉴스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다. 그 하나는 2003년의 일본의 수입 상대국으로서 중국이(홍콩을 제외해도) 최대 상대국이 된 것뿐만 아니라, 수출 상대국으로서도 홍콩·대만을 포함하면 최대의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4년 정도 전에 이 문제를 어떤 장소에서 보고했을 때, 중국+홍콩과의 일본 무역량이 대미 무역량의 몇 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대미 관계의 중요성을 실감한 적도 있었지만, 어느 새인가 중국 무역이 역전을 하게 되었다. 「역전」을 한 중국과의 무역량의 크기는 둘째로 하더라도, 그 변화의 속도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스피드로 미래를 예측해야만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중국의 무역 확대는 단지 일본과의 관계에서만만이 아니고, 전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2003년의 對前年 수입량의 확대금액이 1300억 달러로서 미국의 수입량(1000억 달러)을 넘어섰던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금 세계의 불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고 불황하의 세계를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인 것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에 대한 「성장의 엔진」 이기도 한 것이다.

덧붙여서 이야기 하자면 2003년의 일본 수출 증가액수의 79%는 대 중국 수출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만, 이 액수는 2003년의 GDP 증가액수의 0.95%를 차지했다. 2003년의 일본의 실질 성장률은 3.2% 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003년 경제성장의 30%는 중국의 덕분에 달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수출증가는 수출재화 생산을 위한 중간수요의 증가나 고용증가에 의한 소비의 증가도 수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5%정도의 성장률 상승을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오랜만의 일본의 「성장」은 중국의 성장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로 지금은 일본도 중국 없이는 살아 갈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존재감은 절대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나도 또한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예측한 대표적 연구자로서의 자각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개발해서 1998년에 발표한 경도대학 환태평양 계량경제 모델의 예측 결과에서는 중국의 GDP가 2018년경에는 일본의 GDP를 넘어서고, 2024년경에는 미국을 넘어선다고 하는 결과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측결과는 달러 베이스로 고쳐서 중국의 성장률이 향후 다시 10%를 넘는다는 예측이었기 때문에, 당시 7%밖에 되고 있지 않았던 중국의 성장률을 보고 판단할 경우 과대한 예측을 행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확실히 중국의 성장률은 반년 베이스에서는 10%를 넘는 수준까지 회복해 인민 원의 상승 압력이 더욱 격렬해 지고 있는 상황까지 도달하고 있다. 달러 베이스의 예측으로서는 나의 예측조차 웃돌 기세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다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예측」 해 보고 싶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①현재의 인민 원의 상승 압력을 1971년의 변동 환율제 이행시의 일본 엔의 상황에 비추어 생각 해 볼 때, 향후25-30년, 인민 원이 세배가 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② 원 베이스에서의 7% 성장을 가정 할 경우, GDP는 30년 후에 8배, 25년 후에 6배 가깝게 증대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때 미일 등 다른 지역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2030년경의 일본:미국:중국:그 외의 세계의 GDP 구성비는 대략10:24:38:28이 될 것이다.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세계의 거의 4할을 차지한다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제 규모를 가지는 나라가 우선은 주변 제국에, 그리고 더 한층 좀 더 먼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닌, 이미 「역사의 필연」 이라고 하는 영역에 속하는 현실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어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말한 듯 하다. 하지만 이것을 「중국을 논했다」 라는 식이 아닌 「동아시아를 논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본서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듯이 중국의 외교에는 문제도 많지만 중국 없이는 동아시아가 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을 「타국」 이라고 인식하기 전에 같은 「동아시아의 일원」 으로 인식하고 더 나아가 그 본연의 모습을 주체적으로 인식하여 행동하는, 그러한 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다음세대의 세계가 어떻게 될 까는 중국과 동아시아가 결정할 수가 있다. 그 시대에 단지 중국을 「타국」 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유리한 방책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길을 한국사람들이 일본보다 훨씬 먼저 달리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중국에서는 정말로 많은 한국인들을 그리고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게 되었고, 또한 본서 제 9장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한국의 내셔널리즘도 그것이 상당한 수준의 개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동아시아」를 정말로 하나의 「동아시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와 같이 냉전 구조를 타파할 필요가 있으며 그 열쇠는 한반도의 우호와 통일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본서의 인식이다. 즉 이 문제의 열쇠를 한국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서를 정말로 한국에서 출판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 소망을 이렇게 성취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와 행복한 마음으로 충만한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판에 있어서 번역을 담당해준 표정현군과 많은 부분에서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부경대학교의 고종환 교수 그리고 한울 출판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04년 8월

저자 大西 広

I. 미국의 쇠퇴과정으로서의 군사적 제국주의

제 1 장 미국의 쇠퇴과정으로서의 군사적 제국주의

패권교체기로서의 전국시대

중국에 전국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다. 주 왕조의 말기, 이 주 왕조의 안정된 지배의 시대로부터 진 제국의 국가통일에 도달하는 패권쟁탈의 시대로서, 이 두 개의 안정기(그렇다고 해도 진 제국은 20 년도 지속되지 못하고 붕괴되기 때문에 전한 제국의 성립까지 라고 말해도 좋을 듯 하다)의 사이에는, 패자가 결정되지 못하고 따라서 중화세계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은, 현대 전쟁의 시대도 또한 미국의 평화로부터 다음의 평화의 시대 사이에 위치하는 불가피한 불안정기이다. 전쟁의 시대는 무한적으로 지속되지는 않는다. 다음 평화의 시대로 가기 위한 과도기로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시 중국의 전국시대를 뒤돌아 보자. 여기에서는, 중원 즉 현재의 하남성 남부지역의 발달한 생산력을 기초로 그 당시의 화북지역 일대를 주 왕조가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정을 기반으로 중화세계는 확대되고, 본래의 화북지역의 판도를 넘어서 문명이 확산되었다. 본래 남만의 땅이었던 화남에도 오나라와 월나라의 문명이 성립되고, 산둥지역도 사상가들의 중심지로서 번창하게 되고, 그리고 서방문명의 수입에 적지였던 서방에서는 철의 생산에 주력했던 진이 강성해져 갔다. 또한, 이들의 강화된 지방정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중원의 주 왕조를 무시하고 서로 패권을 경쟁하는 상황이 된 것이 전국시대이다. 제국간의 파워 밸런스의 변화가 패권의 교체를 필연적으로 불러왔고 따라서 패권을 둘러싼 싸움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 그 본질적인 성격이다.

이러한 법칙은 일본의 전국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일본에는 전국시대라고 이해 될 정도의 시대가 크게 2 번 정도 존재했지만, 그 최초의 전국시대는 위지왜인전이 전하는 왜국의 대란인데, 왜왕 히미코가 공동으로 추대 될 때까지, 대륙으로부터 전래된 벼 문화의 급속한 확산에 의해 지역간 생산력 차이가 특히 심했던 시대의 일이다. 그 이전, 후한서의 시대에는 많은 국가가 일본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즈음에 통일된 것이다. 그 야마타이국도 히미코의 사후에 다시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지만, 어쨌든 국내 소국 사이의 파워 밸런스의 변화가 전쟁의 원인이 되었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특정 패권의 성립으로 종결된다. 이러한 과정이 일본에서도 존재했다.

또한, 말할 필요도 없지만, 무로마치 말기의 또 하나의 전국시대도 무로마치=교토에 수도를 둔 시대로부터 오사카, 아즈찌를 거쳐서 에도=동경으로 수도가 옮겨지는 시대의 과도기로서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다. 오오야마토 조정의 성립으로부터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 시대와 대체로 아직 긴끼지방의 생산력이 절대적이었던 시대로부터, 간개 배수사업과 농기구의 발전으로 노우비 평야와 관동지방의 생산력이 보다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러한 패권교체 중에 戰國이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유럽의 자립, 미국의 쇠퇴

따라서 역으로 말하면 지금까지의 미국의 평화는 미국이 특별히 강대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평화이고, 그것은 로마시대에서의 로마평화, 짧은 몽골제국주의에서의 몽골평화가 그러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그 미국은 이전과 같이 강대하지는 않게 되었다. UN 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중국 등이 급속히 성장해 왔다. 미국의 평화는 이러한 증언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의 자립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할 수 있다. 냉전시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쩔 수 없이 높일 수 밖에 없었던 서유럽의 각국들도 의존성이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통일 독일 또한 힘이 현저하게 강해지면서 대미독립을 강하게 실현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제까지의 율적함을 깨끗이 일신하려는 듯이 2002 년의 국정선거에서는 반미슬로건이 세차게 불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프랑스와의 화해와 친선도 진전되고, 그들은 이제 미국이 말하는 그대로 행동하는 국가가 아니다. 지금도 미국의 의존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정부와는 선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에도 물론 나타나고 있다. TV 등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듯이, 프랑스는(미국과 함께) 후세인 대통령과 밀접하고 오랜 기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1974 년 당시 바그다드를 방문해서, 당시의 부 대통령인 후세인과 회담을 하였다. 또한, 그 다음해 파리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핵무기의 연료가 생산 가능했던 이라크에서 문제가 되었던 원자로는 이렇게 해서 프랑스가 매각한 것이었다. 그 원자로는 건설도중 이스라엘이 감행한 갑작스런 폭격으로 재로 변했지만, 하여튼 그 후도 프랑스와 이라크의 관계는 지속되었고, 전투기가 이라크에 매각되었으며, 또한 석유권리가 프랑스에 제공되었다. 바그다드 남동에 있는 나르 · 우루무 유전과 마지는 유전의 권리는 사실상 프랑스에 건네지게 되었으며, 그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프랑스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계속 반대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라크를 둘러싼 제국주의국가간의 쟁탈전으로서 전쟁과 反戰이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도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인 것을 잊어버리면 이라크 공격개시후의 프랑스의 갑작스런 태도 돌변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프랑스에 대해서는 구 아프리카 식민지에의 개입강화가 전해지고 있는 것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중동지역에의 개입을 강화하는 한편, 프랑스는 알제리아와 가봉, 카메룬 등의 산유국에 개입을 강화하고 있고, 또한 코지브아(Côte d'Ivoire)의 내전에 대해서도 좌파의 존스팽 정권으로부터 우파의 시라크 정권으로의 정권교체와 함께 당초 불개입 정책을 표명하고 있었던 것이 개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는 미국의 일극 지배의 구조로부터 각국 열강의 분할지배의 구조로 크게 변모해 갔고, 이러한 움직임을 미국은 용인하고 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축소와

일본의 유사법제의 추진 등도 같은 문맥에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쫓점은 현재 미국의 일국주의가 그 강화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세계의 공동통치로부터 분할통치로의 변화의 귀결인 것이다. 시라크 대통령의 말로 설명하면, 다국화의 세계, 정치경제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제국주의의 분할지배로 나아가는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은 냉전의 붕괴로 그 역내대립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좀 더 자립한 제국주의로서의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슬람 제국의 자립

그러나 미국의 쇠퇴과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가고 있는 것은 유럽뿐만 아니다. 중국 등 동아시아의 급성장도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 책의 후반부에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이번의 이라크전쟁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중요요소로 이슬람제국을 들 수 있다.

실제, 원래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일치단결하여 미국에 대항한 아랍제국도, 그들이 아랍제국다운 범주를 정말로 성립시킨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다. 소련이 건재했던 시절에는 모든 국가가 친소 아니면 친미의 어느 쪽에 분류되는 상황이었고, 아랍 국가로서의 통일성은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 예멘과 시리아, 그리고 리비아는 친소로,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은 친미로 분류되었다. 또한 이집트와 같은 지역대국까지도 나세르 시대에는 친소, 사다트 시절에는 친미라고 하는 우왕좌왕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그 시대는 같은 이슬람 제국이 미국과 소련의 대리인으로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그러한 일이 중동에서 벌어졌던 것일까. 그 답은 그들 제국도 현재의 아프리카 제국과 같이 자립할 경제적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미소의 어느 쪽을 선택해서 원조를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에 있다. 혹은 달리 말하면, 이러한 경제기반의 취약성을 석유 쇼크라고 하는 자원 내셔널리즘이 해결해 준 이후 처음으로 그들의 자립에의 길이 열려진 것이었다. 가장 빠르게 미소 양국에 반기를 들었던 이란도 역시 산유국으로서 한번에 경제기반을 얻었던 나라 중 하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은 단순히 유럽과 미국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들 선진제국과 아랍 등 산유국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기반의 강화가 서서히 정신적 기반으로서의 이슬람교에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그것이 크리스트교 · 유대교 동맹의 리더인 미국으로부터의 자립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중국 신강성 자치구의 무슬림

그런데, 이 이슬람 문화권은 서쪽은 포르투갈의 강가에서 시작하여, 동쪽은 대륙중부의 중국 서북부,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서 끝난다. 민족적으로는 넓은 의미로서

투르크 족에 속하는 이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이슬람 교도로서의 민족적 자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그 지역이 나의 연구 분야인 것에 의해 차츰차츰 더 깊게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의 연구실에는 그러한 위구르의 연구자가 3명 소속되어 있다. 그 중의 한 사람의 이름은 타리반의 지도자와 같은 오마르, 또한 다른 한 사람은 모하마드이다. 그리고 오늘이 우리들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연구자들을 파티에 초대하고 싶다고 한 날은 라마단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중요한 행사의 날이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과의 경제적, 문화적인 근접성도 중요하다. 그 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장 자치구의 서쪽 끝의 카슈가르의 호텔에서는 파키스탄으로 가는 버스가 있다. 나는 실제로 그 호텔에 숙박하여 그 버스를 보았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제 4의 민족 우즈베크 민족은 미국의 연구자에 의하면 위구르 민족과 동일 민족이라고 한다. 따라서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들이 정말로 깊은 우려의 의사를 보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나의 연구실의 위구르 민족 연구자도 정말로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2001년 9월 11일 당일, 신장 자치구를 대표하는 국립대학 신장 대학 경제관리학부의 창립기념 심포지움에 참가하고 있었고, 테러의 소식은 그 심포지움을 하기 위해 전체를 빌린 호텔의 TV를 통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보도는 뉴욕에서 5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었고, 다소 사실과는 다르지만, 알 카이다가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도 거의 동시에 보도되었다. 이것은 정말 커다란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알 카이다의 활동범위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은 테러를 기본으로 하는 독립운동을 매년 반복하여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부의 지역에서는 한민족문화와 자신들의 문화와의 상이한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젊은 여성은 스스로 부르카(Burka)를 몸에 걸치고, 젊은 남성들은 이슬람 회귀를 외치고 있다. 자치구에서는 그들을 타리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 아닌 젊은이들에게 퍼져 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어찌되었던, 이슬람 교도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높여가고 있는 민족은 중국의 서북부에까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넓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의 사람들을 점점 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침 전환

또 한가지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 하고 싶은데, 동쪽 끝의 이슬람의 나라 인도네시아의 경우이다. 세계최대의 이슬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나는 정확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창일 때 국제협력 사업단의 사업으로 단기적으로 파견되었던 일이 있었다.

이 때는 더욱이 라마단이 절정기에 이르렀던 때였고, 그러한 때에 아프가니스탄에의 폭격을 계속해도 좋을까에 대한 커다란 논의가 세계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었다. 어쨌든 내가 머물던 호텔 옆의 영국 대사관은 철조망으로 주위를 두르고, 다소 떨어져 있던 미국 대사관도 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을 영웅으로서 묘사한 달력과 브로마이드가 길거리에서 팔리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현 대통령 메가와티에 의해 정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던 와히드 파의 이슬람 교도가 그러한 정치적 움직임을 만들었던 것이었지만, 어쨌든 이 압력으로 당시 메카와티 대통령은 라마단중의 폭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 압력으로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세웠던 정권의 대통령까지가 이러한 대미 비판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의 여기저기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대통령을 만든다는 미국 전략하에서, 필리핀에서는 아로요를, 아프가니스탄에는 카르자이를,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메가와티를 수반으로 앉혔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슬람 교도로서의 자각을 높이는 국민의 앞에서는 그러한 자세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한 것으로서 좋은 예가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 대통령의 방침 전환인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친미정권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미국의 기대를 저버려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슬람의 지도자인 와히도 師의 이전 정권은, 그것은 수하르트 체제의 해체를 목적으로 한 미국과 IMF 에 의한 민주화와 경제개혁이 가져온 결과였다.

그러나 그런 수하르트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주은래와 네루, 티토, 나세르, 엔크루마와 함께 제 3 세계의 리더로서 활약했던 스카르노, 즉 용공의 스카르노를 싫어했던 미국이었다. 수하르트 장군에 의한 1967 년의 쿠데타 이후의 인도네시아는 잠시 친미정권으로서 존재했고, 그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대량의 ODA 가 투입되었다. 이번에 나를 파견했던 국제협력사업단 중에서도 그 인도네시아 사무소가 지금도 해외에서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의미에서 몇 번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승리를 거두어 왔다. 그렇지만, 그것과 동일한 수만큼 패배를 겪어왔다. 최후까지 미국의 뜻대로 행동해 주는 정권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페르시아 전쟁의 교훈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정권의 변천에 내가 생각이 미친 것은, (이 때 인도네시아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나는 이란과 이라크에 대해서 논의했던 적이 있다. 패권, UN, 민족, 개인(유물론 연구협회 편, 사상과 현대 제 25 호, 1991 년)에 대한 논고에서 다루었고, 이것은 그 후에 일부가 UN PKO 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岩井忠熊・望田幸男・山口正之編의 국제공헌론과 미국의 신전략 대월서점, 1993 년도에 다시 게재되었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중동에 군사대국이 많은 것은 구미와 일본 및 소련의

개입정책 때문이다. 처음에는 미국이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란의 팔레비 친미정권에 다액의 군사원조를 했지만, 그 정권이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해 79 년의 이슬람 혁명으로 무너지자 이슬람 원리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에는 소련과 협력해서 근접국가인 이라크에 대량의 원조를 하게 된다. 전차의 대부분은 소련으로부터의 원조와 구입, 전투기는 소련과 앞에서 이야기한 프랑스에서 수입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문제가 되었던 화학병기는 미국이 수출을 하였고, 독일의 기업이 생산을 담당하였다. 또한 그 화학병기를 중동의 각국 수도에 도달할 수 있게끔 소련제의 스커드 미사일을 개조한 것은 벤츠 산하의 뎀사슈밋토 베르코 브로무 라고 하는 독일의 군수산업이었다. 그러나 이라크도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이란과는 정전을 하고, 이번에는 쿠웨이트로 침공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대량 군사원조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이 내가 이전에 써 놓았던 원고의 일부 요약이지만, 여기에 그 후의 현실을 좀 더 덧붙이자면,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지원을 받았던 사우디아라비아도 어느새 미국을 멀리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OPEC 에서는 구미의 이익과 다른 독자의 행동을 반복했고, 2001 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번의 이라크 전쟁에서도 대미 협력을 거부하고, 아랍 제국 연합에서는 이라크 지지를 명확히 표명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은 그 지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이란으로부터 이라크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더 나아가 그 앞으로 결국 장기에 걸쳐 후퇴를 계속하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친미국가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국의 영향력이 장기적으로 후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의 원인은 이미 이야기 했듯이 이들 나라들의 석유수입의 증대와 그것에 기반으로 한 경제적 자립일 것이다. 그리고 또한 미국측에서도 원조를 할 경제적 여유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NEW-ECONOMY 론에서 거론되고 있듯이 미국의 재생이 강조되어 논의되어 왔지만, 그것이 일종의 거품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전술의 인도네시아 방문시 에도 생각했던 것이지만, 약 6 년 반전, 인도네시아에 체재하고 있던 때, 외화는 미일기업을 의미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 계열 기업의 존재는 없어지고, 한일기업이 눈에 띄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게다가 중국기업이 참여를 도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의 이러한 경제력의 장기적 후퇴는 타국에의 영향력을 장기에 걸쳐 저하시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이들 나라의 이슬람교 국가 혹은 아랍 국가로서의 자각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즉, 그 어느 나라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그러한 것이 그들 나라를 친미적으로 만들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확실히 이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에 원래부터 교리로서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평등주의 사상이 IMF 등에 의한 경쟁 지상주의의 강제에 대해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도네시아에는 확실히 그 요소가 강하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미국의 100 년 가까운 번영에 있어서 유대인 자본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면 미칠수록, 그것 때문에 유대인의 이익을 상대화하지 못했던 미국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이슬람 국가와 아랍국가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한계가 나타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없을까. 최근 부시 정권의 움직임은 이러한 비유를 인식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이스라엘의 무법을 억제하는 입장에 서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디까지 성공할 것인가. 그러한 부시 정권의 실시 강도에 따라서 이슬람국가, 아랍국가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좌우된다. 앞으로의 동향이 주목된다.

● 아프가니스탄의 반(反) 탈레반 각파(各派)

통 칭		민족	그룹의 정식명칭 등
북	a)라바니 (Rabbani) 전(前)대통령파	Tazik 인	이슬람 협회
부	a')마스드(Massoud) 장군파	Tajik 인	전 이슬람 협회
동	b)더스탐 (Dostam) 장군파	Uzbek 인	민족 이슬람 운동
맹	c)카림 · 하리리파 (Karim · Hariri)	Hazara+Pashtun 인	이슬람 통일당
	d)라술 · 사야후파 (Rassul · Sayauf)	Hazara+Pashtun 인	이슬람 통일체
Cyprus · 그룹		Hazara+Pashtun 인	(여기도 이슬람 원리주의)
Peshawar · 그룹		Pashtun 인	이슬람 민족전선
전(前)국왕파		Pashtun 인	

이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후에 탄생한 아프가니스탄의 잠정정권이 언제까지 친미적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관련되어 있다. 잠정정권의 의장(수상)이 된 사람은 미국에 살았고 또한 거기에서 시민권까지 얻었던 친미파의 카르자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었고, 북부동맹으로부터 신정권에 외무장관, 내무장관과 부의장을 배출한 구 마스드 장군파도 이슬람의 색채는 옅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들을 제외한 모든 타리반 세력이 이슬람교의 깃발을 내 걸었던 정치세력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부동맹을 구성하고 있던 원래의

4 개의 세력은, 이슬람 협회, 민족 이슬람 운동, 이슬람 통일당, 이슬람 통일체 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북부동맹, 전 국왕파 이외의 두개의 세력도 이란파의 원리주의와 반 이란파의 이슬람 민족전선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만이 이슬람교 세력인 것이 아니고, 반 탈레반 세력의 대부분도 또한 이슬람교의 정치세력이다. 비록 전 국왕파가 정치의 중심에 앉았다고 해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가 혹은 그 자신이 이슬람의 색채를 강화하지 않을까. 그러한 현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라크에서도 같은 모습의 친미정권이 만들어졌었다. 그러나 시아파나 이라크 공산당을 포함한 대다수의 반미세력을 가진 이 나라의 정권이 언제까지 친미인 상태로서 유지될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의 전쟁으로 미국의 권리가 부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전쟁은 미국의 쇠퇴라고 하는 문맥에서만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부기)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예상외로 좋은 점, 그 배경에 이라크 국내의 반 이란의 시아파 세력을 완전히 억제하고 싶어하는 미국, 이란, 양 정부간의 공통이익이 있다는 것이 차츰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79 년 이래, 미국외교의 흐름에서 봤을 때, 미국이 드디어 이라크에 내려졌던 이슬람 국가와 접촉할 수 없다고 하는 봉쇄정책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을 직접적으로 적대시하고, 이라크를 이용해서 군사공격을 반복했다. 그러한 것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분도 포함해서, 미국측의 정책변경에 의해 미국과 중동제국과의 사이에 일정한 관계개선도 앞으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에 즉 미국이 중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동안에 다른 각국에서의 미국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다.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중남미에서도, 이라크 전쟁의 직전 브라질에서는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고, 페루, 그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정권이 대중화 되어 가고 있다.

제2 장 전쟁으로 향하게 하는 미국의 국민의식

반전운동의 고조와 그 한계

이번의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반전운동은 베트남 전쟁 이래 최대규모이다. 특히 베트남 전쟁의 경우는 전사자가 몇만 명이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반전여론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전쟁 이전에 반전운동이 최고의 절정을 맞이하였고, 그런 의미에서도 획기적인 것이었다. 나 자신도 2001 년 11 월 뉴욕의 학생중심 집회에 참가한 것을 비롯해, 2002 년 1 월 18 일에 워싱턴에서 열린 전미집회, 2 월 15 일에 뉴욕에서 전개된 전미집회에 참가, 또한 개전 전후의 몇 개의 작은 집회에 참가하여 그 운동의 확산을 실감하였다. 대규모 집회의 참가자수(주최자 발표)를 보면, 2002 년 1 월의 워싱턴

집회가 20 만 명, 2 월의 뉴욕 집회가 50 만 명으로 확실히 그 범위가 넓어졌으며, 개전 직후의 뉴욕집회는 25 만 명이었지만, 그 때는 전미집회가 아니고 전미 각지에서의 동시 집회였다. 특히 2 월의 뉴욕집회의 직후에는 지하철 차내에서 일제히 반전 배지가 눈에 띄었고, 적어도 뉴욕의 공기는 확 바뀌었다. 나는 태어나서 무수히 많은 집회에 참가했었지만, 이렇게 한번에 공기가 변한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또한, 이러한 숫자적인 운동의 확산을 넘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은 그 참가자의 멤버들이었다. 특히 2 월의 뉴욕집회의 참가자의 얼굴에서 그러한 것을 강하게 느꼈다. 왜냐하면, 아직 일부 활동가들의 집회라고 하는 인상을 가진 11 월의 집회, 참가자가 일반시민에까지 확대되어 있다고 해도 흑인이나 중국계가 거의 없었던 1 월의 집회와는 달리, 2 월의 집회에서는 운동의 주최자들이 항상 그 조직화의 곤란성으로 고민하던 흑인과 중국인의 참가도 한번에 해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변화의 빠른 속도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놀랐다. 개전 직후에 조금 회복세를 보이던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이러한 운동의 결과 50%까지 저하시킬 수가 있었다.

그러나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관적일 수 만은 없다는 것이 지금도 나의 솔직한 생각이다. 그런 이유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마스크에 쉽게 영향을 받는 미국인에 대해서, 극히 의도적인 정보조작과 운동에 대한 방해가 이루어졌고, 또한 평균적인 미국인의 국제이해의 수준에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보조작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2 월의 뉴욕집회에서도, 이라크가 캐나다를 경유해서 집회조직을 위해서 스파이를 보낸다고 하든가, 거꾸로 그 주에 뉴욕의 지하철이 테러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하든가 등등의 정보가 흘러나왔다. 동시테러 이후 미국정부는 정보 통제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조작은 급속하게 눈에 보여왔다. 또한, 집회방해에 대해서도, 같은 날 학생들의 데모가 금지되었고, 종료 직전에 다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집회 참가자가 체포되는 등의 놀랄만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런 체포의 모습은 내가 아는 사람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정말일 것이다.

그리고, 평균적 미국인이 국제감각이 어느 정도 무딘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본부가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지오 그래픽 협회가 작년 세계 9 개 나라의 학생에게 탈레반과 알카에다(Al-Qaida)가 거점으로 하고 있는 국가를 물었는데, 미국의 정답률이 최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의식조사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멕시코, 스웨덴을 대상으로 18-24 세의 학생들에게 물었던 것인데, 스웨덴과 영국은 80%이상의 정답률, 일본에서도 70%이상의 정답률이었지만, 미국은 58%에 불과했다. 뉴욕과 펜타곤이 테러공격을 받고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냈던 나라의 학생들의 이 정도의 지식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첨언하면, 여기에서 알게 된 친구는 일전에 어떤 미국인이 일본을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실에 상당히 놀랐다고 한다. 이러한 의식의 빈곤에 의해 평균적인 미국인의 의식수준의 정도를 알아야만 한다. 이라크전이 정확히 최종적인 순간에 임박해 질 무렵,

이라크 국민이 전기와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또한 시민의 자폭 테러가 끊이지 않던 절정기에, 내가 있던 뉴욕에서는 마쓰이의 만루홈런으로 화제가 계속되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자국의 전쟁에 무관심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중간선거에서도 참전문제는 논의 되지 않았다

따라서, 내가 미국의 여론으로서 중시하고 싶은 것은 표면적으로 두드러진 반전집회나 데모가 아니고 보다 광범위한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선거에서의 결과이다. 일본에서도 60 년 안보조약은 세기의 커다란 투쟁으로서 역사에 남아있지만, 그 당시의 자민당의 득표율은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집회나 데모의 인상과 실제 국민의 의식과는 크게 다를 수 있는 것이며, 우리들은 보다 현실에 가까운 국민의 의식상황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는 이라크 전쟁이 정권에서 논의되던 한창 때에 행하여졌던 2002 년 가을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역사적 승리를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될 듯하다. 이 선거는 선거에 앞서서 이미 국제연합에서의 외교를 추진하고 있던 부시 대통령에게 국제연합 결의가 없어도 좋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최초의 정치적 사건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거는 이번의 전쟁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이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에서는 51 석을 확보, 하원에서는 229 석을 확보하고, 연방의회의 상하양원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공화당은 대통령을 배출하고 난 후에도 중간선거에서는 이제까지 항상 패배를 맛보았지만, 그러한 불행을 처음으로 깨버린 것이다. 전쟁이 입에 오르내리자 단숨에 다른 말은 하지도 못하게 되었던 미국인 다수파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선거에서 가장 문제였던 것은, 전쟁의 문제가 민주당과 다른 정당으로부터 거의 쟁점으로서 논의되지 않게 된 것이었다. 민주당의 대다수까지가 대통령에게 참전의 자유재량을 준 법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클린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그들 민주당 의원의 대부분은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을 경험했던 인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상원의원으로서 유일하게 한 사람 이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미네소타 주 의원의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패배하였다. 이 선거에는 몬데르 전 부 대통령을 지낸 거물을 내세웠지만 패배를 하였고 그런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된다. 선거에서 전쟁을 문제 삼아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혹은 민주, 공화당 이외의 소수 정당에서조차도 선거 정책에 참전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일한 예외는 녹색당이지만, 뉴욕과 같은 진보적 지역에서조차도 그 득표율은 1%에 불과했다. 또한 전국 수준에서는 당연 반전을 부르짖어야 할 무정부 자본주의당도 그 선전책자나 연설에서 반전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없었다. 9·11 후의 그러한 이상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뉴욕주 중간선거의 미크로 분석

그렇다면 의회에서 대항세력이 되어야만 하는 민주당의 존재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을 단지 윤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닌, 선거에서 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거의 동수의 연방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 존재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를 뉴욕주의 중간선거 결과로부터 살펴보고 싶다. 이를 위해 작성한 것이 다음 두개의 표이다.

● 표1 뉴욕주 중간선거 정당별 득표율(단위:%)

	민주당	공화당	타정당
주지사선거	33	50	17
주 회계 검사관선거	50	47	3
주 사법장관선거	66	30	4
연방하원의원 선거	68	37	3
주상원의원 선거	61	44	5
주하원의원 선거	74	30	5

● 표2 뉴욕시 지역과 비 지역의 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 획득수(단위:의석수)

	뉴욕 지역 의석 획득수			비 뉴욕지역 의석 획득수		
	민주당	공화당	합계	민주당	공화당	합계
연방하원의원선거	13	1	14	3	3	6
주상원의원선거	22	3	25	1	12	13
주하원의원선거	66	0	66	11	13	24

이 표로부터 일본에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연방의회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아직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 1 에서 보는 것처럼, 주지사 선거에서는 역사적인 대패를 하고 있지만, 보다 하위의 선거일수록 민주당의 득표율이 높아지고, 예를 들어 뉴욕시에 한정해서 보면 연방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의석, 주의 상원선거에서는 3 개의 의석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차지하고, 주 하원 선거에서는 전승하고 있다. 표 1 에 있는 것처럼, 주 지사선거 등에서 공화당에게 투표한 것 같은 유권자가 다른 선거에서는 같은 투표소에서 민주당의원에게 투표를 하고 있다. 표 1 의 세 개의 의원선거의 숫자는 각 정당이 후보자를 세운 선거구에서의 숫자만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수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보류했던 공화당의 실제 득표율은 더욱 낮아진다.

물론, 이것은 뉴욕주만의 숫자이고 연방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표 2 에서 볼 수 있듯이 대도시와 그 이외의 민주/공화의 파워 밸런스의 차이로부터 상상 가능할 것이다.

뉴욕지역에서 압도적인 힘을 의원선거에서 보이고 있는 민주당도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50 대 50 혹은 완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이해한다면, 확실히 연방의회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표에서 대도시와 비대도시의 비율을 역전시키면 연방의회선거의 전국적인 경향은 이해될 수 있다. 즉 말하고 싶은 것은 표에서도 전국의 경향은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보다 하위의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는 경향 자체를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각론=민주당, 총론=공화당의 관계

그렇다면 왜 이러한 뒤틀림 현상이 생긴 것일까. 그 점을 생각하는데 시사적인 것은 어떤 지역신문에 써 있던 다음과 같은 민주당 비판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기사에 의하면 지금도 민주당은 흑인, 노조, 전미 여성연맹의 특정의 이해 그룹의 대변자 이상의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한편 공화당은 애국주의로서 득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상당히 진실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서 재정적자의 문제를 둘러싸고 선거전에서 양당의 정책대결을 생각해보자. 뉴욕주나 시의 재정적자는 지하철의 가격인상이나 공공도서관의 개관일의 축소, 소방서의 폐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심각하지만 완전소선거구제로 지방의원이 선출되는 경우, 그 의원이 그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유일한 사람이 된다. 따라서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을 위한 재정부출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결과적으로 보다 특정의 이익대표적인 민주당적인 인물이 당선되게 된다. 그렇다면 한편 전체로서 주나 시의 재정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 경우, 재정 삭감이나 증세를 논의할 수 밖에 없고 그 때에는 공화당적인 주장이 당연 힘이 실리게 된다. 총론은 공화당에 의해 주장되지만, 각론의 부분에서만은 시민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의 자세를 취한다. 그와 같은 구도로 이해될 것이다. 상술의 뒤틀림을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해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의 문제는 미국 정치에 있어서의 이라크 공격의 위치로 돌아가지만, 이 이해의 연장에서는 이라크 공격은 재정적의 문제와 똑같이 총론으로서의 주장이 되어버린다. 베트남 전쟁 때는 전쟁의 장기화와 몇만 명이라고 하는 전사자의 나오는 상황에서 총론은 어떻고, 각론은 전쟁의 지속을 지지 불가능하다고 여론이 움직였지만, 그러한 상황이 없는 조건에서는 전쟁은 지구 저쪽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다. 혹은 동시테러로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미국인에게 있어서는 악마를 물리친다는 대의의 방향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반전은 총론의 형태로서는 아직도 압도적으로 소수파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역시 여기에서도 결국은 여론의 기본이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대전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돌고 돌아서 문제는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간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도 호전적인 국민의식이 형성되어 버렸단 말인가 라는 문제로 말이다.

전쟁동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바로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호전적인 정치가나 재계 등이 만들어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번의 9·11 사건도 사전에 정부는 어딘가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해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또한 그 결과로서 약했던 부시 정권의 기반이 한번에 강화되어 졌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또한 계획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부정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험란한 전략과 허술한 대응만으로 전쟁의 발발이 설명된다고 한다면 전쟁은 사회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레닌은 전쟁을 필연으로 생각했다. 특수한 전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좀 더 사회의 저 깊은 부분에 원인이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뉴욕에서의 체험을 하나 더 얘기하고 싶다. 그것은 베테랑의 날로서 퇴역병사가 티파니 혹은 트럼프 타워로 유명한 오번지 길을 퍼레이드 하는 날(11 월 11 일), 우중에도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약 2 시간의 행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처음에는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그린베레, 해안 경비대의 현역부대가 행진했지만, 그 뒤에 2 차 세계대전 참가자, 한국전쟁 참가자, 베트남 전쟁 참가자, 걸프전 참가자 그리고 이어서 게이의 대열과 장애자의 대열, 한국인, 인도, 아일랜드, 대만 사람 등의 민족 대열이 있었고, 조금 감동을 받은 것은 반전의 프랭카드를 높이 든 대열도 있었던 것이다. 반전의 대열은 예를 들면 이라크 공격은 또 다른 베트남 전쟁이다 혹은 베트남전에 참가한 나의 아버지는 이라크 공격에 반대한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퍼레이드에서 그러한 반전 대열을 하는 것이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쟁참가자(아니면 그 가족)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당일 받았던 무료의 종이에선 우리들은 죽은 영웅들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글자에 커다란 성조기가 옆으로 길게 그려져 있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은 항상 전쟁동원의 수단이 되어 있다. 그리고 보다 충격적이라고 느낀 것은 퍼레이드의 각 부대 사이에는 근처 고등학교의 밴드부와 치어 길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애국주의 이벤트에 학생들이 수 천명 동원되고 있었다.

또 하나, 같은 5 번가에서 올해 3 월 17 일에 거행되었던 성 파트리스의 날에서의 아일랜드인의 퍼레이드도 극히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 실은 그 날은 미국과 영국이 국제연합 안보리에 최후의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면서 결국 제출하지 않은 날이었지만, 그 5 번가는 정확히 그 국제연합의 빌딩의 근처를 지나는 거리이다. 거기가 아일랜드인의 축제로 칭하여 지면서 실제로는 군대가 확보하는 행진과 그 길가에는 성조기가 가득 채워지는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예년도 그랬는지 아니면 올해만 특별했던가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장소에서의 군대의 퍼레이드는 정말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길가에는 이것은 전쟁에의 정치적 선전이라고 쓴 간판을 들고 있던 사람도 있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고 보기도 선전이라고 생각되는 이벤트가

이런 식으로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일본에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장소와 방법으로 마치 그물과 같은 여론 조작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미국 아이덴티티로서의 선악 이분론

이러한 전쟁동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미국에는 있다. 그러나 건국 이래 청교도의 전통을 가진 미국은 그 선악 이분론적인 발상으로부터 자기의 세계에서 존재의의를 정의의 편이라는 것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호전적으로 만든다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목적으로 내가 읽은 아래와 같은 2 개의 책은 이러한 문제에 너무 적절하게 시사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하나는 미국인 자신이 자신의 나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했던 시모아 릿셉의 저서 미국예외론 (명석서점, 1999) 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문학의 깊은 곳에 잠복하고 있는 심층 심리를 예리하게 해명한 龜井俊介의 허클베리 핀은 지금 (강담사 학술신서, 1991 년)이다. 어느 쪽도 미국의 건국이 청교도에 의한 것이고 인습적인 카톨릭으로부터, 나라에 속박되어 있는 각국의 국교회로부터 자유스러운 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토착적인 전통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건너온 민족이 다양각색 이라는 점이 합쳐져서 그러한 청교도의 특질인 순수성이 국민성으로 순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인은 어떠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 존재해도 일본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있다고 해도 단순한 기원론)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국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 ××인, △△인이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즉, 미국인으로서는 성립하려면 독자의 정체성 그것도 윤리적인 관념을 포함한 그 형성이 필요 불가결하다. 그리고 그것이 청교도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덧붙여서,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와 같은 카톨릭 신자의 대통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카톨릭은 유럽의 그것과 달라서 상당히 신교에 가까운 교양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제까지는 거의 위의 두 책이 동시에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평가에서 보듯이 역시 미국인과 일본인과는 다르다. 전자의 릿세프는 이러한 순수함을 평가했고, 후자의 龜井氏는 타자원리, 타문화 이해의 복안성의 결여를 문제로 삼고 있다. 龜井氏의 주장을 빌리면, 술은 나쁘다 라고 하면 금주법을 제정하고, 담배가 나쁘다고 하면 그 제한을 법률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한 선과 악을 강하게 구별하는 태도는 외교정책에도 반영되어, 이번의 이라크 전쟁은 악의 축을 때려 부순다 라는 종교적 심정으로부터 정당화가 이루어져왔던 것이다. 미국에서 들은 9.11 1 주년 추도식에서의 대통령 연설도 종교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었다. "God Bless America"를 부르고 전쟁에 몰두하는 모습으로부터는 종교적인 정의와 순수함으로 자신을 정당화

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조차도 불안하게 된다는 어떤 국민적 정신상황을 느끼게 한다.

미국인의 가치관에서는 2 번의 세계대전도 한국전쟁도 베트남 전쟁도 Grenada 의 미국 개입도 그리고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대한 개입도 그것들은 전부가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인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국은 민주주의의 편에 서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강대국이 아니면 안된다 라는 강박관념

또한 미국의 경우, 이 정의감에 정의는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관념이 더해진다. 미국의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항상 정의가 이기고, 악은 진다. 즉, 세계가 선악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선은 승자이어야만 한다. 선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미국인에게는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다. 그것도 그럴 만 한 것이 선악이 확실히 나누어져 있지 않고, 또한 그것이 쉽게 바뀌어지기 때문이다. 화요 서스펜스에서는 범죄자는 최후에는 울면서 반성과 회한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전부 죽음을 당한다. 악은 반드시 응징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응징하는 용기 있는 사람은 항상 승자다운 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선악 이분론 위에 놓여져 있는 종교적 사명감의 귀결인 것이다.

실제,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냉전에 살아남아 또한 2 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전쟁을 제외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정악의 사명을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들 자신에게 믿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이러한 대국 의식은 전략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 그들 미국인을 그렇게 믿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승리한 모든 전쟁을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라고 단순하게 파악하고, 그 모든 것에서 미국이 민주주의 편에 있었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한, 그 의식은 점점 더 고집스러운 것이 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자기를 납득 시키려고 하는 심정은 이러한 위대한 미국이 인위적인 것 없이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는 상황하에서는 (강박관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달러가 엔에 대해서 1/3 로 떨어지고 국내시장이 일본에 그리고 중국에 석권되어 버린 상황에서는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으로도 생활이 좋아지지 않는다면(90 년대에 실질임금은 떨어졌다고조차 이야기 되고 있다) 자신감은 흔들린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 대중심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미국을 더 한번 믿게 해 줄 다양한 방법인 것이다. 이전 아폴로 13 호라는 영화가 상영되던 때, 나는 그러한 대중심리의 존재를 확신했지만, 그 때의 상황이상으로 사태는 악화되고 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져 사라졌다고는 해도 그 대신 아시아의 대국 중국의 대두가 현저하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란이나 아랍 국가 등의 이슬람 제국이 미국을 멀리하는 경향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불안에 커다란 타격을 가한 것이 9.11 사건이었다. 절대적으로 본토는 공격 당하지

않는다 라는 신화와 함께 미국은 정당하다 라는 신화도 동시 붕괴되어 사라지고, 그만큼 이러한 불안을 해소시켜 줄 구세주를 미국은 원하고 있었다. 바보이면서 멍청이라고 때로는 야유를 받는 부시의 연설이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도 이러한 대중심리가 배후에 있었던 것이다.

소련 붕괴후의 세계의 대항구도를 문명의 충돌로 설명했던 현재 미국의 외교전략을 근본적으로 규정한 헌팅턴 하버드 대학교수는 내가 미국에서 소속되어 있던 대학에서 강연했을 때, 그는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친구가 적은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고이즈미 총리가 미국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북한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당황스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것도 또한 친구를 잃어버린다 라는 공포의 하나로서 이해 가능할 것이다. 독일과 한국의 선거에서 반미적인 선거 결과에도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① 지금까지 대국으로서 있던 것 ② 대국의 지위를 계속 상실해 간다는 것이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재인식으로서의 군사제국주의 대중심리적 조건이 되고 있다. 혹은 좀 더 말하자면, 세계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이 모든 나라간의 모순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서술했던 세계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세계 재분할 전쟁, 이런 법칙이 미국의 쇠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제3장 전쟁국가의 경제적 기초

「군수산업을 위한 전쟁」설의 불충분성

그런데, 실은 전설의 총괄로서 서술한 제국주의론적인 전쟁의 이해는 그렇지 않은 다른 이해와 이론적인 대결을 필요로 한다. 어떠한 이해가 틀린 것일까. 그 몇 개를 차례차례 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 첫 번째가 전쟁이 일어나고, 혹은 유사법제 등의 전쟁준비가 기도될 때마다 언급되는 「군수산업의 이익을 위해」라는 이해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일본의 유사법제의 계획이 GDP 대비 1%의 산업에서 의사결정 된다고 하는 것과 같지만, 아무리 해도 GDP 1%로는 총자본의 의지로서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 혹은 좀 더 이야기 하자면, 일본에서 GDP 1%의 군사비의 반은 자위대원의 「식량비용」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이 1% 중에서 순수한 「군수품」의 비율은 적어진다. 실제로는, 이 「식량비용」 이외에도 기지나 대원들의 막사 등 통상의 건설수요를 빼면, 아마도 군함과 전차 등 「군수산업」의 공급은 GDP 의 비율로 0.3%에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쟁인가 혹은 평화인가를 둘러싼 일본정부의 전략결정에 있어서 군수산업이 결정적이라고 하는 이해는 잘못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일본에서의 경우이고, 미국의 경우 부친 부시의 시대는 약 6% 못 미치는 수치였고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는 3%로 저하되고 있다. 그

때문에, 미국에서 「총자본에 접하는 군수산업의 비율」 즉 「총자본의 결정을 군수산업이 좌지우지 가능한 정도」는 일본의 몇 배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의 준비 등으로 2002 년의 군사비가 35 년 만의 증가 (전년대비 9.3%)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총자본」에서 본다면 역시 「몇 %의 산업」에 불과하다. 항공회사 등 전쟁과 테러에 의해 커다란 타격을 입은 산업도 있다고 하는 상황하에서는 그들만이 국가의 전략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단락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와 약간 관련되어, 미국 뉴욕주와 일부 캐나다지역의 이로코이 부족의 호전성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고 싶다. 그 인디언 부족은 앵겔스나 마르크스도 당시의 미국 인디언의 연구의 대가였던 L.H 모르간의 연구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관심의 중심은 그 사회가 모계 · 모권사회였다는 것에 있었다. 원시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강했다고 하는 마르크스 파의 가족론은 여기에서 시작되지만, 어쨌든 그 원리에 관한 미국 고고학의 새로운 설명이 위에서 이야기한 「군수산업」이 아니고 「군대 그 자신」이 그 이익을 위해서 전쟁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즉, 이로코이 족은 반농 반 수렵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이 장기적으로 수렵에 나가 있는 동안의 여성의 일은 농업과 농산물의 비축이었지만, 그를 위해서 「비축자산」의 상속은 모계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수렵=남성, 농업=여성인 사회적 분업은 수렵과 농업 사이의 산업간 불균등 발전에 의해 남녀간의 지위의 불균등발전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즉, 농업이 이 시기에 보다 중요하게 됨에 따라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남성들은 수렵과 동등한 다른 하나의 그들의 직업으로서의 전쟁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 갔다는 것이다. 군산복합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호전적으로 된다는 설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흥미롭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남성은 인구의 반을 차지했다. 반을 차지한 사람들이 그것을 지향하는 때에는 확실히 사회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군산복합체」 또는 「군수산업」에는 그러한 비중을 가지지 않는다. 이 인디언의 설명을 그대로 현대로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다.

「석유를 위한 전쟁」 설의 가능성

그렇다고 하면, 보다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무엇일까. 자주 듣는 것은 「석유를 위한 전쟁」이다. 부시 대통령 자신, 텍사스 주에서 석유채굴기업을 창설한 인물로서 그 석유업계에 15 년간 몸을 담고 있었고,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라이스 대통령 보좌관(국가안전보장담당)도 대기업의 하나인 세브론에서 9 년간 사외중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에반즈 상무장관은 석유 · 가스를 취급하는 톰 · 브라운사의 회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니 부 대통령이 이전 회장으로 근무했던 하리바톤사가 이라크 유전의 부흥사업에 거액의 수주를 했던 것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러한

석유인맥으로만 이루어진 정권이 「석유」 권리와 관련되어 전략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설명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러한 「정권 내부의 기업」 이지는 않지만, 이라크의 석유업계의 재건을 구실로 실질적인 「이라크 석유 장관」에 이전 세르 석유임원인 미국인을 미국이 앉혀버렸다. 이라크 석유권리가 미국의 중요한 관심이 되어 있는 것을 미국은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

실제, 이라크와 미국의 협상에서도 「석유」는 많이 쓰여지고 있다. 이라크는 요르단과 시리아 루트의 원유수출에 의해 세계의 원유생산의 5%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했지만, 그 힘을 이용해서 2000 년 11 월에는 석유가격을 올리고 그 올린 가격만큼의 대금을 국제연합 비 판리의 구좌에 이체할 것을 거래 회사에 통고하는 등등의 일을 하여 왔다. 미국은 그 조치에 서둘러 대응하고, 비축원유의 방출로 거래가격의 상승을 막았지만, 하여튼 가격에의 영향력을 이라크는 이러한 행위로 극명히 보여준 것이었다. 그 원유 가격은 부시 정권과 연결되는 석유기업의 중대한 관심의 표적이었다. 세계 제 2 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산유국의 장악이 그런 의미에서 부시 정권의 전략목표가 되는 것은 상상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석유업계의 이익추구설」이라고 부를 정도의 전쟁의 경제적 설명이다. 물론,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원유의 채굴권을 둘러싼 프랑스와의 쟁탈전의 측면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석유에 대한 협상도 그러한 업계의 특수이익의 문맥으로만 파악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재차 「총자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물음에 직면할 것이다. 군수산업과 마찬가지로 총자본의 일부인 업계가 국가 전략의 기본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부터 보아도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는 「산유국 장악」이 가진 좀 더 큰 「국가적 이익」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이해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중시하고 있는 점의 하나는, 석유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을 때의 중국과의 교섭력으로서의 산유국 확보이다. 「미국을 위한 석유」의 공급지로서는 중동은 1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지만, 국내의 원유생산의 증산에 고민하고 있고, 급속한 경제성장 하에서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원의 이동(여기에는 급속한 자동차의 보급도 관련되어 있다)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게는 석유의 확보가 국가의 중대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게는 중앙아시아와 중동이 더 중요하면서 결정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전 수입량의 6 할, 70 만 배럴을 중동에 의존) 국제에너지기관(IEA)에 의하면 2010 년의 원유 수입이 일본과 같은 규모의 하루 400 만 배럴, 2020 년의 수입은 미국과 같은 양인 하루 800 만 배럴이 된다는 예측이 나와 있듯이 그러한 중국에 대한 교섭력으로서 미국은 산유국의 친미화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것을 이야기 할 여유는 없지만, 이러한 「석유이권」과 상당히 유사한 「이권권리」에 재건수요의 획득이라는 것이 있다. 이라크에서는 영국과 미국군에 의한 과도한 파괴행위(이것은 점령 후에도 폭주의 방치와 방화의 형태로 계속되었다)는

재건수요 창출이 목적이었다고 이해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그 수요에 관련된 산업(건설업, 플랜트 사업)등도 이미 대머리 독소리=강경과였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부시정권의 성립에 커다란 역할을 해 냈던 조지·슈르쓰 전 국무장관이 회장인 미국 건설 최대 기업의 벡텔사가 재건수요를 장악했다는 것은 그러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또한 영미에 이어서 점령군을 파견했던 폴란드에는 구다니스크 석유정제소에 대한 이라크 남부의 석유 정제사업에의 참가와 그 외 인프라 정비 등에서의 수주가 예상되어 있는 듯 하고, 일본의 건설업계, 플랜트 업계도 이러한 문맥에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무기판매상」이 군수산업 이외 다른 산업으로 확대되어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원유거래의 달러기준 표시 목적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저널리스트의 美濃口担가 제기하고 있는 석유거래 결제통화의 문제도 중요하다 (www.yorozubp.com/0303/030305.htm). 이 점은 미국에게 있어서 세계의 달러이탈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을 지가 미국의 생사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에 있다. 제 1 장에서도 말했듯이, 이 전쟁은 미국의 쇠퇴과정의 과정속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되고, 그런 의미에서 군사력과 함께 미국에게 남겨진 소수의 국제적 영향력 행사의 수단으로서의 국제통화 달러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그런 성지가 이라크 원유의 유로 표시에의 전환으로 손상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술한 이라크의 원유 가격인상과 동일하게 2000 년 11 월의 일이다. 조금 더 말하자면, 이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의 일이다.

그러나 이 설명만이라면 세계의 오직 한 국가의 결제통화의 문제로서 가볍게 생각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중동전체에 확대되었을 때(실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러한 방향에 있다), 중동원유에 의존하는 일본과 중국 등의 동아시아 제국의 결제통화가 한번에 유로화로 될 가능성이 나타난다. 세계에서 동아시아의 중요성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벌써 달러체제의 종언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 후,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무역거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석유거래가 유로화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한 걱정은 계속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달러체제의 종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세계의 무역거래가 미국의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무역에서 미국에 대해 수출초과의 일본과 중국 등의 수출대금이 미국으로 환류 하지 않게 된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거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그 무역적자로 인한 달러약화의 전망도 달러이탈의 요인으로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제통화로서의 달러 수요 감소는 달러 폭락의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달러가 결제통화로서 계속 기능하고 있는 한,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2 국간 무역에서도 그 거래를 위한 달러가 필요하게 된다. 모잠비크는 탄자니아로부터 상품을 살 때에 자국통화가 아닌 달러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고, 따라서 그 때문에 미국은

달러 지폐를 모잠비크에 파는 것이 가능하다. 역으로 말하면, 미국은 여기에서 「파는」 달러지폐의 금액만큼 상품의 구입은 달러지폐의 추가인쇄 만으로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일본이나 모잠비크는 자국 내에서 상품을 생산해 수출하지 않고는 외국으로부터 돈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국은 지폐의 인쇄만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만사형통의 일을 할 수 있는 마법의 시스템이 세계의 달러 이탈의 진행으로 붕괴될 수 있는 것이다. 또는 이러한 것에 의해서 달러 수요의 감소로 달러 폭락의 위험도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은 이라크의 석유 그 자체가 아니라 석유의 결제통화가 문제가 되었다는 해석도 상당 수준 설득력을 가진다. 이라크 이외에서도 원유의 유로화 결제를 의도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2002 년 4 월에 쿠데타 비슷한 사건으로 일단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美濃口氏의 설명에서는 여기에도 미국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 경제이론을 배우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 때문에 그다지 매스컴에서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모든 가설보다 훨씬 더 진실적인 가치가 있다. 이라크 전쟁의 직후에 「중앙은행 기능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미군은 이라크에 달러 지폐를 뿌렸지만, 이것도 또한 그러한 문맥에서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확실히 「이라크 취득」은 미국에게 극히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쇠퇴국가와 발흥국가의 국민의식설

이렇게 해서 「전쟁의 원인」은 단순히 일부 산업의 이익으로서 설명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이 「총자본의 결정」이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 논의도 「무엇이 국가 이익인가」을 정부 상층부가 비밀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다고 하는 약간 음모론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고 「전쟁이 필연이다」라고 하는 레닌의 설명에는 거리감을 느낀다. 상술의 설명에서도, 제국주의국가로서의 미국이 「이라크 취득」이라고 하는 세계재분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역시 필연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좀 더 저항하기 어려운 트렌드로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설명으로서 결국 내가 도달한 것이 전철의 마지막에 설명했던 것 같은 사고방식, 즉 불균등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대중심리로서의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이다.

전철의 예, 미국의 현재 국민여론에 대해서는 쇠퇴국가에서의 호전여론의 예이었지만, 사실은 이러한 현상은 쇠퇴국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전전, 군국주의로 향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쇄국적이고 작으면서도 통합된 일본이 점점 자신감을 불리고 「열강」으로서 보다 높은 지위를 요구하게 되었다. 선발제국주의는 아시아를 식민지화하고, 시장을 독점하였다. 보다 우수한 일본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장벽을 형성하고, 우리들의 대동아시아의 땅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다. 선발제국주의도 다른 제국주의로서 야만스럽고 자국본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의 국민의 분노는 어느 의미에서 정당한 것이었다. 필자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평화운동가로서 교토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2 차 세계대전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던 국민감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회의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전쟁의 문제는 참회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 즉 메커니즘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한다. 그것이 해결되고 처음으로, 그 법칙의 강력함을 알고, 그것만큼의 반전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혹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러한 「발흥국가의 내셔널리즘」이 걱정되는 것은 중국이다. 아편전쟁 이래 외국 제국주의로부터 계속적인 시달림을 당해 왔다는 점, 원래는 위대한 문명국가였다는 이 두 가지의 의식(의식보다는 사실)은 앞으로 세계에서 「군림」하는 곳까지 도달해서 대국주의적인 내셔널리즘으로 바뀔 위험성이 충분하다. 현재의 중국 공산당 정권은 그러한 의식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첨각열도문제와 남사군도문제는 대만이나 홍콩이 과격하다), 앞으로 만약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후퇴하고 그 대신 내셔널리즘이 유일한 통치원리가 된다면 그 때는 극히 위험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일본에 있어서도 그 역의 내셔널리즘의 문제와 같이 본서의 마지막에서 한번 더 논의하고 싶다.

그런데, 이러한 「발흥국가의 내셔널리즘」과 「쇠퇴국가의 내셔널리즘」모두가 불균등발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동서통합을 해 낸 독일, EU 통합을 이루어 낸 유럽은 현재의 미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발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현재는 「쇠퇴국가」와 「발흥국가」가 병존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양자에서 내셔널리즘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시라크의 반미연설에 프랑스 국민이 환희하고, 슈레더 수상 of 국정선거의 반미 캠페인에 많은 독일 국민은 투표에 응했다. 유럽의 반전 데모에는 순수한 내셔널리즘도 더해져 있다고 말하여진다. 불균등 발전과정에서 제국주의의 모든 국가에서 「재분할요구」는 이렇게 해서 「국민의식」에도 완전히 반영된다. 「제국주의전쟁의 필연성」은 여기까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파멸적인 경비부담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를 「취득」한다고 해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지 어떨지는 잘 모른다. 그것보다는 전술한 의미에서의 「이익」은 있어도 이하에서 설명하는 의미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심한 경제적인 손실을 미국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미국 예일대학의 노드하우스 교수가 전쟁의 수개월 전에 작성한 전쟁의 경비계산(이렇다고 해도 개전직전의 3 월에도 국가수준의 회의에서 교수 자신이 보고를 했지만)과 「중전」후의 신문보도의 비교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다.

● 이라크 전쟁의 비용계산 (단위:억 달러)

	Nordhaus 교수의 계산		전쟁후의 신문보도	
	낮은 경우	높은 경우	낮은 경우	높은 경우
직접 군사지출	500	1,400	800	1,000
점령·평화유지	750	5,000		
부흥	300	1,050	6,000	8,000
인도지원	10	100		
원유시장에의 영향	-400	7,780		
거시경제적 영향	-170	3,910		
합계	990	19,240	6,800	9,000

노드하우스 교수가 계산한 자세한 내용은 교수의 홈페이지를 보아도 잘 모르겠고, 신문보도 쪽에서의 「재건」의 의미도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은 신문보도의 「재건」의 의미가 노드하우스 교수의 「점령·평화유지」나 「인도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표를 보기로 하자.

우선 시선이 머무는 곳은, 전쟁이 「단기적」이었다고는 해도 노드하우스 교수의 계산에서는 「중위」라고 해야 하는 지출이 있었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은 「재건」경비가 「높은 경우」에 가까워 지고 있는 점이다. 후세인이 없어져도 이라크의 민중이 충분 반미인 것이 알려진 지금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신문보도의 「낮은 경우」에서도 실은 천문학적 숫자인 것을 알아야 한다. 노드하우스 교수가 말하는 「원유시장에의 영향」 및 「거시 경제적 영향」이 플러스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재정지출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외의 항목에 의한 지출증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베트남 전쟁 때에도 십 년간에 걸쳐 지출했던 총액이 4943억 달러였던 것을 부시 정권은 정말로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일까.

물론, 이 필요 경비는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지불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전의 걸프전쟁의 시기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독일, 일본 등이 거액을 부담했고, 전체적으로 707억 달러에 이르는 경비 중에서 92억 달러만 미국이 부담하였다. (House Budget Committee Democratic Staff의 숫자) 이것 자체도 일본국민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번은 사우디 아라비아도 돈을 내지 않고 불황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일본도 부담 능력이 없다. 일본에는 10-20%의 부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듯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신문보도의 「낮은 경우」에서 계산을 해도 680-1360억 달러 즉 10조엔 전후가 된다. 이것은 걸프전 당시의 전체 경비를 넘어서는 금액이고 만약 이것을 일본이 낸다면 연간 80조엔의 정부예산이 한번에 10조엔이나 증액되어야만 한다. 일본이 이 비용을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일본은 미국을 위해서 침몰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일본이 그 금액을 내서 침몰하던지 혹은 좀 더 인색하게 되든지, 그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은 도저히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파월 국무장관이 최후까지 단독의 군사행동에 반대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숫자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국은 이것으로 패전한다」고 나는 확신할 수가 있었다. 베트남 전쟁도 패전의 진짜 이유는 군사비부담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사고의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미국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기는 것만큼의 전쟁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이 전쟁에 정말로 이긴 것인가 아닌가는 미국이 이 전쟁을 할 국력을 정말로 가지고 있나 없나를 좀 더 차후에 처음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 반복해서 이야기 하지만, 나는 현단계에서 확실히 주장을 해 두고 싶다. 미국은 사실 전쟁에서 진 것이다.

이것을 재정적자의 문제에 끌어당겨서 다른 숫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왜냐하면 2003 년 3 월에는 올해, 내년의 재정적자가 3000 억 달러가 된다고 말해진 그 1 개월 뒤에는 그 숫자가 4000 억 달러로 수정되고 그것이 더욱이 증액 수정될 움직임에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클린턴 정권은 재정의 건전화를 추진했고 따라서 2 기째의 4 년간에 5000-6000 억 달러의 재정흑자를 실현했다. 그렇지만 부시 정권은 취임 2 년이 되어 그 전부를 다 써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올해와 내년에도 그러한 재정의 적자를 내게 될 것이다. 그것보다는 상술한 재건비용의 상향 수정이 계속된다면 그러한 재정적자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숫자에는 이 전쟁에서 한층 가능성이 늘어나게 된 국내의 테러 대책비용과 항공업계에서의 7 만인의 일시적 해고 비용(실업대책비의 증가와 세수입의 감소를 포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시리아와 북한에의 위협·공격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채권의 발행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고 그로 인한 국채의 문제도 심각하다. 작년 6 월에 그 이전의 5 조 9000 억 달러로부터 6 조 4000 억 달러로 늘어난 국채발행의 상한선에,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벌써 상한선에 도달해 버렸고, 그 후는 공무원 퇴직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에 들어가 있다. 퇴직한 공무원에게 장래연금을 지불하지 않고 끝낼 심산인가, 새롭게 증세를 하려고 하는 걸까 지금이야말로 전승 기분의 미국의 발 밑을 잘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보충하여 설명하면, 미국 신문에 실린 이런 이야기도 있다. 그 재정난 때문에 감옥의 수감비용이 고갈되고 그 비용삭감을 목적으로 150 명에서 200 명까지의 죄수가 석방되었다는 기사이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무역적자와 함께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한다. 위에서 이야기 한 것 같이 「달러 방어」가 이라크 전의 하나의 목적이었다고는 해도 이렇게 해서 역으로 이 전쟁이 원인이 되어 달러 위기의 가능성은 점점 더 강해져 가서, 최근의 대 유로화에 대한 달러의 하락은 이미 그 전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의 승리」는 그것에 충분한 만큼의 국력을 가져야만 처음으로 말할 수 있는 말일 것이다. 그 말은 역으로 미국의 쇠퇴는 이렇게 해서 경제의 면으로부터 가속화 되어 가는

것이다. 앞으로 만약 미국의 군사적 제국주의가 「평화적」인 것으로 궤도수정되어간다면 그것은 여기서의 「패전」의 결과로 이해하여야만 한다. 즉 「경제」에 근거를 둔 호전적인 국민의식도 「경제」에 있어서의 타격의 확대에 의해 역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의식을 통해 전쟁을 불가피한 것으로 하는 것도 불균등 발전이라고 한다면, 그 국민의식을 변혁하는 것도 불균등 발전에 의한 경제의 쇠퇴라고 말할 수 있다. 전비조달을 위한 증세와 복지정책을 버리는 것 혹은 「전사」라고 하는 형태의 전쟁 비용을 반전운동이 중시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제국주의의 지배층은 자신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의원의 가족으로부터 파병되는 것은 불과 1인) 국민과 동맹국에게만 부담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비용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체질의 원흉이지만, 이 때문에 반전의 투쟁은 피지배계층에 의해서 주도되고 행해지는 것이다. 반전운동이 노동자 정당에 의해 지도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이다. 이것은 제 1차 세계대전으로부터의 이탈이 케렌스키에 의해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레닌의 지도에 의해서만 가능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제 4 장 미국인에 이용당하고 있는 유대인들

전쟁의 유대인 원인설에 대한 의문

이렇게 해서 미국경제의 문제, 이슬람과의 전쟁의 문제, 미국 여론의 움직임을 논의하면서 도저히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미국·유대인의 문제이다. 미국의 백만장자의 20%가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은 미국경제의 중심을 잡고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가는 물러나게 하고, 마음에 드는 정치가에게는 많은 기부금을 내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이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A·M·리리만소르가 쓰고, 宇野正美가 번역한 『유대인·컨넥션』 삼교사, 1991년을 참고해 주었으면 한다.

하지만 그러한 사태를 전면적으로 인정했다고 해도 역시 전장에서 논의했던 국가의 「필연」은 일부의 사람이 잡고 장악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서에서는 조금 반대의 주장을 하고 싶다. 다만 미국 정부내의 호전파는 유대인=이스라엘 로비인 것은 틀림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전쟁정책을 리드하고 있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유대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러한 이해에서는 원래의 「미국인」의 책임이 불명확해 진다. 일본에 있으면 우리들은 거의 유대인과 접할 기회가 없는 만큼 그들에 해한 오해도 많아진다. 그런 취지에서의 주장인 것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실제로, 이 리리만소르 자신, 유대인 계 저널리스트로서 그런 「유대인·컨넥션」 추궁의 선두에 서 있고, 반전집회에서도 유대인은 눈에 띈다. 인구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 소수파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보인다. 전술의 논의와는 중복되지만, 전쟁시작의 진짜 이유는 국민전체의(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의 위치도 모르는) 대중심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항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고학력의 사람들이다. 이것이 유태인으로 하여금 많은 반전파를 배출하게 하는 이유라는 것이 나의 관찰이다.

「유태인·노동자 서클」에서의 토론회

그러던 중, 나는 뉴욕 체재 중에 진지함을 갖춘 유태인 그룹이 개최한 팔레스타인 문제의 토론회에 참가하는 기회가 생겼다. 그 단체명은 「유태인 커뮤니티·동 유럽계 유태인 문화와 사회적 정의를 위한 노동자 서클(The Workmen's Circle/Arbeiter Ring Dedicated to Jewish Community, Yiddish Culture and Social Justice)」이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진 것이었지만, 설립이 1892 년이기 때문에, 전통이 있고 또한 맨하탄의 한 가운데 커다란 빌딩을 소유한 커다란 단체였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었고, 입회원서에는 문화활동, Yiddish 어 교실, 음악회, 합창활동, 영화회, 서적, 비디오, 여행, 캠프, 리조트, 볼런티어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빈틈없이 갖추어져 있었고, 실제로 나는 그 음악회의 출장공연에 나간 적이 있던 인연으로 토론회의 개최를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주요 활동은 문화활동 중심이 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이 프로그램의 리스트의 아래부터 2 번째에는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한 활동」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단체의 조직명칭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원래의 취지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그들 유태인의 미국이민은 남북전쟁 후에 본격화 되었고, 19 세기 말에는 더욱 대규모화 되었다. 그러나 그 19 세기 말에는 먼저 이민해 왔던 독일계 유태인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반발이 이미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간 늦게 이민 왔던 동 유럽계 유태인은 원래부터가 노동자 중심으로 또한 가난하다는 상황이 추가되었다. 이것이 그들을 자기방어적 혹은 문화유지를 위한 조직과 운동을 필요로 하게 했던 이유이지만, 한편 노동자 중심의 동 유럽계 유태인은 사회주의 사상도 미국에 가지고 들어왔고, 유태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공경심을 가지고 인식하고 있다. 뉴욕·맨하탄의 남단, 밋테리 공원의 옆에 위치한 「유태인·대학살 박물관」에는 「유태인의 유산」으로 아인슈타인과 카프카 등의 위인과 자유주의 사상이 소개되어 있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사상에도 유태인이 크게 공헌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나는 전전기의 마르크스 경제학자로서 유명한 로자·록셈부르크의 초상화와 함께 모니터에서 흘러나오고 있던 다음과 같은 여자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말하기를 「유태인 차별에 대한 싸움은 보다 커다란 사회변혁의 싸움의 일부이다」라고. 현재의 이런 「노동자 서클」은 구 소련에서의 유태인 차별을 엄중하게 비난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로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이끌리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역사적 산물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태인은 유대 교회를 각지에 설립함과 동시에 이러한 「노동자적」인 개인이 참가 할 수 있는 조직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약간 서두가 길어졌는데, 이 토론회의 내용을 소개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2002년 12월에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열린 이 토론회는 실은 상당히 긴장감에 넘쳐 있었다. 뒤에서 보듯이, 이 단체의 기본적인 주장은 온건주의이고 타당한 것이지만, 하여튼 유대인 단체이고, 더구나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문화활동에만 참가하는 회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학살문제에 대한 이야기에 다다르자 패널리스트의 발언에 「죄가 너무 깊다」라든가 「배신자」라는 야유가 튀어나오고, 역으로 팔레스타인 민족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신이여 저희들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발언의 끝남과 동시에 나오는 박수가 있을 때에는, 저쪽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이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 학생시절의 학생대회를 생각나게 하는 듯한 열기에 가득 찬 논의를 회장을 꼭 채운 사람들 앞에서 행하고 있었다. 당연히 나 이외에는 모두가 유대인이었다.

패널리스트의 다수파는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퇴각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양쪽의 의견이 패널리스트로부터 나올 수 있게끔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회의장에서의 의견도 포함해서 양쪽의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팔레스타인 민족을 비난하는 쪽의 의견은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족 거주지에 많은 투자를 했고, 지식도 투입하고 있다.
-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름이 좋다고 하는 의견이 있지만, 국제연합의 안보리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테러리스트 국가가 들어가 있다. 이와 같은 기관은 믿을 수 없다.
- 이슬람교의 코란에는 타종교의 인간을 죽여라 라고 써 있다. 그런 종교를 신용할 수 없다.
- 우리들의 친구를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인간평등의 정신으로 대우 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처음 들은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가의 의견, 다른 두 개는 회의장에서 나온 의견이다. 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한 사람들의 모습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면 편견이라고 비난 받을 것을 각오하고 말하면, 누구도 노인으로서(2차 대전에서 싸웠던 노인도 있었다) 그다지 지적인 용모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점령지에서 퇴각을 주장하는 의견은 우리들에게 있어 상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할 필요성이 없을 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2가지의 특징을 소개해 두고 싶다. 그 하나는 20세 전후의 학생이 혼자 패널리스트가 되어 미국 유대인의 독특한 책임을 주장한 것이었다. 즉 미국 유대인은 잠재적으로 이스라엘의 시민이다. 유대인의 이름으로 미국으로부터의 개입이 행해지고 있다. 우리들의 세금이 거기에 쓰여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고 「우리들 이름으로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 하였다. 그 「우리들의 이름으로…」는 영어로 말하자면, 「Not In Our Name」이 되고, 실은 이것은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반전 조직의 이름이기도 했다. 즉 그 여성은 아마도 그 회원일 것이다. 관련하여 이야기 하자면,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측은 젊은이들은 없었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것과 계속 관련되어, 유대인으로서 이 문제에 어떻게 관여할까 라는 문제였다.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선거도 논의되었지만, 그것과 동시에 「자신이 찬 이스라엘 임을 이야기 한 후에 그 이스라엘의 정치에 대해 의견을 말하시오」라든가 「이러한 의견은 이스라엘의 국내에도 많다. 이스라엘 국민의 70%는 좌익지지이다. 우리들만의 의견교환으로서는 안되고 팔레스타인 측과의 평화주의에의 의견의 일치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주최자의 의견정리였다. 어찌되었던 간에, 정말로 힘든 입장에 있으면서, 신중하게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는 유대인 그룹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유대인의 역사

그런데 그들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우리들 외부인도 그것을 배울 기회가 미국에는 많다. 뉴욕의 맨하탄 섬에는 전술한 박물관 이외에도 「유대인 역사 박물관」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 있고, 「이민의 나라」의 건물 앞 공공도서관에는 유대인 관련 책이 수없이 갖추어져 있다. 나도 미국 체재 중에 많은 유대인과 접촉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많은 기회를 이용하여 유대인의 역사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기원전 6 세기 이래의 그들의 「유랑의 역사」와 함께 그 이전에는 그들의 농경민이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출애굽기」후로 그들의 역사를 한정한다고 해도 그 왕국건설은 지금부터 3200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또한 그 당시는 고도의 농업문명의 담당자이었다. 이 경우 연상이 되는 것은 중국 한민족의 역사이다. 그 문명의 유장함과 원래 농경민이란 것을 말하자면 유대인과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다. 또는 좀 더 이야기해서, 그만큼 장구한 기간에 걸쳐 하나의 정체성을 지켜 온 민족은 한민족과 유대인 밖에 세계에는 없는 것 아닐까.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의 문명이 후에 계승되지 못하고, 또한 그리스와 로마인의 역사도 그 문명의 종언과 함께 일단 종료되고, 근대로부터 새롭게 다른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연속되지 않는(이런 의미에서는 「연속된 역사」로서의 일본이나 한반도의 특이성도 눈에 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 났기 때문에 역으로 그 주체성을 몇 번이나 개인의 수준에서 재인식되어 왔다. 일본인과 같이 그들이 살고 있는 토지에 따라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민족은 그 만큼 주체성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만, 유대인은 그렇지 않고, 강한 주체성이 반드시 필요했다. 내가 미국에서 살던 지역은 특별히 유대인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검정 양복에 창이 넓은 모자의 「민족의상」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유대인 남성을 볼 때마다 생각한

것은 「민족의상」을 거리에서도 입는 남성은 「민족의 도가니」인 뉴욕에서도 터번을 한 인도인 정도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주체성은 강력했다.

또한 그들이 본래 농경민족이었다는 점, 즉 원래부터 상업민족이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세계에서는 화교와 유대인이 상당한 수준으로 각국 상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화교도 유대인도 동일하게 원래는 농경민족이었고, 혹은 더욱이 철제농기구를 사용한 보다 진보적인 농경민족이었던 것도 확실히 인식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히타이트 라고 하는 철을 발명한 민족이 인접했다는 것이 행운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철의 보급에 대해서는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이런 철 없이는 그런 건조한 토지를 충분히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철의 보급 이전의 농경은 극히 생산력이 낮은 것이었다. 철을 일찍부터 사용한 유대인의 농경이 얼마나 선진적인 것이었는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해서 일찍부터 문명적이었다는 것은 그 군사적인 취약성을 가져오는 것이 역사의 장난일 것이다. 중국의 한민족도 마찬가지이지만, 식량인 가축을 걷게 해서 이곳 저곳으로 옮길 수 있는 기마민족의 군사력에는 항상 골치를 썩이고 있어서, 결국 그 땅에서 쫓겨 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토지를 빼앗긴 농경민은 그 직업도 어쩔 수 없이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것이 그들을 상업민족으로 전환시킨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중국본토에 어떤 이유로써 이별을 고했던 화교와 이제부터는 같은 운명을 걷게 되지만 조국을 빼앗긴 소수 민족은 서로 협력해서 사회를 만들고, 또한 화교이상으로 조국이 없어진 이상, 그 사회와 주체성은 더욱 강해지고, 근면해 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쫓겨 나온 곳은 서방 세계 전체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사업거래에 최적의 지위를 얻는 것이 가능했다. 따라서 여기에서 쫓겨 나는 것이 역으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켰다는 2 번째의 역사의 장난을 볼 수 가 있다. 긴 중세의 봉건제도 사회를 거쳐서 상공업 중심의 근대사회가 되면 될수록, 그 사회적 지위의 높이가 의심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소수파 민족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마찰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특히 시장사회가 전면적으로 넓어지기 전에는, 상인은 본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기」적인 성격을 같이 가지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반발은 일반적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발전이 늦은 개발도상국에서 자주 보지만, 가게에서 가격교섭을 하면 얼마든지 가격이 변하는 것이 미성숙한 시장사회의 특징이다. 따라서 상인으로서의 그들은 필연적으로 능변으로 상품의 가격을 인상할 방법에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동남아시아 사회에서 사회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화교가 방화나 약탈을 당하고 유럽사회에서 유대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미국에서도 크리스트교 원리주의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히틀러의 대학살을 용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내셔널리스트의 표적이 되기 쉬운 사회적 기반이 객관적으로 있었다는 것은 알아두어야만 할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현대경제에서 대표적인 「미성숙한 시장」은 국제환율거래이지만, 그 시장에서 큰 돈을 벌고 동아시아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고 간 것도 월 스트리트를 지배하는 유대인 투기꾼 이었다. 그러한 구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서둘러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상업민족이 되도록 한 요인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주위의 민족이 그들을 쫓아낸 점에 의해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것이 또한 인식되지 않으면 이해는 공평하지 않다. 혹은 사람들의 「유대인을 싫어함」은 그 민족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산업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그 모순을 민족간의 모순으로 파악해서는 안되고, 산업간의 모순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신도 또한 유대인이었던 마르크스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소위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라는 노트를 쓰고 있지만, 그 노트에 써 있는 내용도 또한 문제를 그들의 상업민족으로서의 성격으로부터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민족문제」를 접할 때 마르크스주의적인 태도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같은 취지로서 나는 「중국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라는 논문을 썼다. 『정경연구』 제 75 호, 2000 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읽어보기 바란다)

유대인은 누구인가

이것은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실체의 불확실성에도 관련된다.

우선, 2 천 수 백 년에 걸쳐서 진행된 세계로의 분산 과정에서 통상의 민족에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민족적 공통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 역사는 세대로서는 약 백 세대를 경과한 것이 되지만, 이것은 타민족과의 혼혈이 각 세대에서 단지 10 분의 1 이었다고 해도 이론적으로는 현재의 「순수 혈통 비율」은 0.0026%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현재 타민족과의 통혼비율이 50%이기 때문에 현실에는 훨씬 「순수혈통」은 적고, 즉 누구도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앞에 소개한 「노동자 서클」도 「동 유럽계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그 일부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기에 참가한 대부분의 여성은 금발에 독일인 풍의 용모를 하고 있다. 또한 내가 따로 참가했던 러시아계 유대인 연극의 배우들은 전부가 흑발에 러시아인과 터어키/아랍계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출연자의 이름은 오로프, 가프리에로프, 가타에바, 파타코바, 무슈바 라는 완전히 러시아 풍이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아랍지역에 있고, 「셈족(Sem)」이기 때문에 터어키나 아랍계의 얼굴모습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독일적인 얼굴과 러시아적인 얼굴이 있는 편이 보통이라고는 말 할수 없다. 역으로 말하면, 그것이 그들의 혈통상의 「신화」 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언어적 차이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러시아계의 극장은 러시아어를 기본적으로 구사하고(나누어진 안내서도 영어와 러시아어로 쓰여져 있었다), 「동유럽계」의 그것은 이딴슈어를 기본어로 삼고 있다. 앞서의 「노동자

그룹」의 이름에 관련되어 가끔 발견하는 4 개의 이딧슈어의 단어를 독일어, 영어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독일어의 한 종류라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덧붙여서, 현재의 이스라엘에서는 문장어로서만 존재했던 구약성서의 헤브라이어를 구두어로 부활시키고 있지만, 이것도 또한 그들이 일체의 언어적 공통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 Yiddish 어, 독일어, 영어의 관계

Yaddish 語	독일어	영어
Algemayne	algemaine	general
Bund	Bund	association
Arbeter	Arbeiter	worker
un	und	and

이렇게 보면 드디어 유태인의 공통성에는 유태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판단이 서 버린다. 그러나 이 「유태교」를 믿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유태인이 될 수 있다. 즉 일본인, 흑인이라도 유태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상당히 이상한 면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유태인」이 된 일본인이나 흑인은 거의 없고, 유태인을 신이 선택한 「선량민족」으로 파악하는 종교는 보통으로 이야기 하는 「보편종교」가 아니다. 따라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만이 유태교 신자로서 계속 믿어왔다고 이해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렇더라도 특히 유럽 세계에서는 그리스도교와 유태교 사이의 개종은 상당히 빈번했었다고 이해된다. 내가 문헌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Who Is a Jew?(유태인은 누구인가)"라는 책에 같은 혈족 중에 그리스도 신자와 유태교 신자가 혼재하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로 인해 「유태교」를 선택한 사람들과 그 자손이 「유태인」이 된 것은 아닐까. 혹은 좀 더 이야기 해서, 유태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상업を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라고 나는 상상한다. 즉, 여기까지 오면, 유태인이 상업을 한 것이 아니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다운 정체성을 선택한 것이 된다. 국가를 넘어서 산산히 흩어진 만큼 유태인은 모든 국가에 살게 되었고, 그것에 의해 원격지 무역의 불가결한 컨넥션을 결과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에 성공하고, 또는 그 컨넥션에 들어온 상인들이 유태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민족은 산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스만 투르크와 유태인

여기에서 또한 반드시 소개하고 싶어지는 것은 중앙 아시아의 역사이다. 왜냐하면 이 유태인, 1650 년 전후는 그 반수가 오스만 투르크의 점령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 이슬람 제국은 페르시아, 중동으로부터 발칸 반도, 북 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을 그

지배 하에 두고, 그것은 그들의 원거지 무역에 있어서 최적의 제국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터키인의 제국으로서 위구르, 카자프, 우즈베크, 키르키스, 토르쿠멘, 아제르바이젠, 타타르 등의 중앙아시아의 터키인 지역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이 왕조의 유대인의 반수는, 터키인 왕조의 밑에서 터키인이 사는 지역으로 확대되어 있었다는 것이 된다. 실은 위에서 설명한 러시아계 유대인의 연극은 음향과 의상이 최동쪽 끝의 터키족=중국 신강 위구르족의 그것과 상당히 닮아 있지만, 이것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상기의 「유대인론」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 중앙아시아의 터키계 국가의 전부가 장기적으로 제정러시아와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시기, 그 지역에서의 공통어는 러시아어, 지배민족이 러시아였기 때문이었다. 즉 이러한 「터키적인 유대인」이 「러시아화」한 것이 그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화」이전의 문제로서, 그들 유대인이 이러한 이슬람 제국의 밑에서 평화적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 경제력은 역으로 제국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때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슬람교도 오스만 투르크도 종교에는 상당히 관용적이었다. 개종은 결코 강요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들을 광대한 영역을 지배하게끔 하는 근거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슬람교와 유대인이 장기에 걸쳐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상식과는 정말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특히 강조해 두고 싶지만 이슬람교와 유대교와의 항쟁이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의 히틀러도 물론 이슬람 신자가 아니었고, 크리스티교 신자가 오히려 종교적 관용이 없었다는 것은 흔히 말해지는 것이다. 크리스티교 신자가 보면 「약속의 땅」을 유대인이 빼앗겼다고 하는 것 자체는 신이 유대인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개종이 필요한 증거라는 것이다. 또는 크리스티교를 처형한 세력 자체가 구약성서를 믿는 유대인 신도였고, 그러한 의미에서도 크리스티교가 좀더 직접적으로 유대교와 충돌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뿌리가 같은 유대교, 크리스티교, 이슬람의 세 개의 종교는 현재야말로 유대교=크리스티교 동맹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원래는 오히려 유대교=이슬람의 동맹이었던 것이다.

이 점은 현재의 미국을 뒤돌아 보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19 세기 이래 영 제국에 대한 이슬람교의 위협에 고민하고 있던 미국의 「본국」영국이 발포아 선언으로 이슬람과 유대인과의 대립을 만들어 낸 이후, 유대인의 활동 무대는 전면적으로 미국으로 옮겨진다(미국은 이스라엘 이상으로 많은 유대인을 가지고 있던 나라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국에 번영의 시대가 등장하게 된다. 번영을 가져온 황금의 계란 유대인을 크리스티교 신자는 이렇게 해서 손에 넣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을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좋은 맛이 나는 고기는 오스만=이슬람과 함께(악담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지도 모르지만), 맛이 없어지면 다른 자본주의 초강대국으로 옮겨 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의 장사는

지금 월가에서의 각종 거래의 달콤함에 미치지 못하고, 이슬람과의 충돌로 중앙아시아 무역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다고는 해도 그 불이익은 현재로서는 그만큼 큰 것은 아니다(이것은 「상업민족」으로서의 활동을 억제당한 소련시대의 유대인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특수한 위치가 여기에 있다.

「미국에게 빼앗긴 유대인」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유대인론」을 전개한 그 목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첫 부분의 반복이 되지만, 최근 10 년의 미국의 반 이슬람 전쟁의 문제를 유대인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문제로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유대인에 의한 친 이스라엘적인 압력은 말하자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미국 측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을 전제로 해서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위에서 유대인과 관련되는 「역사의 장난」를 보아 온 지금, 이 미국 외교의 편향도 또한 하나의 「역사의 장난」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대인」은 앞의 설명과 같이 움직여서 상업에 뛰어난 사람들을 규합했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그러한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는 나라는 그것에 의해 큰 번영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유럽이라고 하는 구 사회와 떨어져서 「이민의 나라」로서 출발한 미국 사회였다. (미국에서도 19 세기말에 그 경제력에 대한 반발로부터 반 유대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싸우면서 지금에 와 있다).

실제, 경제대국으로서의 미국의 강력함 이라는 것은 이민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 노동을 혹독하게 싸게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수한 기업가를 불러 모으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대표격이 그들 유대인이며, 이런 의미로 나는 「유대인이 미국 경제를 빼앗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고, 사실은 「미국이 부의 알토란인 유대인을 훔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체는 「미국」 측에 있어 유대인은 거기에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영국에 의한 이스라엘 국가의 건설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도둑맞은 유대인(Stolen Jewish)」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부디, 독자와 공유하고 싶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미국이 유대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슬람 세계로부터의 반발에 계속 부딪치게 되기 때문이다. 제 1 장에서 본 것처럼, 이슬람 나라들은 몇 번이나 친미 정권이 수립되었지만, 어느 새인가 반미 정권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따라서 끊임없이 이들 나라에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거기에는 전장에서 본 것 같은 방대한 비용이 든다. 특히 이슬람 각국에는 산유국이 많아, 미국의 석유 전략에 있어서도 그 비용은 엄청나고, 또 이 전쟁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실은 미국이 유대인과 「동맹」을 하고 있는 이익이 장기적으로 저하의

국면에 놓이고, 비용이 이익을 상회할 듯한 사태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장기에 걸쳐 얻어 온 이익이 지금에 와서 반대로 불이익이 되는 듯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이런 곳에서 어찌 되었든지 이스라엘을 옹호 한다고 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쟁 직후에 EU, 러시아, 유엔과 연대서명으로 「Road Map」이라는 팔레스타인 평화 계획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이 내용에는 아직 이스라엘에 유리한 부분이 많지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해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억압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즉시 팔레스타인인 지역 이주지로부터의 철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장애가 되어 언제까지 뿌리를 뽑아도 이슬람 지역을 지배할 수 없는 미국의 초조가 반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으로서는 실로 「애국적」인 방향으로의 전략 변경이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이 신 전략에 대해서 이하의 두 가지의 면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우선, 「유대·connection」에 골수까지 얽혀있는 미국 정권이 정말로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점이다. 미국의 매스컴은 유대인이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 정보망도 다방면에 두루 미치고 있다. 부시의 예상치 못한 어떤 스캔들이 갑자기 폭로되어 그것에 의해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정치 이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확립한 정치의 지배 시스템에 그 정권 자신이 손을 대는 것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토건 업자를 지지 기반으로 한 자민당 정치는 좀처럼 내부로부터 변혁하지 못하고, 따라서 위세 좋게 등장한 코이즈미 정권도 열어 보면 결국 대부분 아무런 내용 있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다만 그대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호소로 그친 슬그머니 없어지는 슬로건으로 끝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또한,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만약 이 전략 변경이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은 보다 큰 의미에서의 「미국 제국주의」의 전략 변경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 취지에서의 전략 변경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미국이 이미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혹은, 이 사태를 보고, 「끝까지 미국은 자국을 지켜 준다」라고 믿고 있던 각국과 지역에서 미국 이탈이 진행될지도 모르다. 예를 들어, 대만, 한국, 일본 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전략 변경을 단지 「팔레스타인 문제로 미국은 좋은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는 것 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좋은 제안인 것 자체는 틀림없지만,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프랑스 등과 같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의 전략 변경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과학적으로 사태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II. 글로벌리제이션에서 제국주의론으로

제 5 장 제국주의 시대로서의 현재

「제국주의」를 정당화 하는 영미의 논단

이라크전쟁이 시작된 후의 이야기이지만, 미국의 텔레비전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invas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놀랐다. 역시 일본의 매스컴은 이 단어를 「침공」이라고 다시 번역해 보도를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는 미국인의 「침략해서 무엇이 나쁜가」 「해방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혹은 좀 더 덧붙이자면, 이라크 전을 치루고 난 후 좀 더 자신감을 가진 미국인이 한층 더 상승적 기운을 타고, 「미국은 정의의 제국다워야 한다」라고 "Imperialism(제국주의)"나 "colonialism(식민지 주의)"를 명백하게 정당화 하는 논조마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9/11 사건 후, 미국과 영국의 논조로 갑자기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 평론가로서 유명한 田中宇는 2001 년 11 월 12 날짜의 자신의 메일 매거진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부활하는 식민지 주의」라는 제목을 붙여 그러한 논조를 소개했고, 나도 그것들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었다.

소개되어 있는 것들에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다. 2001 년 10 월에 「시카고·선·타임즈」에 실린 논설 「제국주의가 유일한 해결책(Imperialism Is the Answer)」이라는 제목의 내용은, 「서구 제국주의」로서 영불은 일찍이 인도나 아프리카에 대한 직접 통치를 행하고 있었지만, 그 후 아랍 지역에 대해서는, 「포스트제국주의」의 형태로 간접 통치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그 나라의 정치가들은 서구의 직접 통치의 시기에 비해 부패가 심해져, 현재까지 사람들에게 피로움을 계속해서 안겨 주고 있다. 혹은 이 경우, 민중의 정치 비판을 그 나라의 정치가들은 미국 때문에 얹혀있는 문제라고 살짝 내용을 바꾸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반미화의 길로 들어선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직접 통치의 「제국주의」의 원래 가진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논의이다.

또, 「Wall-street journal」 2001 년 10 월 9 일 날짜의 「테러 대책의 결정적 해결책은 식민지 주의(The Answer to Terrorism? Colonialism)」라는 제목의 기사도 소개되고 있다. 저자는 Paul Jonson 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이지만, 여기에서 서구 제국에 의한 지중해역의 식민지화는 해적 행위나 백인을 노예로 무역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투쟁으로서 행하여졌던 것이라고 한다. 즉, 그러한 해적=「국제적 무법자(International Outlaws)」에 선박의 정박기지를 제공하고 있던 알제리, 튀니지, 트리폴리를 점령하고 처음으로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해진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의 해적」=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스트도 그러한 행위를 근절 하기 위해서는 테러리스트를 옹호 하는 중동 제국을 군사 점령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田中宇는 이 논문에 대해, 서구가 아랍 제국에 있어서는 「해적」이었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지만, 일본의 우익을 무색하게 할 만큼의 「학자」가 구미에 많다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되고 있는 논문에는 「Guardian」 2001 년 10 월 31 날짜의 「새로운 제국주의의 시대가 왔다(Welcome the New Imperialism)」라는 것이 있다. 이것도 또한, 니알·파그손이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에 의해 주장된 것이지만, 식민지 주의를 포기한 후의 통치 방식을 「비공식적 제국주의(Informal Imperialism)」라고 부르고, 그리고 「새로운 제국주의(New Imperialism)」로 당당히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새로운 제국주의는 「정치적 세계화」라는 이름 하에서 벌써 동쪽 티모르, 코소보, 보스니아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는 아프가니스탄뿐만이 아니라, 파키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구미가 손을 댈 수 없게 되기 전에 식민지화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 비용적으로도 싸게 먹힌다 라고 말하고 있다. 영국의 학자는 다소는 좀 더 낫겠지 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그렇지도 않은 것임을 이것을 통하여 너무 극명하게 알게 된 듯싶다. 하지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이러한 「논의」는 실은 단순한 「논의」는 아니다. 사실은 이미 현실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식민지 주의=군사적 제국주의는 이미 현실에서 수행되고 있는 현실의 정치인 것이다.

「제국주의」로서의 현재

실은 이러한 논의를 내가 본 장 첫머리에서 소개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일본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론 중에서도 세계의 현상 이해를 「제국주의」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논조는 매우 약해져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참가하고 있는 연구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었던 적이 있었다. 거기에서 「제국주의」라는 규정에 반대한 사람들의 근거는 현대에 있어서 군사적인 충돌이 주된 국면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현대는 「제국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의 이해는 조금 치밀하지 못했던 듯 하다. 군사적인 개입이 지금 확실히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그러한 현상이해의 예리함의 결여가 사실에 의해 증명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대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 현실의 「전쟁」이 없으면 「제국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만약 현대 세계를 「제국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라고 규정한 Lenin 의 기술이 잘못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의 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러한 이론적 혼란을 우려해, 현대 세계가 「제국주의」인 것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그것은 「전쟁」과 「제국주의」의 관계에 너무도 오해가 많기 때문이었으며, 혹은 전쟁 없는 상태를 제국주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해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서도 말한 것이지만, 「미국의 평화」는 「미국 제국의 평화」였고, 「몽고의 평화」는 「몽고 제국의 평화」였다. 「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었고, 평화는 제국주의가 아니더라도 하는 것은 아니다. 제국주의도 세력균형(Power balance) 위에서 「안정」되어 있는 한, 「평화」가 되지만, 그 세력균형의 변화 과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재분할」이 필요하다. 이것이 Lenin 의 제국주의론이며, 이 논의에는 「안정기의 제국주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동아시아의 역사에 있어도 「중화 제국」에게 주변 각국이 「조공」했을 때, 혹은 그 「조공」이 실로 중국의 고도의 문화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그러한 국제 관계는 「평화적」이었지만 대등 평등한 것은 아니었다. 「왜왕 히미코」는 「위황제」의 신하였으며 대등하지 않다. 평화로운 동아시아 세계의 질서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역시 「제국의 평화」였던 것이다.

레닌의 「제국주의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확실하게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는 제국주의라고 주장한 Lenin 의 「제국주의론」으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Lenin 은 이 책에서 자본주의 마지막 세계 시스템은 제국주의이며, 그것은 불균등한 각국 자본주의의 발전 배경에서 국제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 논리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선진 자본주의와 후진 자본주의의 사이의 자본 희소성의 차이는 각국간의 이윤율 격차를 일으키게 해, 그것이 국제 자본 이동을 선진 자본주의로부터 후진 자본주의로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후진 자본주의의 성장률이 선진 자본주의의 성장을 상회하는 형태로 각국 자본주의는 불균등하게 발전한다. 그리고 그 시간이 경과 하는 동안에 강대화한 후진 자본주의는 거기에 상응하는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요구하지만, 선진 자본주의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그러한 요구를 하고 식민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 세계의 재분할은 전쟁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네덜란드와 영국, 스페인과 미국 사이의 식민지 쟁탈 전쟁이 이러한 이론적 토대로서 일어난 결과이며 또한 제 1 차 대전도 그러한 전쟁이었다.

이러한 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좀 더 이야기하자면, 제 1 차 대전에서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도 또한 제 2 차 대전이라고 하는 제국주의간 전쟁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했었다. 또 이 전쟁은 분명하게 「선진 자본주의」인 영국, 프랑스, 미국에 대한 「후진 자본주의」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재분할 요구로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제국주의 전쟁의 불가피성」이라는 Lenin 명제의 권위를 한층 더 높게 했다.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사가 자랑하는 꽤거의 하나이다. 하지만, 한편, 일본내의 일본 평화 운동 속에는 「마르크스주의」가 자랑하는 이러한 정확한 이해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도 지금 지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끔 일본의 중국, 아시아에 대한 우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 문제에 너무 적용을 시킨 나머지 「일본,

독일, 이탈리아와 싸운 연합국은 평화의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7 월의 칠석 전후에 「일본, 중국 재 전쟁의 반대 모임」이 열리는 한편, 12 월 8 일 전후에 열리는 「반전 집회」의 「진주만 공격에 대한 사죄」와 같은 발언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식민지 침략의 전쟁과 제국주의간의 식민지 쟁탈 전쟁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결정적인 오해이다.

물론, 영미 제국주의가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에 반대해, 그러한 범위에 한해서만, 당시의 평화=반식민주주의 세력이 영미와 동맹을 맺고 있던 점, 이러한 의미에서 영미의 승리가 역사적 진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에 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중국에서의 제국주의적 이권의 유지에 있었다. 이러한 의미로 그들과 일본과의 투쟁은 제국주의끼리의 식민지 쟁탈전이었으며, 이러한 싸움에 일본인이 「사죄」해도 소용없는 것이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선제 공격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 문제는 이러한 사회과학의 레벨에서는 어쨌든 좋은 것이다. 식민지 쟁탈의 제국주의간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어느 쪽이든 선제 공격을 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선제 공격 문제」는 국제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레벨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이번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독일, 프랑스의 「반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전후의 「제국주의 전쟁」으로서의 미일 마찰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수십 년 전에 Lenin 이론이 설득력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도 또한 설득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써, 나는 실제로,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이 시작되기 전, 2 차 세계대전후의 수십 년간의 시기에 사실은 이러한 「Lenin 적 분쟁」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Lenin 「제국주의론」의 논리는 국제 자본 이동을 통해서 후진 자본주의가 선진 자본주의보다 빨리 성장을 해, 그 결과로 경제력의 균형의 변화가 전쟁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런 「전쟁」을 보다 넓은 의미로 「각국간의 정치 마찰」이라고 이해한다면, 전후의 미일 무역마찰이나 현재의 미중 무역마찰도 완전히 그 논리에 따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라우제비츠와 모택동은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라고 말해 전쟁과 정치의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취지로부터 나는 이러한 타입의 국제 마찰(국제 자본 이동에 의한 불균등 발전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분할을 위한 국제 정치 마찰)을 「Lenin 적 분쟁」이라고 이름 붙여 다른 국제분쟁과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통해서만, 이러한 무역마찰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미일 무역마찰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가 있다. 즉, 전후의 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포함한 상당량의 자본 유입이 있었고, 생산력을 급속히 확대해,

그 결과로서 미국 시장에 반대로 많은 상품을 대량으로 수출하게 되어 마찰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미일의 자동차 마찰의 경우,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자동차의 「세계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할이 즉 「세계 시장 분할」이며, 그 분할 비율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격렬한 공방이 산업 경쟁력의 불균등 발전을 배경으로 미일 정부간에 격론화 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미일 자본의 이익이 미일 정부의 각각의 이익으로 연결되고 결국 자본간의 투쟁이 정부간의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 「정부간의 투쟁」에 무기 탄약이 직접 이용되었고, 현재는 마스크이나 정부대변 학자나 외교 기밀비가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물론, 이러한 미일 마찰의 경우에 있어 주일미군의 존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든지(어느 경제 산업성 관료는 주일미군이 있는 한 미국에 결정적으로 반항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키신저는 오키나와 반환의 교환 조건에 섬유 제품의 대미 자주규제를 요구했지만, 이것도 군사적 존재가 국제적 시장재분할의 교섭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의 주요 생산품인 군수품의 수출은 원래 군사 동맹의 체결(군사적 지배)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라는 등, 미소의 「냉전」은 사실은 베트남이나 한국 등의 「좁은 지역」을 무대로 한 전쟁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도 상기의 의미로 충분히 제국주의적 재분할 전쟁이었다는 것이 여기서의 주장이다.

또한 부연하자면, 이러한 국제 자본 이동을 통한 각국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의 메커니즘은 뛰어난 수량적인 인과관계이며, 그 때문에 나는 수학 모델로서 표현하는 작업을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 관심이 있는 독자는 大西「환태평양 각국의 흥망과 상호의존—경도대학 환태평양 계량 모델의 구조와 시뮬레이션」경도 대학 학술 출판회, 1998 을 읽으시기를 바란다. 본서로 전개하고 있는 논의는 그러한 학술적인 성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자본주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이상, 이러한 「Lenin 적 분쟁」의 측면에 약간 중점을 두면서 현대의 「제국주의 시대」의 본질을 설명했지만,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 「제국주의 시대」는 반드시 분쟁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안정」의 시대에는 「제국의 평화」가 찾아 오는 것이며, 또 반대로 「안정」의 시기가 아니라고 해도 그 아래에서는 착실히 세계의 공업화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균등 발전」이란 후진 자본주의 제국이 자본의 유입에 의해 보다 빠르게 공업화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이것이야말로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적 과제, 혹은 그 「제국주의」의 역사적 역할이다. 자본주의가 어떤 특정의 단계인 특정의 역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같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세계 시스템도 「자본주의의 1 단계」로서 그러한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것을 포함해

이 「제국주의」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일본의 연구자중에서 가장 자각적으로 주장했던 마르크스주의자는 故 山口正行였다. 그 사람은 「자본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대월 서점, 1989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공산당 선언」이 지적한 것처럼, 「낡고 지방적이며 그리고 국민적인 자급 자족이나 폐쇄경제 대신, 모든 국민의 전면적인 교통과 그 전면적인 상호의존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다. 하지만, 1848년, 서로 대립하는 모든 국가를 단일의 「세계 시장」으로 통합하는 사업이 막 시작된 시기였다.

그 후 19 세기를 통해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세계 전체로 퍼져 나갔으며, 20 세기에 접어들어 「자본주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의 시대로의 이행이 진행됨에 따라, 경제생활의 국제화와 모든 국민의 상호의존 관계의 발전은,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 Lenin 은 「제 민족간의 여러 가지의 관계가 발전해 빈번하게 되는 것, 민족적 장벽의 파괴, 자본, 경제생활 일반, 정치, 과학 등의 국제적 통일의 형성」이 「성숙한 자본주의」의 「특징」이며, 「제국주의는 제 민족의 통합의 시대이다」라고 지적했다.」(44 페이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의 주장의 특징은 현재 「국제화」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의 기본은 자본주의의 본질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국제화」는 자본주의와 다른 범주의 것이 아니고, 그 내부에 위치하는 범주로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국제화」의 가장 발전한 단계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 시대」인 이상, 「제국주의 시대」가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가 된다. 그리고 확실히 20 세기는 서구, 미국, 일본의 제국주의가 세계의 모든 장소에 진출을 해서, 직·간접적으로 지배를 했던 시대였다.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자본주의적 사회화의 최고의 단계로서 이해된다.

물론, 장황한 것 같지만 Lenin 은 이 과정에서 동시에 생기는 모순의 면도 놓치지 않는다. 「민족 문제에 대한 논평」(「Lenin 전집」 제 20 권, 일본어역 대월 서점 11 페이지)이라는 논문에서는, 제국주의(「발전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주의적 국제화를 「제 민족 사이의 여러 가지의 관계가 발전해 빈번하게 되는 것, 민족적 장벽의 파괴, 자본, 경제생활 일반, 정치, 과학, 등등의 국제적 통일의 형성」의 「경향」을 나타내는 단계로서만 서술하고 있고, Lenin 이 카우츠키 비판으로서 주장한 것처럼 이러한 「국제적 통일」은 「세계 정부의 형성」은 아니다. 또 그것은 제국주의에서는 불가능한 과제이며, 그러한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일」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제국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여기서 마지막으로 「국제화」와 관련하여, 그 최고의 형태를 나타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상술한 의미에서의 「제국주의적 국제화」는 한층 더 진행되어 현대에서는 자본이 선진국을 이탈하여 계속해서 개발도상국에 흘러 들어가 수출 공업을 발전의 디딤돌로 하여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즉, 자본주의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는 일부 제국의 것은 아니고, 전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되어, 「제국민의 전면적인 교통과 그 전면적인 상호의존 관계」는 더욱 더 전세계를 뒤덮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이러한 특징을 보다 발전시킨 것, 즉, 자본주의의 최종 단계로서의 제국주의의 한층 더 발전한 단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는 단지 양적으로 그러한 특징이 강해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기업의 다국적화」의 단계를 경유해 「자본의 국제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 온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융상품 시장의 국제화」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요하다. 상품선물시장을 포함해서 각국 증권시장이 한층 더 국제적으로 통합되어 온 세상에 투자 자금이 돌아다닌다. 그러한 「금융 제국주의」라고 불러야 할 정도의 상황이 출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추진한 것은 미국의 클린턴 정권이며, 그것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강한 달러 정책에 의해 미국의 금융적인 세계 지배를 확립하려고 하는 전략으로서 추진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즉, 거액의 무역수지·국제 수지 적자를 그대로 두고 금융적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대미 유입을 위한 강한 달러정책이 필요 불가결했으며, 당시의 루빈 재무장관이 강한 달러 유도 발언을 반복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 처음으로 국제 자금이 월·스트리트에 모여, 그 투자자들이 세계의 기업 및 국가의 부침을 결정할 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이 결과, 미국식의 경영을 행하는 기업은 그들에게 호감을 받아 자금조달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자금조달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은 삼성이 증자를 하고 싶으면 미국인이 알 수 있도록 그 기업실적을 보이지 않으면 안되고, 종래의 부기나 회계의 방식에 의하는 것은 할 수 없게 되었다. 증권시장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해 세계의 회계기준의 일원화가 급속히 진행되게 된 것은 이러한 배경으로부터이다. 또 「국채 비율은 GDP 의 몇 퍼센트 이하이어야만 한다」라는 미국 기준을 각국이 충족하지 못하면 그 국채의 소화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다만 이번 전쟁으로 자신이 만든 그 기준을 간단하게 변경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American Standard」에 지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Global Standard」의 얼굴을 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패권국가 미국의 「전략」과 깊게 관련되어, 결과적으로 특정 국가의 특정 이익이 다른 이익을 해치면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현재의 국가간 마찰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여하튼 세계의 모든 기업의 자금조달이 국경의 개념을 넘어서, 세계적 규모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아는 사람들만의 자금 조달로 기업을 만들 수 있다면 주식의 상장도 미국식의 부기도 필요하지 않다. 반대로 말하면 세계의 자본주의는 이미 그러한 개인적, 지역적인 의미를 잃어버렸고, 세계를 지배하는 시스템의 일환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자본주의의 세계적 발전의 문맥으로, 즉 기본은 역사의 발전적 진행의 결과로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으면 세계화를 단순한 미국의 변덕스러운 「전략」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요지는 다국적 기업화의 끝에 도달한 금융상품 시장의 세계화로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도 「국제 자본 이동」으로서 특정 지워진 제국주의 시대의 소단계라고 하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Lenin 의 정의 이전에 「자유 무역 제국주의」라고 불리는 체제가 19 세기에 있었지만, 이것은 상품 무역과 이민만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그것이 자본주의적 국제화로서의(Lenin 적) 제국주의 시대에 돌입을 해서, 자본의 국제간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한층 금융상품 시장의 세계화의 단계가 되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상품의 국제화」에 대한 「자본의 국제화」가 제국주의 단계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그 최종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은 현재의 부시 정권과 같이, 세계의 군사적 지배를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의 평화」라고 하는 외관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것이 「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소말리아나 수단 등에서의 군사 개입이 실제로는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세계 지배 방법의 중점이 차이가 났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서의 서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방법은 국제 수지 적자를 한층 더 증대시키고 그러한 배경에서 계속 그 어려움이 커지고, 따라서 다른 종류의 제국주의=군사적 제국주의의 방향으로 부시 정권을 몰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 부시의 전략은 클린턴 전략의 불가피한 귀결이다. 발전한 「제국주의」의 단계에 있어서의 작은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 양자의 제국주의는 자국의 공업 생산력의 증대라고 하는 기본적 과제를 제쳐놓고 금융적 방법이나 군사적 방법으로 다른 나라 국민에게 떠 넘기려고 하는 의미에서는 「부패한 자본주의」이기도 하다.

제 6 장 제국주의론으로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론

「평화적」, 억압적 그리고 진보적인 제국주의

이렇게 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특정한 단계인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중요한 점은 그것이 아무리 「평화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종의 「제국주의」로서 타국에 대한 지배와 억압의 요소를 포함하는 있다는 점, 그리고 반대의 측면에서는 세계의 공업화라는 역사 진보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이론적으로, 혹은 원리적으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런데 우선 독자들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성격을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본 기업에게 「일본식 경영의 지속」을 단념시킬 때, 그것은 일종의 문화적 침략이면서, 또한 한층 진행된 경제 시스템의 폭력적 도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여야 한다. 나는, 碓井・大西 編 「포스트 전후 체제의 정치경제학」 대월 서점, 2001 에서, 현재의 일본이 명치 유신, 전후 개혁의 시기와 거의 동일한 커다란 구조 변혁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중심내용으로서 주장한 것이 노동자의 폐쇄적인 기업주의적 정신의 해방에 있었다. 노동자를 죽을 때까지 하나의 기업에 붙들어 매두는 연공서열제는 기업마다 특수한 기능을 배양하고, 또한 노동자를 기업에 충성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것은 동시에 혹독한 파로사 사회를 형성함과 동시에 기업내의 불상사를 노사가 일체가 되어 은폐시켜 버리는 기업체질을 낳게 하였다. 이른바 「민주 경영」을 포함해 최근 일본 사회의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던 불상사는 모두 이러한 이유에서 생겨났던 결과이며, 이것은 기업과 정치가의 유착의 근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사회의 현실을 바로 잡으려면 위에서 이야기한 기업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수술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러한 점에서 연공서열과 종신 고용제와 결합된 「폐쇄적 사회」의 해체를 추진시키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는 진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기업의 경영 방식을 표준화 하는 것에 의해 「기업에 특수적인 기능」의 필요성을 줄여나갈 수 있고, 통일된 양식을 통해 기업 내부 정보의 외부 공개도 강요하게 된다. 혹은 그 이상으로 노동자의 유동화가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해체해 불상사의 은폐를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기업으로부터 독립한 노동자의 정치적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지도 모른다. 이 변화에 수반되는 「아픔」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속도의 조정이나 이행 조치 등이 적절한 수준에서 필요하지만, 여하튼 커다란 틀에서 생각한다면 여기에 역사의 방향성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부언 하자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추진하는 고용의 국제화의 영향도 크다. 본서 제Ⅲ부에서 논하는 일본인의 민족적 폐쇄성의 극복에 있어서도, 일본 국내에 상당수 많은 외국 기업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 일본인 노동자가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인 자신이 다른 많은 외국에서 일하는 것이 그러한 폐쇄성의 극복에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는 다시 제Ⅲ부에서 논하고 싶다.

이라크의 「해방」과 반미 운동

이와 같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문제를 원리적으로 깊이 논의하는 중요성은, 실은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가 「해방」되고 그것이 그 자체로서 진보적인 영향을 가졌던 것이, 우리의 반전 여론에 하나의 이론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의 미디어의 보도에는 많은 거짓말과 은폐가 있다고 해도, 이라크의 「해방」이 향후의 이라크의 역사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있음직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일부의 반전 여론은 「우리의 운동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허탈감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구 소련의 붕괴를 보고 자본주의 국가의 국내 사회주의 세력이 깊은 허탈감에 빠져 마치 습격을 당한 모습처럼 보여졌던 것과 유사하다.

내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몇 번이나 말하고 있듯이 제국주의도 그것이 「제 국민의 전면적인 교통과 그 전면적인 상호의존 관계」를 촉진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진보적」이지만, 그것이 제국주의로서 행사되어 지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것이 된다. 혹은 보다 한정적으로 말하자면, 군사적 제국주의도 또한 진보적인 효과는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은 평상시의 제국주의(「제국의 평화」) 이상으로 폭력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폭력적이 아닌 방법을 요구하면서 이라크의 민주화와 반전을 호소해 왔지만(후세인의 독재를 지키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미 폭력적으로 된 이상, 그 결과를 보다 진보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싸워왔던 것이다. 혹은, 보다 폭력적이 되지 않기 위해, 보다 진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미국의 점령 정책과 싸우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2 차 대전의 시기에 일본의 진보적 세력이 했던 것과 동일하다. 전쟁에는 반대했지만, 일본의 정치체제를 지키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미국의 점령 정책에는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므로 말을 바꾸어 한번 더 설명하자면, 위의 문장에서 쓴 것처럼 이 「진보성」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과 같은 수준에 있는 진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제국주의의 대외 직접투자가 「문명화」나 공업화를 진행시키는 등 이러한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지만, 본서에서는 벌써 그 이외의 예도 많이 들어 왔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들이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에 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가 「그렇게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본의 아니게」된 결과이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하자면 본의가 아님」인 귀결이다. 우리가 몇 번이나 말하고 있는 아랍 제국의 예로 말하면 미국이 자국 본위로 아랍 제국들을 「친미화」하지 않아도, 그것을 위한 경제 지원이나 군사 지원, 부흥 지원이 반대로 그들의 자립과 반미를 촉진한다고 하는 효과이다. 제국주의가 그 의도로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의도에 반해

긍정적인 귀결을 이끈다는 것이 여기에서의 포인트이다. 진보적 세력이 단지 제국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항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만 여하튼 이와 같이 생각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 양면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가 눈 앞에 보이기 시작한다. 나의 생각은 자주 오해를 받으므로 명확하게 해 두고 싶지만, 나는 그러한 「양면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양면이 불가분의 하나로서 통일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본질적으로 나쁜 면을 제거하고 좋은 면만을 남길 수는 없다. 이것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악」을 어떤 역사 단계로서 우리가 수용 해야 하는가와 본질적으로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겨우 나쁜 면=「아픔」을 완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이 역사 법칙이 어떠한 의미로 「필연」인지, 어떠한 의미로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불가분이 되고 있는지를 깊이면서도 또한 정확하게 인식하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보다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

계급 사회에 있어서의 「억압」의 본질

여기서 우리는 조금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가 보자. 예를 들어, 계급 사회에 있어서 국가는 계급 억압의 수단일까 아니면 공동 업무의 담당자일까 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것은 계급 사회에 있어서 「억압」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론상의 과제였다. 왜냐하면, 이 논쟁에서는, 공동 업무(「正」)와 억압 수단(「反」)의 2 자 선택의 논의로 되어 있고, 「지배」자체가 공동 업무인 것(「습」)이 이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는 어떤 단계에서 보호무역 정책을 채용한다. 이것은 국가의 단위로 유치 산업을 발달시킨다고 하는 공동 업무의 일부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일부 업자를 억압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국가는 그 결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인 이상, 그것은 전면적으로 억압 수단이다. 하지만 그러한 억압 자체가 어떠한 사회적인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혹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는 장기적으로는 존속 할 수 없다(이것이 진정한 「정당성」이다). 계급 사회에 있어서의 「억압」은 원리적으로 이와 같이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이러한 이해로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권력적 강제에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국가가 강제 장치라는 이해는 간단하지만, 이러한 이해 밖에 할 수 없다면 다른 한편의 시장경쟁은 일체의 강제가 없는 「자유 사회」가 되고, 따라서 그것이 이상사회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시장도 또한 이익이 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잘라 버릴 것을 강요할 것이고, 쇠퇴 산업에게 어려움을 안겨 주게 된다. 이것은 권력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강제가 아닌 것은 아니다. 본질에 대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제국주의」는 군사적인 방법에 의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든, 시장적인 방법에 의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든, 그것은 본질에 대해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후자의 체제=글로벌라이제이션하에서 피억압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이 그랬듯이, 이 역사적 전환이 진보적인 것일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 없이는 그 운동도 또한 성공할 수가 없다.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추세를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그 역사적 진보성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 하는 것은 그 운동 자신에게도 아픈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의 억압성을 발견해 그것을 비판하고, 따라서 그것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은 동일한 잘못이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인 것이다

사회화의 추진자로서의 강자

그러한 시각으로부터 본 절에서는 잠시 「비억압적 방법」으로 보이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억압과 피억압의 대립 구조를 볼 수가 있다. 우선은 이 체제하에 있어서의 각국간의 이해 충돌의 구도부터 검토해 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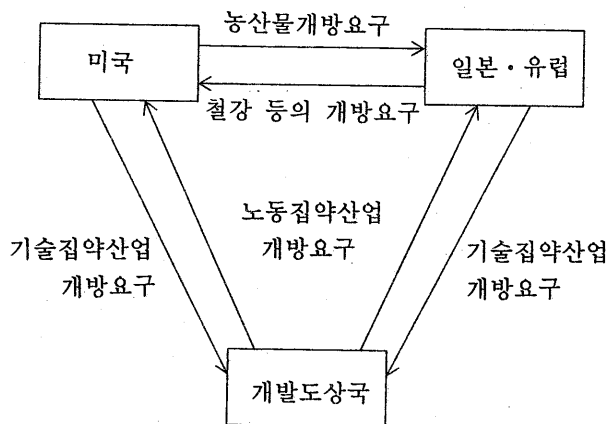
그것은 최근의 WTO 교섭의 대립 구도로서 다음과 같은 삼극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① 미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농산물과 공업품의 시장개방을 여러 나라에 강요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덤핑」을 비난한다. ② 일본·유럽 블록은 농산물에서는 보호주의를 지키면서, 철강 등 경쟁력 우위 산업은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면서 개발도상국에는 미국과 같은 비난을 한다. ③ 개발도상국은 농산물을 미국으로부터, 공업품을 선진국 전체로부터 보호하면서도, 노동 집약 산업 (또한 일본과 유럽의 농업)에서의 선진 각국의 보호주의를 비난한다 라는 것이다. 혹은 보다 간략하게, 미국 농산물의 높은 경쟁력을 선진국의 예외로서 취급하면, 선진국 블록과 개발도상국 블록이, 전자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후자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경쟁력을 무기로 서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시장개방」=글로벌라이제이션을 요구하는 측은 해당 산업에 강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측이며,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측은 그 산업에 대해 약한 경쟁력 밖에 가질 수 없는 쪽이다. 즉, 강한 쪽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추진해, 약한 쪽은 그것을 저지하려고 한다. 이것은, 각국 국내에 있어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의 power balance 에도 반영되어 이 power balance 가 각국 정부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주장 가능한 것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그 하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추진자는 「강자」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이 약자의 이익 대표인 좌익이 줄기차게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또 미국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추진자가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산물에 대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짐과 동시에, 항공기나 금융 서비스 등의 경쟁력은 더욱 절대적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본질이 자주「미국화」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위에서는, WTO 라고 하는 무역관련 기관을 예로 들어 말했지만, 국제 회계 기준의 통일 문제 등 다른「글로벌라이제이션」분야에 있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둘러싼 대립구조



도시·농촌간 대립 문제로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 해서 「강자」에 의한 억압과 그것에 의한 사회 진화로서의 성격을 「국가론」으로 인식한 다음에는, 이러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한 대립을 도시·농촌간의 대립 문제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도시=선진국과 농촌=개발도상국의 사이에서 본래는 산업간의 대립이 국가간의 대립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는 그 배경에는 자본·임금노동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나의 생각에서는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만 한다.

즉 예를 들어 지금 농업과 전통 산업이 쇠퇴 과정에 있는 농촌을 너리에 그려 보자. 이 때, 이 마을에 지금 유일한 희망으로서 근대 공장이 건설된다고 하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공장 건설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그 제품을 팔기 위한 시장도, 또한 그것을 위한 자금도, 농촌은 시의 적절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도시로부터의 자금, 도시로부터의 투자자, 그리고 도시로의 제품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공장은 도시의 주민에 의해 투자되고 관리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공장의 자본가는 도시 주민이며, 농촌

주민은(실업 혹은 도시로 이주하지 않는 한) 노동자 밖에 될 수 없고, 그 결과 자본과 임금노동과의 관계는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에, 즉 자본과 노동의 대립은 도시와 농촌의 대립으로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논하고 있는 문제에서는 여기서의 「도시」란 선진국이며 「농촌」이란 개발도상국이다. 개발도상국의 자본의 대부분은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에 의하는 것이고, 그 본사는 선진국에 위치한다. 이때, 이러한 국가간 모순의 배경에는 산업간 모순이 있고, 또한 자본 소유자의 대부분이 선진국인 일 경우 그것은 한층 더 계급간 모순으로서 이해될 수가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과정을 세계의 모순되지 않은 일원화로서가 아니고, 국가간 대립으로서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한다고 해도, 그 본질은 계급간 모순과 깊게 관련되고 있다.

이 관점은 나의 생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앞서의 도시·농촌간의 대립에 있어서, 농촌에도 자본이 축적되고 기업가가 나타나게 된다면, 거기에서의 대립은 이미 도시·농촌간의 대립이 아니고, 양 지역에 걸치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대립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농촌의 근대화, 즉 농촌에서의 자본주의 성숙 없이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 개발도상국을 어떻게 공업화해 갈지가 남북의 국가간 모순의 해결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이며, 적어도 그러한 의미에서는 제국주의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한 개발도상국으로의 자본주의의 확장, 공업화는 역시 역사상의 진보적 현상으로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적 「공장법」으로서의 국제협정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제국주의 시대의 국제적인 여러 특징은 마르크스주의가 개척한 다양한 이론 장치의 국제 문제에 대한 응용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적인 수준에서의 자본과 임금노동의 대립의 「해소 장치」로 이해되고 있는 공장법=국가 개입에 의한 노동조건의 개선 장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국가간에서 체결되고 있는 각종의 노동조건에 관한 제 협정이 이것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아에 위치한 나이키 공장에서의 노동조건이 문제화 되어 「불공정상관행」(이것으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종의 공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이라는 내용으로 결국 소비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압력으로 나이키는 아시아 공장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원칙적으로 「공장법」으로 이론화 할 수 있는 이상,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그 적극성이 자본간 모순의 산물이라는 것을 동시에 이해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자본의 운동은 항상 선의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자본이 그것을 할 수 없는 자본을 몰아낼 목적으로 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들이 갑자기 인도주의자가 된 것은 아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이키의 예로 말하자면, 캘리포니아의 약소 자본이 나이키의 아시아 공장을 몰아붙였기 때문에 「약자」의 大資本에 대한 투쟁인 것과 동시에, 미국 자본의 아시아 자본에 대한 공격이기도 한 것이다. 이 점에서는 이 「공장법」이 아시아의 노동조건에 적극적인 작용을 행하는 것과 동시에, 저임금으로 밖에 승부할 수 없는 아시아의 공업화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영향도 함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각국이 이러한 노동조건에 강제에 반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미국에서도, 이러한 High Standard 를 개발도상국에 억지로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격렬하다(예를 들어 이 논쟁을 취급한 M.E.Williams, ed., Child Labor and Sweatshop, Greenhouse Press, 1999 에서도 3 개의 논문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이러한 국가 규제가 자본간의 격렬한 경쟁의 산물이라는 성격상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의 노동자 편에서 보면, 이러한 규제에 의해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주는 것의 이익과, 어쨌든 투자가 계속됨에 따라서 결국 경제발전으로 장기에는 소득도 상승한다고 하는 이익의 무게가 어느 쪽이 더 나을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의 중국에서와 같이 후자 쪽 효과의 발현이 매우 빠를 때에는 후자의 이익이,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전자의 이익이 우월하다. 덧붙여 어느 쪽의 면이 더 우위를 점할까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지표는 현지 노동자가 어느 쪽을 원하고 있을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때 일본의 인도네시아 등으로 진출한 자본은 후자의 예로서 현재의 중국에의 외국 기업에의 진출은 전자의 예라고 생각된다.

「정당화 수단」으로서의 국제기관의 역할

그러나, 이와 같이 보호주의의 혐의가 있는 「국가」규제가 아닌 좀 더 직접적으로 「글로벌한 이익」을 대표하는 제도적인 모든 장치에도 주목해야 한다. 유엔이나 세계은행, WTO, IMF 등의 국제기관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기관도 유엔의 상임이사국 제도나 IMF 와 자금 제공국가=선진국과의 관계의 깊이 등 민주주의 원칙에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상회담, G7, NATO 등의 노골적인 선진국 동맹은 아니다(다만, 胡정권이 들어서고 중국은 정상회담에 읍져버로서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WTO 는 전 참가국 합의를 표면상의 결의수단으로 하고 있어, 그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가맹을 결정하게 한 커다란 이유였다. 이 원칙 아래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그것을 베이스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중국이 오키나와 서미트에 참가를 거부한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서미트나 NATO 등은 선진국 동맹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엔이나 WTO 등의 민주주의 원칙에는 그만한 신뢰를 두고 있는 것이다. WTO 시애틀 회의에서와 같은 소란이 일어나면서도, 어쨌든 현재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각 국가의 합의를 배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정당화의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이 결정이 그대로 「노동자 이익」의 반영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결론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의 이익」이 WTO 등의 무대에서 현실에 영향력을 가지게 된 근원적인 기초에는, 개발도상국 자신도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발전을 실현해서 그 이익을 국제기관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며,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이익이 아니고 그 산업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것 없이는 개발도상국도 WTO 가맹의 인센티브가 없었으며(「WTO 에 가맹해 수출을 강화한다」라는 중국의 가맹 동기를 보라), 또한 이것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국제총자본의 결정」을 실행하는 WTO 등의 각 기관에 가입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러한 국제 각 기관의 결정을 「국제총자본의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초국가적 이익」을 즉시 「超國籍 자본(transnational capital)의 이익」이라고 파악하는 논조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성급한 결론이다. 아직 국적을 가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자본의 이익 충돌의 과정에서 비롯된 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 이해일 것이다) 혹은, 이들 국제기관의 설립 목적이,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통상의 촉진에 있고 산업 보호가 아닌 것(한층 이것 때문에 개발도상국 상품의 통상 촉진도 「목적」에 적합한 것)에 주목하면, 이러한 제 결정은 단순한 「諸 이해의 조정」은 아니고 본질적으로 자본의 「초국가적 이익」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초국가성」은 국제의 무대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별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면, 그것을 국제사회에서의 결의에 상정시켜서 결국 결정하게끔 하는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반대로 말하면, 클린턴 시대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현실에는 「미국의 이익」이라는 성격을 현저하게 가지면서도 국제사회에서 강한 지도성을 가지고 있던 것은 이러한 「초국가성」의 성격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 의한 2 차 세계대전후의 「국제화」 주도는 그 이전과 같은 식민지나 세력권의 설정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다만 여러 나라에서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요구한다고 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것은 전후의 국제화에 보다 큰 정당성을 준 것이고, 그것은 현재의 WTO 등의 정당성에도 연결되어 있다. 「자유무역」이 「보호무역」이나 「블록화」와 틀리게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상호의존성을 높여 세계적인 이익과 결합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도 또한 같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정당화 이데올로기의 역할

따라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마지막으로 분석을 해 두고 싶은 것은, 그러한 이데올로기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유 무역의 정당성」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추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이데올로기 만이 아니고, 다양한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 세계에서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구미제국의 성격을 「민주주의 진영」으로 정당화 하는 이데올로기도 또한 그 하나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추진자인 미국은 이러한 백 년 간의 전쟁은 항상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의 전쟁이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실제, 전쟁을 일으키는 편에 서면 어느 나라라도 유사한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하지만, 어쨌든 이 감각의 연장에서 여러 나라를 「민주화 한다」라는 명목하에 다른 종류의 수단으로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주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악의 축」은 아니라고 해도) 「독재국가」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계경제 시스템 속으로 중국을 유도하여 넣었다라는 것이 미국의 논리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러한 범위에 한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숭고한 목적을 가진 가장 정당한 정책·전략이라는 것이다. IMF의 개입으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의 정권의 교체가 초래되었지만, 이것도 숭고한 목적의 달성인 것이다. 다만 물론 우리의 눈으로부터 보았을 때, 호메이니의 이란을 타도하기 위해서 후세인의 이라크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지원을 하거나(이란 이라크 전쟁이 발생했을 때), 베트남이나 그라나다, 소말리아에 개입했던 것은 도저히 「민주주의」의 이름값도 못한 행위이다. 현재의 반 테러 전쟁이나 이번 이라크 전쟁도 또한 같다. 이것들은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과학적인 이데올로기는 아니고, 정치적 행위의 정당화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이데올로기에 속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때로는 무수한 선량한 주민을 살해하고, 다른 종교나 가치관을 탄압하고 사람들의 이권을 유린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측면이 있다고는 해도, 한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여하튼 이러한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없으면 제국주의의 행동은 곤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미국은 국제연합을 무시했지만, 그 때문에 미국은 많은 나라에게서 비난을 받는 거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당화 수단의 있고 없음의 차이는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다. 물론 이 「정당화」에는 다른 가치관을 압살하는 작용이 있어,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배의 정당화를 꾀하는 제국주의는 그 자신의 가치관이 다른 가치관에 비해 우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허위」일지라도 그것 나름대로 보편적인 가치를 기치로 내걸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계급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도 계급 지배의 도구로서 기능하고, 또한 때로는 전쟁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한다(미국!!)는 것이다. 그러나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 국가가 존재하고, 그러므로 피지배계급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며, 미국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지원을 한 남 베트남의 티우(Nguyen Van Thieu)나 한국의 박정희, 대만의 장개석, 이란의 후세인, 필리핀의 마르코스, 이란 혁명전의 팔레비 정권, 칠레의 피노체트,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트와 싸우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어쨌든, 그 목적이 미국의 세계 지배에 있었다고는 해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데올로기를 지배자가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정당」한 것이 아니면 「정당성」을 주장하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피지배계급의 도구로서도 때로는 기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당화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양면을 봐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로서의 생산력 발전

다만, 각각의 사회는 각각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것에 상응하는 이데올로기를 산출한다. 그 때문에, 이러한 이데올로기나 여러 제도가 밖으로부터 주입되는 것 만으로는 해당 사회의 발전은 바랄 수 없다. 그러한 이데올로기(여기에서는 가치관)나 여러 제도가 그 해당 사회에서 정말로 「정당」한 것이 되는 역사의 발전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조건이다. 中村正則은 일찍이 각국 민주주의가 일인당 GDP 의 어느 단계를 돌파하고 나서 처음으로 성립된다고 말했지만, 이것도 또한 하나의 예일뿐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완수하는 역할의 제한적인 성격을 한가지 말해 두고 싶다. 그것은 영국에 있어서의 동물 애호의 사상 및 제도와 그 야만스러운 식민지 지배와의 연속성에 관한 문제이다. 영국에서는 1820 년경부터 동물 애호에 대한 시민적 움직임이 있어, 1840 년경에는 그러한 활동이 「왕립」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즉 국가 정책이 되어) 동물 경찰이 설치되게 되었다. 2002 년 7 월의 NHK TV 의 보도에 의하면, 예를 들어 어떤 가정이 애완동물인 래트에게 먹이를 충분히 주지 않을 경우 동물 경찰이 출동해 강제적으로 이 래트를 보호한다. TV 에서는 경찰들에 의해 보호되어 마냥 행복한 래트가 비추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은 그 당시 중국에 아편을 수출해, 야만스러운 전쟁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 차이를 어떤 식으로 파악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전쟁 수행을 위한 일종의 정당화 이데올로기로서 동물 애호의 사상을 파악할 것인가 라는 것이 여기서의 문제이다. 동물조차 보호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상은 휴머니즘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지만, 휴머니즘과 결합되기 전에 「문명화되어 있지 않은 뒤떨어진 제 국민」에 대한 「우리들 문명화 된 시민」으로서의 자민족 우월감과 결합되어, 그것이 「문명화되어 있지 않은 뒤떨어진 제 국민」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정당성을 주었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정당화 이데올로기에 긍정적인 역할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과대 평가도 또한 금물이다. 식민지 국가의 굶주림이 치유되는 일 없이 아프리카에서 원숭이의 몰래 고기 잡기가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수렵을 했던 사람들」이 노동자로 바뀌고, 또한 그 소득수준의 상승과 함께 인간에 대한 인간의 대우가 개선되는 일 없이, 「동물 애호」는 해당 사회의 기본적인 과제가 되지는 않는다. 생산력 발전을 기초로 한 해당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 발전 없이는 본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사회적인 가치 규범은 생산력에 의존한다)것이 사적 유물론의 정립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생산력」의 규정성의 문제를, 지금 문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제 관계, 국가간 관계의 레벨로서 고찰하는데 정확히 좋은 대상은, 중국 전국시대의 법가=한비자, 유가=공자의 관계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양자가 모두 전국의 혼란으로부터 전국적(=「중화 세계」로서는 「세계적」)인 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후자는 「덕」과 「예」에 의해 그것이 실현된다고 했고, 전자는 힘과 이익 배분 없이 질서는 형성 될 수 없다는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현실은 전자의 정당성을 진 제국의 성립이라는 형태로 증명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제국=세계 질서의 유지에는 결국 유가의 이데올로기가 불가결했다 (진 제국 단명과 전한 무제에 의한 유교의 국교화). 우리의 말로 번역을 하면, 「생산력」이라든가 「군사력」이라고 하는 「하드 파워」의 궁극적인 규정성(「정」)과 거기에 덧붙여서 「정당화 이데올로기」와 국제기관이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의 보완적인 역할(「반」)이다. 양자가 모두 중요함과 동시에, 전자가 보다 규정적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사적 유물론에 있어서는 이것을 「토대의 규정성」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즉 선진국과 비교해서 개발도상국의 보다 빠른 경제성장으로로서의 불균등 발전이 모든 문제 해결의 전제이다라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제 7 장 글로벌라이제이션론에서 제국주의론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론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는가

따라서, 본서 전체에서의 나의 주장은 현재의 세계를 제국주의론의 문맥으로 파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래 「글로벌라이제이션론」으로서의 현대인식이 국경의 자유화로 국가간 분쟁을 경시했던 것을 비판함과 동시에, Lenin 이 말하는 「불균등 발전」의 인식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 주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것을 우선 여기에서 보다 명확하게 논의해 두고 싶다.

예를 들어, 일반의 「글로벌라이제이션론」(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이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미국이 주도적으로 세계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반대해야 할 대상은 아니고, 세계에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나의 견해에서는 「세계에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평가가 그만큼 단순한 것은 아니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제국주의적 억압의 한 형태 혹은 한 시대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따라서 국가간 모순은 파워

밸런스가 변화 할 때 전쟁을 불러 일으킨다. 이와 같은 격렬한 알력을 수반한 것이라는 인식이 이 글로벌라이제이션론에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글로벌라이제이션론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단지 비판만 하는 수준의 향간의 「반글로벌라이제이션론」으로 팬츠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면 그렇지도 않다. 이 「반글로벌라이제이션론」에 대한 언급은 지금까지 일체 하지 않았지만, 실은 이것도 또한 반대의 「글로벌라이제이션론」으로서 위에서 말했던 것과 매우 비슷한 논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주장은 간단하게 이하와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즉,

미국이 주도적으로 세계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반대해야 할 대상이며, 세계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평가가 부정적과 긍정적과의 역방향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전반의 「미국 주도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평가는 동일하다. 여기에서는 「강한 미국」이 모두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을 잘 보아 두어야만 한다. 전자의 「글로벌라이제이션론」에서는 세계에 군림하는 강력한 미국이 긍정되고, 후자의 「반글로벌라이제이션론」에서는 그것을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배」로서 거부되고 있다. 하지만 두 개 모두 「강한 미국」이라고 하는 공통의 인식이 있다.

그러나,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나의 기본적 주장은 그 전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관련되어 있다. 어느 정도 「미국의 주도성」은 물론 인정하지만, 반복해 주장하고 있듯이 나의 주장은, 그것이 제국주의 시대의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파워 밸런스의 변화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점, 그리고 그 파워 밸런스의 변화 자체가 역사의 법칙이다 라는 점이다. 상술의 두 설명과 같이 간결하게 나의 입장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미국의 주도성은 불균등 발전의 법칙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와중에 국가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 자체도 그러한 지배자의 지위에 대한 쟁탈전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차이를 재확인하면, 포인트는 「강한 미국」이라고 볼지 어떨지, 혹은 보다 정확하게 「강한 미국」이 부동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생성·발전 과정을 거쳐 지금은 쇠퇴 과정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맥으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 이것 없이는 현재의 전쟁을 이해할 수 없고, 기본적인 인식에서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장에서는 다시 불균등 발전의 문제를 논한다. 하지만 우리는 벌써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이론을 앞장에서 설명했으므로, 본 장에서의 불균등 발전론은 그러한 특수한 단계로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을 통한 불균등 발전이다. 보다 구체적인, 전체적으로 불균등

발전의 이해를 본 장에서 논의한다.

무역 경쟁에 있어서의 공수의 역전

그런데 우선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서의 국제 무역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 선진국 특히 미국과 후진 공업국 사이의 경제력의 불균등 발전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의 GDP 의 반 이상을 점하던 시대는 끝나고 그 무역수지는 1960 년대 말에 적자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을 대신해서 일본이, 또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캐치·업이 있었고, 지금은 중국 한 국가에서도 전세계의 에어컨의 50%, 시계의 46%, TV 의 36%, 냉장고의 21%, 철강의 15%가, 카메라의 58%, 오토바이의 43%, 전화기의 58%가 생산될 정도에 이르렀다. 부연하면, 이러한 숫자는 1999 년 실적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2000 년의 자료로 보자면 에어컨은 60%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 무려 1 년 만에 10%나 확대되어 있다. 또, 전자 정보기술 산업 협회가 금년 4 월에 발표한 예측에서는 표 1 에 있듯이 이 분야의 12 개의 품목 중에 8 품목에서 중국이 2003 년 중에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지금은 누구나 현재의 중국을 대단하다고 표현하지만, 실제의 상황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측을 넘어서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다.

● 표 1 주요한 전자기기의 생산점유 세계 1 위 국가·지역

품목	2003 년 예측	2000 년 실적
DVD-ROM 드라이버	中国(40.5)	日本(40.8)
디지털 카메라	日本(55.6)	日本(73.1)
DVD 플레이어	中国(62.2)	中国(36.2)
자동차 네비게이션	日本(62.9)	日本(73.3)
PDA	中国(29.8)	調査対象外
노트북	中国(35.2)	台湾(55.2)
하드디스크 구동장치	싱가포르(32.9)	싱가포르(41.3)
휴대 전화기	中国(30.1)	유럽(43.3)
컬러 텔레비전	中国(26.7)	中国(24.2)
데스크 탑 컴퓨터	中国(36.5)	北米(27.0)
카 스테레오	中国(24.7)	北米(17.5)
VTR	인도네시아(27.5)	中国(21.1)

주) 괄호내의 숫자는 점유율%. 전자정보학술산업협회전자부품부회 조사)

출처) 「일본경제신문」2003 年 4 月 23 日

그리고 물론, 이들 생산된 상품의 상당수는 세계 시장으로 공급되며, 그것은 「가전 대국」 「자동차 대국」이었음이 분명한 일본에 대해서조차도 중국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2002 년에 혼다는 중국에서 OEM 생산한 오토바이의 수입을 개시하였고, 냉장고를 중심으로 海彌 集團가 전자레인지로 格蘭仕 集團이 일본을 향하여 수출을 개시했다. 여기에서는 일본에 대해서조차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일본 정책투자 은행이 2002 년 8 월에 발표한 중일 제조업 경쟁력 비교 리포트 「세계의 공장, 중국의 약진과 실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리포트에서는 조사 15 개 업종 가운데 가격·기술 모두 일본 우위인 산업은 현재로서는 자동차와 IT 산업뿐이고, 기술만으로 우위인 산업은 조선, 철강 등 13 업종, 가격에서 중국이 우위인 산업은 10 업종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여기서 가격·기술 모두 우위로 여겨지는 자동차도 향후 5-10 년이 고비이고 그 후는 역전되는 상황도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걱정은 실제로 보고서 발표 직후에 경제산업성이 제기한 자동차 업계의 기술 유출 방지책에서도 보여진다. 중국은 향후 거대한 자동차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경계로부터, 일본 자동차 업계로부터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이지만, 이러한 호소가 성공할지 어떨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종래 기술 유출에 경계적이었던 일본의 가전 산업도 그 방침을 전환해서, 중국 공장에의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계속해서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하이 히타치는 세탁기에 대해, 소니는 하이비전에 대해 2002 년부터 신제품을 일본보다 중국에서 선행 판매하게 되어 있다.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어도 중국 가전 업계는 자력으로 기술개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기술 이전을 꺼리는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판단이 자동차 업계에서 나타나는 것도 그리 멀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혹은, 이러한 생산력·경쟁력의 변화에 대응해, 선진 국가가 보다 보호주의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출몰하고 있다. 미국이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일본에 각종의 수출 자규제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미국의 보호주의적 움직임에 ①대통령의 무역 촉진 권한을 제한하는 의회의 움직임(「데이튼·크레이그 수정 법안」) ②신 농업법의 성립에 의한 사실상의 농업 수출 보조금의 지출 결정 등이 그러한 일례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이 미국에서 멈추어지지 않고 일본에도 파급되어 통산성→경제산업성의 「자유 무역」의 간판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바뀌어 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파, 표고버섯, 타올과 같은 품목의 대 중국 세이프가드는 형식은 들쭉치고 실질적으로 발동되었고 2002 년 여름에는 한국·대만의 섬유 메이커에 대한 반덤핑 과세의 실시가 시작되었다. 반덤핑 조치는 세이프가드의 경우와 달라서, 보상의 제공이나 상대국의 대항 조치의 수락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남발·남용이 눈에 띄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 정부는 종래의 반덤핑

조치에 일반적으로 반대를 해 왔지만, 그 일본이 지금은 그 「남발」의 개시를 시작하고 있다. 일본의 무역흑자도 1999 년에 12.3 조 엔이었던 것이, 2000 년에는 10.7 조엔, 2001 년에는 6.6 조 엔으로 2 년 만에 반으로 줄어드는 스피드로 급감하게 되었다.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화되는 것도 이미 시간의 문제이다. 이들 모든 변화는 21 세기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생겼다. 즉 21 세기란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덤핑 조치의 남발 문제에 대해 또 하나 정보를 제공하자면, 이 부당한 남발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받은 건수가, 미국도 EU 도, 그 나라가 이의제기를 한 건수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WTO 를 무대로 한 1995 년부터 2002 년 5 월 23 일까지의 모든 분쟁을 망라한 다음의 제 2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전체 개발도상국의 이의제기 건수 27 건이 이의제기를 받은 18 건의 1.5 배가 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개발도상국은 이미 단지 보호무역을 요구하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난 하는 쪽에서 있는 것이다.

● 표 2 WTO 의 분쟁 안전국·지역별 매트릭스

피제기국 제기국	미 국	E U	캐 나 다	일 본	브 라 질	인 도	아 르 헨 티 나	그 외 선 진 국	그 외 도 상 국	합 계
미국		27	3	6	4	3	4	16	7	70
EU	24		3	6	3	6	6	4	5	57
캐나다	9	6		1	1	1	0	3	0	21
일본	7	0	1		1	0	0	0	2	11
브라질	7	4	3	0		0	2	2	1	19
인도	6	4	0	0	1		1	2	1	15
아르헨티나	1	0	0	0	0	0		1	2	4
그외선진국	14	4	1	0	0	3	0	10	9	41
그외도상국	13	15	0	0	2	0	2	5	12	49
합계	81	60	11	13	12	13	15	43	39	287

주) ①대상은 1995 年부터 2002 年 5 月 23 日까지의 WTO 분쟁건수

②선진국은 OECD 가맹국(2002 年 5 月 現在) 및 EU 이고, 도상국은 그 이외의 국가이다.

③복수국가 이의제기건수는 각 이의제기 국가에 대해 한 건으로 했다.

출처) 梶田朗・安田啓 「WTO 의 분쟁 안전과 안티 덤핑 발동의 현상과 과제」

『일본무역진흥회 센서』 2002 年 8 月號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인식해야 하는 것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추진자」로서의 「강자」도 현재에는 크게 교체되려고 하는 조짐이 비친다는 것이다. 금융 강국인 미국이 금융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추진자로서 당분간 계속 그 역할을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적어도 무역의 측면에서 볼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이 무역자유화의 저항 세력으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금은 선진국=추진 세력, 도상국=저항 세력과의 도식은 단순하게 그대로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의 비 생산성 부문과 함께 「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외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간신히 공업화를 선언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유린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수구적인 「반글로벌라이제이션」론은 점점 더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대 세력, 선진국의 이해 대표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띄어가고 있다. 「마르크스파」에 「반글로벌라이제이션」의 논자가 다수 눈에 띄는 오늘 날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이다.

불균등 발전의 현단계

따라서 현재의 「글로벌라이제이션」상황 속에서 불균등 발전의 스피드는 상당히 빠르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농촌·도시간 모순」에서의 대립은, 「농촌」의 성격을 가진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 국제적인 「공장법」의 옳고 그름은 개발도상국의 공업화의 스피드에 의존하고, 국제협정·국제기관의 「초국가성」도 또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의 정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진보적」이데올로기의 역할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판단해 보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대체로, 「자본주의적 사회화의 최고의 단계로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렇게 해서 개발도상국에도 자본주의적 사회 관계를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고, 그것은 개발도상국에도 개발도상국 출신의 자본가 계급의 출현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단지 외연적인 공업화의 진행일 뿐만 아니라, 그들 나라에서의 내포적인 자본주의의 발전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재 어느 단계에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일까.

그런데, 어느 범위에까지 이 공업화가 파급되어져 있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세계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를 정리한 것이 제 3 표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표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2 개 구분 사이에 「후진국」이라고 하는 범주가 놓여져 있다. 이것은, 공업화의 이룩에 성공하지 못한 선진국의 성장률을 밀돌고 있는 모든국가·모든지역=「개발도상국」과 구별된 「개발도상국」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동아시아 제국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 국가들은 Lenin 「제국주의론」에서 「후진 제국」이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했다. Lenin 의 문장에서는 이와 같이 쓰여져 있다.

● 표 3 세계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과 공업화의 지구적 확산

구분	선진국	후진국	개발도상국	<패권국>	WTO
일차대전까지	영·불·(미)	독·이·(일)	AALA	영국	Bloc 화
이차대전까지	미·영·불	일·독·이	AALA	미국	Bloc 화
20C 후반 (미일마찰기)	미·영·불	일·독· NIES	ALA	미국	자유무역
21C 초반 (미중마찰기)	유럽·미·일· NIES	동아시아	ALA	중국의 대두	Bloc 화
21C 중반	유럽·미·일· 동아시아	동아시아· LA	아프리카		
21C 후반	유럽·미·LA ·아시아	아프리카			

즉, 「발전의 불균등성도, 대중의 절반 기아적인 생활 수준도, 이 두 가지 모두가 이 생산 양식의 근본적, 불가피적인 조건이며, 전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여전히 자본주의로 존재하는 한, 과잉의 자본은, 그 나라 대중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사용되어 지지 않고--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자본가의 이윤은 내려가기 때문에--, 국외로, 후진 제국으로 자본을 수출함으로써 이윤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들 후진 국가들에서는, 이윤은 비싼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자본이 적고, 지가는 비교적 낮고, 임금은 낮고, 원료는 싸기 때문이다. 자본 수출의 가능성은, 일련의 후진국이 이미 세계 자본주의의 거래 속으로 편입되고, 철도 간선이 개통되거나 부설 되기 시작해 공업 발전의 초보적 조건이 보장되고 있는 등등에 의해, 만들어진다. 또한, 자본 수출의 필연성은, 소수의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가 「무르익고», 자본에 있어서는(농업의 미발전과 대중의 빈곤이라는 조건에서) 「유리한」 투하의 장소가 없는, 이러한 것에 의해 만들어 지기 시작한다.」 (「제국주의론」 「Lenin 전집」 제 22 권, 일역 278 페이지)

따라서, 여기에서는 광의의 「개발도상국」도 그들이 모두 선진국의 자본을 받아 선진국 이상의 속도로 성장한다고는 진술되지 않았다. 「철도」로 상징되는 사회자본 스톡의 前提인 축적=원시적 축적의 진행 상태가 그러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다. 따라서 제 3 표도 그것을 모방해 개발도상국을 둘로 구분해, 성장 궤도에 오른 국가들을(이것도 Lenin 의 통칭에 따라서) 「후진국」이라고 부르고,, 그 이외의 협의의 「도상국」을 「개발도상국」이라고 적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한 지역씩 「후진국」으로 이행하는 국가를 우리는 나열할 수 가 있고, 혹은 그러한 캐치업 단계로부터 피캐치업 단계=선진국 단계에 이른 제국을 나열할 수가 있다. 「1 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

「2 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 「20 C 후반」 기, 「21 C 초반」의 시기에 관한 나의 이해는 거의 다른 의견과 일치될 것이다. 「21 C 중반」 기, 「21 C 후반」 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 2 차 대전직후에 세계의 GDP 의 과반을 차지하던 미국의 GDP 가 지금은 20%의 수준을 밀리게 되고, 도저히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있던 중국이 지금은 고성장의 한가운데에 있다. 사람들의 예상을 넘어서 불균등 발전이라는 철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다소의 시기적 오산이 있었다고 해도 남부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성장의 물결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22 세기의 초두에 우리 인류는 「개발도상국」도 「후진국」도 없는 시대, 즉 남북 격차가 소멸된 듯한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거기까지 앞으로 백 년이라는 지점까지 와 있다. 동아시아의 급속한 캐치업은 그것을 믿게 하기에 충분한 희망의 근원이다. 「현대」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아닌, 또한 경시하지도 않는, 그러한 시점으로부터 이러한 현 국면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세계의 불균등 발전을 소득 분포의 관점으로부터 보았을 경우, 이것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평등화이기는 하여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최대의 규모에서는 「불평등화」라는 상황인식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반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주장이지만, 이 논의의 본질은, 세계의 소득 분포가 1,1,1,1,2(세계의 1/5 이 공업국)였던 것이, 1,1,1,2,2(세계의 2/5 로 공업국이 확대)로 된다는 것에 있다. 소득 분포의 불평등성을 측정하는 통계 지표에 「지니(Gini's)계수」라는 것이 있지만, 이 지표로 보는 한, 전자의 지니계수는 0.13 인데 대해서, 후자의 그것은 0.17 이 되어, 후자가 보다 불평등이라는 결론이 된다(숫자가 큰 것이 불평등). 하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제 3 표에 나타난 것처럼 이것은 세계 모든 국가가 공업화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계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의 예로 말하자면, 세계의 소득 분포가 한층 1,1,2,2,2 로, 1,2,2,2,2 로 변화하고, 마지막에는 2,2,2,2,2 에 도달하는 대국적인 평준화 과정에서의 하나의 단계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아시아 위기」가 보여주는 미국 패권의 후퇴

이렇게 해서 현재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불균등 발전의 一段階로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하나의 귀결로서 생긴 아시아 위기가 「후진국의 캐치·업」의 불균등 발전의 반례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1997·8 년에 생긴 이 위기도 1·2 년 만에 위기를 경험했던 모든 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더욱 이것을 기회로 삼아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등 아시아는 아시아에서 반대로 자신의 성장의 찬스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시아 위기를 단지 「위기」로만 파악하는 이해는 단편적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세상의 상식과는 반대로 이 아시아 위기가말로 미국의 쇠퇴의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시아 위기 발생의 메카니즘을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즉 원래 이 「아시아 위기」의 발생은 일본 엔에 대해서 지나치게 평가 절상의 상태에 있던 아시아국가의 통화가 비극적으로 조정(하락)된 것으로부터 생긴 것이지만, 그러면 왜 그렇게 자국 화폐가 상승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그것은 연동(페그)하고 있던 미국 달러가 무역수지를 무시한 루빈 미 재무장관에 의한 강한 달러 정책에 의해 실질적 가치보다 달러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더욱 이 강한 달러 정책의 원인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제 5 장의 끝에서 말한 것처럼, 1971 년 이래 장기에 걸친 엔에 대한 달러의 하락 경향이 지속되는 상황이 유지되는 한, 감가를 싫어하는 국제자금이 미국으로 모이지 않고, 따라서 원래 무역적자에 의한 지불 초과 상태에 있던 것이 한층 더 자금부족의 상태로 빠져 미국 경제의 붕괴와 금융 센터, 뉴욕의 지위 붕괴가 일어난다고 하는 전후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 강한 달러 정책이 얼마나 자의적인 정책이었는가는 당시의(실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무역수지 증대가 얼마나 급속하게 증대를 하고 있었는가를 보면 곧 알 수 있다. 1991 년에 일단 670 억 달러에 바닥을 친 무역적자는 이 시기의 강한 달러 정책으로 아시아 위기 직전의 1997 년에는 1800 억 달러까지 일직선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다. 본래는 절도를 지켜 각국 통화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기축 통화국가가 자국 우선의 태도를 취한 것으로부터 달러 연동제를 채용한 동아시아 각국 통화를 엔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따라서 그들의 무역수지를 더욱 악화시켜, 마지막에는 무역수지 악화에 의한 「중앙은행의 외화 준비 부족」을 꿰뚫어 본 투기꾼의 공격을 받아 통화가 폭락. 또한 폭락에 의해 자금이 급속히 도피해 경제는 붕괴. 또는 통화 하락→수입 가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도 통화 가치의 하락에 박차를 가해 대처 불능 상황이 된 것이었다. 이 기간의 환율의 움직임은 1993 년 제 4/4 분기부터 1998 년 제 4/4 분기까지의 각국 최고 레이트를 1로 설정하고, 물가조정 후의 실질 환율의 추이를 본 다음의 제 1 그림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결국 일본 엔에 대해서 발생한 각국 통화의 상대적 평가절상을 해소했던 것이 아시아 위기였다는 점을 알게 된다. 즉, 여기에서는 미국의 자의적인 강한 달러 정책이 일본 엔과 동아시아의 각국 통화와의 밸런스를 무너뜨려, 그것이 이러한 파멸의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그러니까 IMF 가 이 문제로 정말로 개입 해야 할 곳은 미국 재무성과 뉴욕 연방은행이었다).

물론, 동아시아 각국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무역적자 체질이나 단기자금에의 과도한 의존 체질이 바로 그것이다. 또는 환율 정책은 좀 더 무역 관계가 긴밀한 일본과 좀 더 밀접하게 그리고 그 무게중심을 더 두지 않으면 안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伊藤隆俊의 공동연구(Ito, T., Ogawa, E. and Sasaki, N.Y., 1998, "How did the Dollar Peg Fall in Asia?"일본 경제학회 1998 년 대회

제출 논문)가 제공하고 있는 다음의 두 번째 그림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이 그림으로부터는 타이의 수출 동향이 대 달러·레이트가 아닌 대엔 환율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특히 통화 위기 직전의 움직임에 주목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타이의 그림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의 아시아 국가들도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아시아 통화위기까지의 각국 실질 환율의 추이 (최고도달점을 1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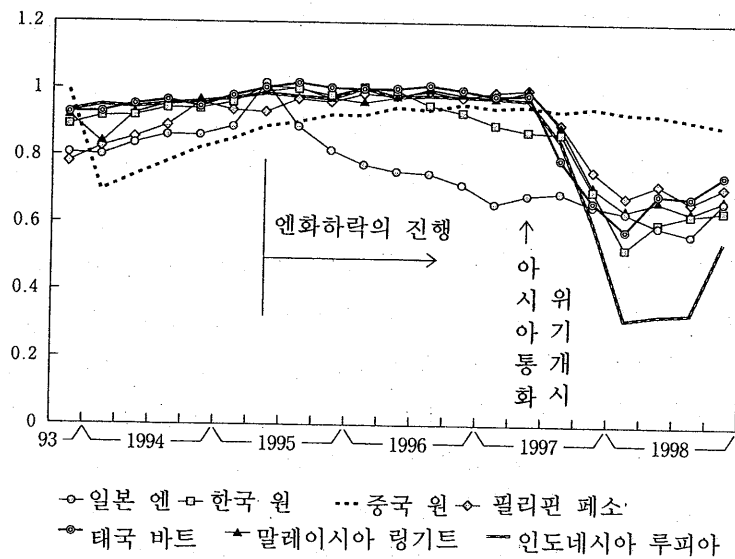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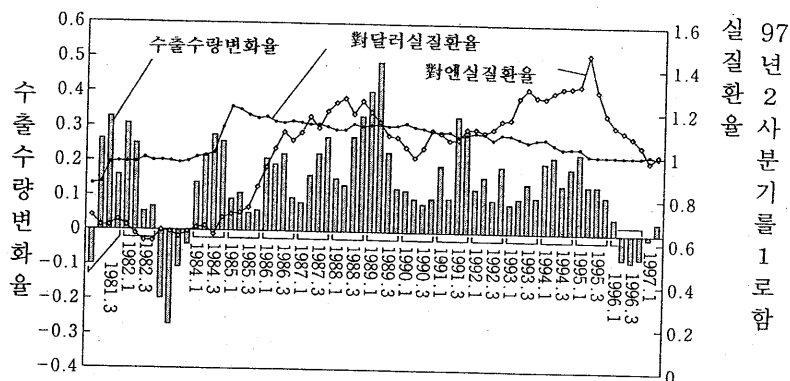


그림 2 달러가 아닌 엔 환율에 영향 받고 있던 태국의 수출 신장율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본래 그들이 대일 중시적이어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지위 저하와 그들의 무역적자는 대미적자가 아니고, 대일무역적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 금융에서는 세계의 센터로서 존재 할 수 있지만, 이미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없는 미국의 쇠퇴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 덧붙인다면, 미국의 자의적인 강한 달러 정책 자체가 그 수출 경쟁력의 상실(에 의한 무역적자의 증대)의 결과인 것도 반복해서 말하고 싶다. 대체로, 국제 금융에서는 미국이 일극 지배를 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고 있지만, 본래 그 기초이어야만 하는 제조업은 완전히 약체화되었다. (혹은 이 강한 달러 정책에 의해 한층 더 약체화 과정에 있다). 현재는 국제적 불균등 발전의 이러한 국면에 있는 것이다.

혹은, 좀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인식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누적채무는 상시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이전의 숫자이지만, 멈추는 장소를 모르는 무역적자의 누적으로 벌써 1.5 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금리를 연율 5%로서 매년 750 억 달러의 금리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채무가 무한 팽창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미국이 매년 기축통화국가로서 자동적으로 입수하는 달러 판매 수입 200 억 달러를 제외한 550 억 달러로 계산을 해도 이 금액은 일본이나 중국 이외에는 가능 할 것 같지 않은 상당한 무역 흑자 금액이다. 즉 현재 눈에 보이는 무역수지 적자가 일변해서 거액의 무역흑자국으로 전환하는 것 없이는 변제 불능인 금액에 도달해 버리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본질적인 달러 불신의 근원이 되어 자의적인 정책 없이는 강한 달러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근원적인 자금부족 국가가 장기에 국제 금융의 중심을 담당할 수 없다. 미국은 기축통화국가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현재 국제 금융 센터로서 군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현재」는 그렇다라는 것이고, 계속되는 역사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 위기도 또한 「미국 쇠퇴」의 하나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쇠퇴와 「일본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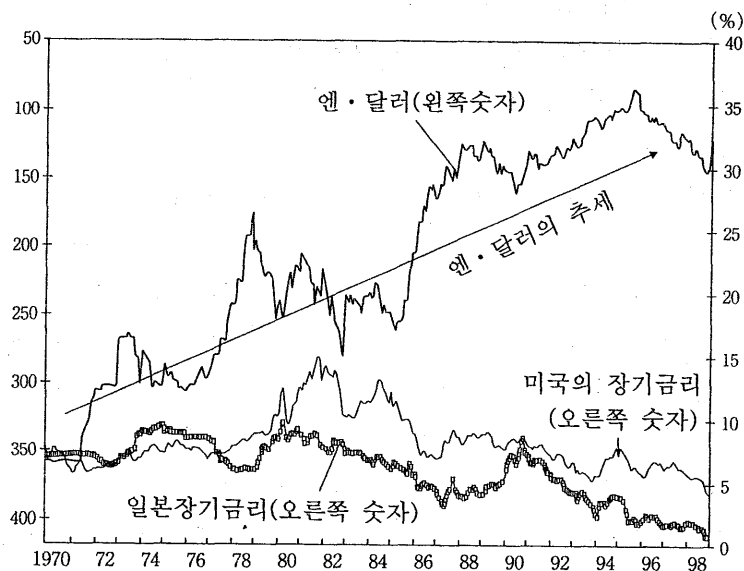
그런데, 이 아시아 위기와 일본의 장기 불황, 즉 「일본 위기」에도 「미국의 쇠퇴」가 그 결정적 요인으로서 깊고 깊게 관련되어 있다. 이것도 또 세상에서 큰 오해를 부르고 있는 이상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한 이유는 현재도 아직 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는 불량채권 문제의 역사적 원흉인 버블 경제가 미국의 대일 정책으로 인하여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버블 경제는 필연적으로 버블 붕괴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면 왜 버블 경제가 생긴 것일까. 이 물음에 답을 하려면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미국의 대일 정책, 혹은 일본 측의 대미 추종 정책이 무엇인가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스토리는 엔 달러의 환율이 변동 환율제로 이행한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다. 다음의 그림 3은 미국의 국제 경제학자 R.I. McKinnon 가 Asian Economic Journal, Vol.

12, No. 4, 1998 에서 발표한 논문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전에도 말한 것처럼 주기적인 변동 부분을 무시하면 변동 환율제 이행 이후의 엔 달러 비율은 상당히 일정하게 변화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McKinnon 에 의하면 연이율은 4 퍼센트이며, 그 때문에 장기평균적으로 달러 자산은 엔 자산에 비해 평균적으로 4 퍼센트의 실질적인 가치가 감소한다. 따라서, 그대로 두면 미국의 금융자산은 모두 일본으로 도망쳐 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장기금리는 일본의 금리보다 4 퍼센트 높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당시의 미국 경제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억제하고, 또한 주가를 인상하는 것 같은 고금리는 바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짜내진 「정책」이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Ultra C」였다. 즉,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의 국내 정책이 좌우된다. 이러한 터무니 없는 것이 미일간에 합의되었다. 당시 자주 「미·일간의(많은 경우 독일도 더해진) 협조 금리인하」라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서 떠들썩 하게 이야기되었지만, 이것이야말로 확실히 미국의 금리에 일본(이나 독일)의 금리가 연동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 NHK 미국 총국장인 日高義樹는 그의 저서 「일본 아직도 독립하지 못하고」(集英社, 1996 년)에서 佐藤·田中の 정권 교체기부터 일본의 「외교」가 소멸하고, 외무성은 단순한 미국의 대리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말했지만, 이 시기는 정확히 오키나와 반환에 의한 「본토의 오키나와화」라고 불렀던 시기인 것과 동시에, 환율이 변동제로 이행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림 3 엔, 달러의 추이와 대미협조 저금리 정책의 실패



(출처) Asian Economic Journal, vol. 12, No.4, 맥키논 논문에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강요당한 일본의 저금리가 일본 경제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것은 없지만, 실제로는 대단한 문제를 일으켰다. 버블이다. 미국의 금리는 그림에서 보듯이 1980 년대의 불황의 심화에 따라 경향적으로 떨어졌지만, 그것과 함께 일본의 금리는 극도로(라고 해도 물론 현재만큼은 아니겠지만) 저하되었고, 그 결과로서, 버블 경제가 일어났던 것이다. 물론, 이 버블은 너무나 이상한 것이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금리 인상의 시도가 일본은행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그럴 때마다 달러 폭락의 조짐이 나타나 미국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일본은행도 금리의 인상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하나가 1987 년의 블랙·먼데이이다. 이것을 당시의 일본은행 이사인 鈴木淑夫의 증언으로 회고 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지금이니까 말을 합니다만, 나는 그 당시 내부에 있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재할인율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말 12 월에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려 왔습니다. 혹시 일본은행보다 분데스 뱅크(독일)가 먼저 올릴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일어났나요. 10 월에 블랙·먼데이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의 트리플 약세입니다. 뉴욕에서 주가, 채권 시세와 달러 시세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이 조금씩 금리를 올려 와서, 재할인율을 올릴 것임에 틀림없다고 시장이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 돈은 미국에서 나와, 일본이나 독일을 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트리플 약세가 일어났습니다. 87 년 10 월의 블랙·먼데이로부터 89 년 5 월까지, 일본은행은 국제적인 정책 협조를 위해서 돈에 묶여있었던 것처럼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이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반영구적 저금리, 반영구적 금융완화와 같은 기분으로 와~와 달려서, 그 버블의 소란을 일으켜 버렸습니다.」(1995.12. 8 의 강연으로부터. 「경제 과학 통신」 제 90 호 90 페이지로부터 옮김)

결국 버블 경제는 장기에 걸쳐 방치되어 주가·지가가 다 오른 1989 년이 되어 금리를 인상한 결과, 이번은 주가·지가가 대폭락을 해서, 그 후에 대량의 불량채권을 떠안은 최악의 결과가 되었다. 이것이 「정책불황」이라고 이야기 되어 지는 이유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본의 각 금융기관의 투기적인 태도가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하지만 앞의 인용에도 있는 것처럼, 일본은행 당국이 대미 협조 정책에 묶여져 있는 것을 시장에게 간파 당해 버리는 한, 그 시장은 저금리를 전제로 자산가치의 향후 동향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버블 경제와 그 붕괴에는 그 근본적인 곳에서 일본 외교의 대미 종속성과 미국의 제멋대로 식의 대외 정책이 있었다. 혹은 보다 본질적으로 말해, 역시 달러의 장기적인 신뢰 저하와 그것을 고금리로 커버할 수 밖에 없는 미국 경제의 취약성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일본 외교의 시대 착오도 엄격하게 책임추궁을 받지 않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큰 역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한 패권국가의 쇠퇴 현상으로서 역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체제변혁론으로서의 평화 운동론

앞서의 과정을 거쳐서 본 장에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이야말로 불균등 발전 과정이며, 따라서 국경과 국가간 모순을 동반한 제국주의 시대인 것을 설명했다. 이것은 본서 제Ⅱ부의 제 5 장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지만 제국주의」인 것을 보여주며, 이어지는 제 6 장이 「제국주의이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인 것을 설명했던 것에 대응하고 있다. 같은 표현을 취하자면 본 장의 주장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야말로 제국주의」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3 장은 Lenin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제국주의론」의 틀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클린턴 시대의 특징적이었던 세계의 모습도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는 하나의 장치로서의 「이론」의 차원을 열어내었다. 그러면, 이러한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변혁론, 반전 운동론이 제Ⅱ부의 마지막에서 다시 논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전의 제Ⅰ부에서는 그 논리 차원적인 총괄로서의 제 3 장 말미에서 일종의 변혁론, 반전 운동론을 논했지만, 여기에서는 또 새로운 차원에서의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게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지금 한번 더, 제 3 장에서의 결론 부분을 되돌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불균등 발전은 국민 의식을 통해서 전쟁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만, 동시에 국민은 그 전쟁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지배층은 전쟁터로 향해 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코스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쟁의 진행은 국내적인 모순을 확대해 일반 국민과 그 정치 세력을 지배층에 대한 국내적 투쟁으로 향하게 한다. 대체로 이러한 결론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결론은 아직 제국주의론의 기본적 골격이나 국가론, 사회 변혁론 등의 이론을 특히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제Ⅱ부에 있어서의 그러한 제 이론의 검토는 거기에 어떠한 이해가 더해져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우선, 여기에서 되돌아 보고 싶은 것이 제 5 장에서 논한 제국주의론에 있어서의 「전쟁의 불가피성」론이다. 이것은 불균등 발전에 의한 각 국가간의 파워·밸런스의 변화가 요구하는 세계의 재분할이 서로의 협상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힘과 힘의 충돌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혹은 쇠퇴 국가는 자신의 쇠퇴를 자신이 컨트롤 해서 따라서 점진적으로 쇠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을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것은 결국, 구 시스템으로 이익을 얻은 세력이 그 이익을 자신이 포기하자면 얼마나 어려움을 수반하는 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은 이 「재분할」이 「패전」이나 「혁명」이라고 하는 절대적 강제력을 필요로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패전」은 둘째치고 이것은 국내로부터의 반전 운동이 성공하려면 「혁명」적인 강제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1 차 대전으로부터의 이탈이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형식을 필요로 한 것은 그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반전 운동론은 「국가론」과의 접점도 가지고 있다. 본서 제 6 장에서 본 국가론은 일국 단위에서의 「국가」의 이론을 제국주의 세계 지배의 정당성 문제로서 논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일국 레벨의 문제와 세계 시스템 레벨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논리로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세계 시스템 레벨의 지배자가 자신의 의지로 권좌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한 국가 내에서 지배층이 자신의 의지로 해야하는 어려움과 동일하다. 미국에 있어서도 반전 운동의 인식은 「레짐·체인지(체제 전환)」의 필요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의미에서 반전 운동이 가지는 체제론적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6 장의 후반에서 말한 논점, 즉 강자가 추진하는 세계의 사회화와 그 정당성 조달의 여러 수단의 문제도 반전 운동의 성격 부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현재의 미국과 같이 「강자」가 그렇게 계속해서 강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것은 서서히 세계의 사회화(자유무역)의 추진자에서 저해자로 전환된다. 이것은 본 장 전반에서 보았던 그대로이다. 그리고, 이 경우, 이 전환에 따라 강자는 세계 시스템상의 지배자로서의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따라서 이 구 지배자를 지위에서 끌어 내리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당성이 이동한다. 즉, 여기에서 반전 운동은 단지 국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보다 정당성을 가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이번 전쟁에서도 「세계의 연대」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혹은 좀 더 말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내적 반전 운동은 국제적인 연대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획득한다. 국제적인 불균등 발전이 가져온 국제적인 연대 행동, 보다 강하게 말하면 「국제적 노동자 계급」 성립은 이렇게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아시아 세기와 우리의 과제

제 8 장 동아시아의 쇠퇴 국가 제국주의 동맹

미국에 있어서의 「북한 문제」

「이라크 이후」의 미국은 시리아, 이란, 쿠바등과 함께 북한을 군사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워싱턴에서는 이러한 나라들과의 교섭이나 전략 책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군사적인 수단으로 세계의 재분할을 꾀하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실제, 미국 체제 중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행하여진 콜롬비아 대학의 많은 세미나와 외부의 라운드·테이블, 심포지엄 등에서의 미국인의 발언은 대체로 호전적이었다. 무슨 일이 있던 간에 핵무기의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분 핵실험 정지 조약이나 핵확산 금지 조약 등에서 일관해서 주장해 온 핵무기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독점을 허용하는」 정책으로서 역시 「미국적」인 주장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공격으로 저지해야 하는」 이러한 발언 또한 「미국적」인 발언이며 그리고 깊은 고려 없이 미국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부시 정권이 호전적이라기 보다 미국에 이러한 호전적인 논자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어, 그러한 논의가 어느 장소 어느 때이든 공식적인 형태로 의견교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만만보」라고 하는 메일 매거진을 통하여 자세하게 소개해 놓았다. 관심이 있는 분은 읽어주기를 바란다.

(www.yorozubp.com/0302/0212.htm)

그러나 이 미국내의 논의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중의 한가지는, 뒤에서 미국인의 「일본 전문가」에 대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인의 이 땅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문제」를 논하는 어떤 라운드·테이블에서의 사회자는 논의 중에 서울이 북한과의 군사 경계선으로부터 수십 킬로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또는, 앞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핵 보유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허락하지 않을 때는 공격」이라고 하는 두 「지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논의에 참가하고 있었다. 전장과 같이, 이러한 현상을 결국은 정보 부족에 의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타국의 이익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중심주의로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이정도 수준의 「동아시아 전문가」의 논의에서 군사 공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미국인의 인식과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중국 등의 「당사자」의 감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인구는 수도권을 포함하면 서울에 그 절반이 집중되어 있고, 경제력의 대부분도 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의 공격으로 이것들이 잿더미가 될지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전쟁은 절대 저지」라는 태도를 취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고, 일본도 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을 생각하면 거의 비슷한 국가적 이익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중국도 북한으로의 공격이나 붕괴, 그것이 미치는 엄청난 위험을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변국은 기본적으로 군사 공격에 반대의 입장이 명확하고, 이 때문에 부시 정권도 현재 이라크와는 다른 대응을 북한에게는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중국과 같이 강력한 국가를 주변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달리하고 있다. 혹은 좀 더 말해, 과거에는 구 소련의 영향하에서 중동에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던 미국이 그 붕괴에 의해 전쟁이 가능해졌던 것이고, 한편 동아시아는 중국의 대두에 의해 적어도 현재 그러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적인 불균등 발전을 무시하고 현재의 북한 문제를 논할 수는 없다.

미국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러한 「호전성」에 대해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다. 이 책에서 몇 번이나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분석들은 「제국주의론」이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의 목적을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과 같은 의미로 미국은 북한 문제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해 두려고 하는지가 문제이며 그런 의미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라크에는 석유가 있지만 북한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논의도 우리 분석에 있어서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즉, 미국은 북한을 점령하는 것으로 얻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적어도 시장으로서의 매력이나 자원 공급지로서의 매력은 제로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미국의 관심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 그 하나의 대답은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핵무기 보유의 저지일 것이다. 미국의 세계 지배의 주요 수단의 하나는 핵무기의 독점적 보유이기 때문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출·유출의 위험을 더욱 더 위험적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논의도 설득력이 있다. 북한은 현재 다른 나라에 상품을 수출하는 것은 거의 없고, 부족한 외화의 획득에 있어서 무기 수출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작년에도 북한의 예멘으로의 미사일 수출이 발각되었지만, 미사일 등의 기술은 전투기와 같아서 대량생산 이후 처음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무기인 것이다. 이것들이 「반미」 제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혹은 반미 테러리스트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국은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미국이 직접 핵 공격을 받을 가능성마저 생기기 때문에 더욱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을 「점령」해서 미군을 중국 국경까지 주둔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는 논의도 있지만, 주한미군조차 철수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의 위협」이 없는 현재의 시기에 미군이 중국 국경까지 장기에 주둔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 논의는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실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왜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에 연연하는가라는 것이다. 뉴욕에서 열린 북한 문제 전문가 重村佐藤의 강연에 의하면, 북한이 정말로 한국을 핵 공격할 가능성은 적다. 같은 민족을 핵 공격해 통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역사의 오점으로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북한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의 산업기반을 핵 공격으로 파괴해 점령을 실현해도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이유로부터도 이해할 수가 있다. 혹은, 재래식 병기에 의한 공격도 북한의 석유 부족 때문에 승산이 없다고 하는 것이 重村佐藤의 분석이다. 重村佐藤에 의하면, 북미합의에 근거한 원유 공급의 동결로 현재 북한이 1 년에 사용할 수 있는 50 만 톤 조금 넘는 석유(그 대부분은 중국의 공급에 의한다)로부터 빼낼 수 있는 가솔린, 제트 연료 등의 경질유는 더욱 그 양이 적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1 개월 밖에 전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남쪽의 주유소를 점령해 급유한다는 것도 전차나 전투기 등이 필요로

하는 양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 또, 보통 탄두에 의한 미사일 공격도 미사일은 한번 사용하면 끝이므로 그 병력은 전투 과정에서 급속히 축소된다. 이러한 의미로, 북한측으로부터의 개전은 거의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의 개발에 집착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외교 카드」로서 사용되고 있고 그것에 의해 타국으로부터 가능한 한 유리한 경제 지원을 얻는 것에 있다. 이것이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표명이 거짓말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즉 여기에서는 실제로 보유하는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는 외교의 현실이 좀더 중요한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서는 존재도 하지 않는 대량 살상무기를 있다고 밀어붙이는 것으로 미국은 이라크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역의 관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어쨌든 미국도 북한도 본래의 목적이 다른 곳=경제적인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미국은 이것을 의식해 핵 문제에서는 「교섭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한 보상도 해 주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반복해 표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섭을 행하고 있다. 교섭을 현실적으로 실행하면서 이와 같이 표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경제 지원이 사실상의 교환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이익」

이와 같이 생각하면, 미국의 주요 관심이 핵무기 문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지만(그렇기 때문에 정말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반대는 아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중시해야만 하는 것은, 이러한 「한반도의 긴장」이 미국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없으면 한국에서 미군은 주둔할 수 없게 되고, 일본에서의 주둔의 근거도 많은 부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은 소련·동구의 붕괴에 의해 독일, 프랑스 등의 미국 이탈이 단번에 가속화 한 것과도 관련된다. 냉전 구조는 미국이 자신에게 종속되는 제국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필요했던 것이었고 말하자면 그러한 의미로 냉전의 종결은 「미국의 패배」의 시작이었다. 지금은 동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친밀한 관계형성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냉전 구조의 와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가속도화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친미도」와 「친중도」를 측정하는데 유효할 수도 있는 지표의 하나로서 양국에의 유학생 파견수가 있다. 한국은 뒤에서도 언급하지만, 외국으로부터의 문화 수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나라로서, 2001년에는 미국에 4.6 만 명의 유학생을 보냈고, 이것은 중국의 6 만 명, 인도의 5.5 만 명, 일본의 4.7 만 명에 이어 4 번째이다. 일본의 1/3 밖에 되지 않는 인구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중국에는 그 이상의 6 만 명을 유학생을 보내고 있다. 1995 년, 북경 대학에 3 개월 체재했을 때의 나의 경험에서도 한국인 유학생수의

증가는 눈에 뵈 정도였고 한중의 국교 정상화 3 년째에 지나지 않는 이 때에 벌써 일본인 유학생 300 명을 웃도는 한국인 유학생이 북경 대학에 재적하고 있었다. 최근 한국의 「미국으로부터 이탈」 현상도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한국을 미국이 만류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수한 장치가 필요하다.

덧붙여 2003 년 4 월의 방미 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 많은 립 서비스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 한국의 「미국이탈」이 멈출 것 같은 인상을 가지게 하였지만 여러 나라의 동향을 한때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닌 그 놓여진 객관적 위치에서 볼 때, 역시 이 「미국이탈」은 구조적 추세인 것으로 파악해야만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향후 어떻게 움직이든 그 당선 자체가 이 구조의 산물이며, 이 압력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반미」감정은 미국 병사의 여중생 장갑차 압살 사건, 솔트레이크 올림픽을 거치면서 2001 년에 「매우 나쁘다」 「나쁘다」가 각각 4.1%, 17.6%였던 것이, 2003 년에는 15.5%, 26.4%로 급증하고 있다(삼성 경제 연구소 「한국인의 가치관, 급변과 혼돈」). 또한 다음의 표 1 과 같이 청년 세대의 「반미」화가 눈에 띄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들 2 가지의 대미 감정의 숫자는 2002 년 6 월의 아시아 정치경제 학회, 일본 대회에서의 박 보고로부터 인용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기본적인 「미국이탈」경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표 1 한국인의 세대별 대미 감정(단위:%)

	나쁘다	중간	좋다
20 대	51.7	40.5	7.8
30 대	43.0	51.5	5.5
40 대	31.9	56.2	11.9
50 대 이상	18.8	55.3	25.9

출처) 『중앙일보』 2002 년 12 월 15 일자

또한 이것과 관련하여, 미국이 작년 가을에 보인 「고이즈미 쇼크」의 충격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고 싶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미국 관심인 핵 문제가 북일 본 교섭의 범위 밖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반발, 미국과의 사전 상담이 없었던 것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그 충격의 크기는 바로 직전의 독일 총선거에서의 여당 사회민주당의 반미 캠페인과 관련하여 생각해야만 한다. 유럽에서 동맹국 독일이 걸어 왔던 길을 동아시아의 일본도 동일하게 걸어갈지에 대한 쇼크이며, 한층 더 고이즈미 북한 방문 직후의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 충격은 배가 되었다. 뉴욕의 썬크 탱크(think tank), 대학 연구기관, 재팬·소사이어티, 코리아·소사이어티 등 관련 기관은 일제히 강연회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내가 소속한 콜롬비아 대학에는 가또 주미대사가 일부러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적이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인 연구자들이 했던 일본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본 장 첫머리에서 말한 것 같은 내용이었다. 그들의 어조는 상당히 혹독한 것이었다.

일본 외교의 문제

따라서 고이즈미의 북한 방문 후, 일본 국내 매스컴의 비판이 아무리 혹독했다고 하더라도, 일본도 또 미국으로부터 자립해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문제는 이 북한 방문 자체에 있던 것은 아니고 납치 문제에 대한 대응의 미숙함, 그리고 그 이후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있다. 국무 차관보 케리 대통령 특사의 북일 회담 직후의 북한 방문은 重村도「분명하게 북일 교섭과 정상화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최신·북한 데이터 북」강담사 현대 신서, 2002 년, 203 페이지). 이 북한 방문에서 북한측이 핵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그 후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와 핵 문제를 본 교섭에서 같이 상정하겠다고 노선을 변경했고 이로 인해 국교 정상화 교섭은 암초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단절은 계속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미 단절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미국의 개입뿐만이 아니라 일본 독자적인 문제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원래 1990 년의 金丸信元 전 부총리와 渡辺誠 사회당 위원장의 북한 방문으로 시작된 국교 정상화 교섭이 생각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던 원인중의 하나는 외무성 측이 1965 년의 한일 조약(이것에 의해 한일의 국교가 정상화했다)과의 일관성을 고집하여「한일합방」을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결코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던 점에 있다. 실은 이 점이 한일 조약의 체결에서 한국내의 진보 세력이 당시 격렬하게 반대한 이유지만, 이 조약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무성은「보상」을 정식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따라서 정상화 교섭이 멈추어 있었던 것이다. 이번 고이즈미의 북한 방문에서 북한은 이 문제를 양보해, 실질적인 원조만 있으면 명분은 따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2 차 세계 대전 전의 한일합방이 무력에 의한 침략이었던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외무성이 계속 집착하는 상황에서 교과서 문제나 야스꾸니 참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북한측에서 보았을 때, 그것보다는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에서 보았을 때도, 일본 외교 자체가 상당히 동아시아의 단절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동아시아의 「팔레스타인 문제」

실제로 북한과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문제는 북한이 일본이 주장하는 것을 일일이 캐서 묻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에게 있어「북한 문제」인 것은 상대방에게 있어서는「일본 문제」인 것을 우선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인식한 다음 현재의「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중 4 개국의 태도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2 와 같이 될 것이다. 표 속의 왼쪽 두 개의 내용이

기본적인 교섭 사항이 되고 있는 문제이며, 오른쪽 두 개의 내용이 보다 근원적으로, 무엇을 이익으로 하고, 따라서 무력 공격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국의 납치 문제에 대한 태도에 ×표 그리고()를 붙인 것은 그것이 한국 국내에서는 큰 문제로서 논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 국내의 신문에서 이 문제가 대부분 보도되고 있지 않은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다.

● 표2 북한 관련 4개국의 태도

	핵무기개발에 대한 태도	납치문제에 대한 태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태도	무력공격에 대한 태도
일본	×	×	×	반대?
미국	×		×	있을수 있다
한국	×	(×)	○	반대
중국	×		?	반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한미일중 4 개국에 의한 공동 교섭의 기본적 목적이 핵무기 개발 문제에 있는 것이 우선 분명해진다. 일본은 납치 문제에 상당히 집착하고 있고 그것은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 공통의 과제로서 존재하는 것은 역시 핵무기 개발 문제이다. 중국까지 북한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배경은 그러한 것에 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각국의 의도 차이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에 폭격을 단행해도 본토에는 어떤 피해도 입지 않는 미국의 호전적 태도가 한쪽 극단에 있고, 납치 문제가 얽혀 있는 일본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러나 한국은 전쟁 회피의 이익이 강력하게 작용해 반대의 극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태도가 다른 나라와 가장 대조적인 것은 실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위에서와 같이 미국의 「이익」은 본질적으로 한반도를 분단시키는 것에 있었다. 한국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한국을 「반미화」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아랍, 이슬람 각국에서의 팔레스타인 문제 자체가 반드시 그들을 반미화시켜 버리는 것과 동일한 구조가, 여기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문제인 것이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의 문제」로서 모든 아랍 제국의 공통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한국·북한 민족 이외의 다른 나라의 관심으로부터 언제부터인가 멀어지는 경향에 있다. 이 때문에 한국만이 열심히 관계 개선→관계 강화→통일에의 노력으로 대북 외교를 실천하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각 나라의 「통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할까. 미국에 대해서는 벌써 「분단이 이익」이라는 틀 속에서 보아 왔지만, 진정한 문제는 일본이나 중국의 태도에 있다. 미국에서 북한 문제가 문제시 될 때에는 항상 「통일은 주변 각국의

불이익」이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앞에서 이야기한 加藤 주미대사도 그 강연에서 주저 하지 않고 「중국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이것은 일본 외무성이 중국에 대해서 그러한 「공통 이익」을 전제로 한 공동 보조를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 일본국내에서도 우익적 논조에는 그와 비슷한 것이 이따금 등장한다. 우리 자신 우리들을 객관화해 바라보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일본은 이웃나라 한국이 통일에 의해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현재의 상황에서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독일 통일 이전, 일시적으로 프랑스는 독일통일을 바라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실제로는 현재와 같이 양호한 양국 관계를 쌓아 올리게 되지만, 그러한 대국적인 관점이 아직 일본에서는 형성되지 않았다. 일본도 또한 이러한 의미로 「제국주의적 분단」을 초래한 한 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한 입장에 있는 것일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도 또한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몇 개의 객관적 「국익」을 가지고 있다. 자주 이야기 되는 것이 통일에 의해 「한국」이 중국 국경까지 올라오면 한국의 민족주의가 중국 조선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그 독립의 움직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듯 한다. 이 관측이 올바른지 어떤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향후 중국이 급속히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통일 한국은 그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예를 들어 한중의 GDP 를 생각해 보면, 환율 인하로 1991 년에 중국의 GDP 가 한국 GDP 의 1.32 배로 축소되었고, 또 재차 환율 인하로 1994 년에는 1.37 배까지 축소되었지만, 현재는 3·4 배의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고, 문제의 환율도 절상 압력하에 있다. 중국은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큰 경제력을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서 통일 한국을 「위협」이라고 보는 견해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경제력의 불균등 발전은 중국을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편협한 태도를 취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의 이해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한미일중 4 개국 사이의 국제 관계는 종래의 한미일 vs 중국의 구조로부터, 미일 vs 한중의 구조로 기본적인 구조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일 동맹」의 경제적 기초와 귀결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더 문제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일본의 태도이다. 경제 정체를 계속하는 일본은 중국과 같은 양호한 상황의 전개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과 같이 「쇠퇴 국가」로서의 공통 이익을 가지게 되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석유나 부흥 수요를 노려 미국을 지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외국 견해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미국의 문제는 일본의 문제가 되어버린다. 미국의 군사적 제국주의를 다른 나라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사법제가 성립해서 한층 더 헌법 개악에 매진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일본의 태도」가 미국의 그것과 매우 닮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는 미국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과 석유 대기업과의 관계가, 일본에 있어서는 정권세력과 건설업계의 관계와 닮았다고 하는 것이다. 「자민당을 부순다」라고 까지 공언하면서 등장한 고이즈미 정권도 그 현실 정책에는 그 말과 정반대로 특정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많은 「수구파」적 정책이 나오고 있고 橋本派 등등 고이즈미 만큼 대미 추종이 아닌 파벌까지 이라크 전쟁 지원에 동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수구파」라고 결합된 업계 중에서 가장 밀착도가 높은 것이 건설업체인 이상 「부흥 수요」와 정권의 이라크 전쟁 지원 결정과의 관계는 무시할 수 없다.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석유업계에 상응하는 위치에 일본의 건설업계가 있다고 보아야만 한다. 북한 문제에서도 이러한 문맥으로 건설업계가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업계」의 이해를 다시 한번 넓혀 본다면 「미국」 자체도 또한 정치가나 관료들도 「업계」이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鈴木宗男가 그러했듯이, 외교에는 외교자체로서 많은 이권이 존재하고 대미 외교는 그 돈의 움직임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토교통성은 건설업계의, 후생노동성은 의사회나 의료 산업의, 자원 에너지청은 에너지 산업의, 방위청은 방위 산업의, 농림 수산성은 농림 수산업의 이익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과 같이, 외무성은 미국의 이익 대표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외무성만이 다른 부처와 달리 이익 대표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대로 「미국」이라고 하는 특수 이익 집단과 깊고 깊게 결합되어 앞으로의 이익을 흡수하고 또한 더 나아가 일본의 외교를 종적 구조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과거에 이익 대표로서 제 기능을 다한 부처와 업계가 있고, 그것이 실제로 대미 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구 대장성과 은행 등 금융업계가 그것들이다. 한때 竹中 장관과 은행 업계간의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그러한 논쟁의 내용은 금융 행정 관련에서 고이즈미 정권 성립 이후, 처음으로 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은행 지원」에 집약되는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였다. 예를 들어, 우편저금 민영화론은 은행과 우편저금과의 「불평등 경쟁」의 시정이 하나의 목적인 이상, 이것은 은행의 이익을 도모한 정책이다. 또한 국민 생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주택금융공고 폐지의 하나의 목적은 「민간업자가 느끼는 압박을 없애기 위해」라는 표현으로 은행 업계의 용자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 공공연히 말하여지고 있다. 실제로 주택금융공고의 폐지에 의해 약 1550 억 엔의 주택용자채권이 민간금융기관에 매각할 경우에 대한 시험적인 계산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마지막은 은행으로의 공적 자금의 재투입이다. 은행 업계는 국유화를 무서워해 그것에 반대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은행 측의 논리로 납세자의 편에서 보면 이미 제 1 차의

자금 투입으로 세금이 28.8 조 엔이나 사용되었고, 더 나아가 거액의 혈세가 사용될 것이다. 제 1 차의 투입은 리소나 은행이며, 약 2 조 엔(국민 한 사람당 1 만 5 천엔)의 투입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미 시작되어 있다. 이 정도로 업계 보호적인 정책은 없다.

그리고, 자금 투입과 동시에 「산업재생기구」의 설치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추가적인 은행 지원도 노골적이다. 벌써 과거부터 「정리회수기구」를 통해서 거액의 세금이 불량채권의 인수에 사용되고 있었지만, 그 기구로도 정리 불가능했던 불량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산업재생기구가 매입해서, 민간투자 회사에 매각한다는 것이 이 새로운 기구의 역할이다. 하지만 원래의 불량채권이 매입 가격으로 팔릴 리는 없고, 이 차액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된다. 즉 은행이 저질러 놓은 불량채권을 더욱 더 많이 인수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로는 이것에 10 조 엔이 투입된다고 한다. 국민이 불황으로 괴로워하는 사이에 미국의 전쟁과 은행을 위해서는 몇 십 조엔 규모의 돈이 끊이지 않고 지출되고 있다. 이것을 보고 업계 정치의 부활·지속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조금 더 말하자면, 여기에 산업재생기구가 채권을 사들이는 가격의 인상까지 국토교통성이나 경제산업성, 여당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러한 단순한 「업계 정치」의 실태는 아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이것이 전장에서 말한 미국에서 유래한 「일본 위기」의 귀결이라는 점이다. 거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쇠퇴 과정의 미국이 일본에 강요한 저금리 정책과 그 실패에 의한 버블 붕괴가 있었지만, 그 피해의 상당수는 토지나 증권의 소유자, 즉 은행을 비롯한 대부자 측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의 은행 업계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압력을 출발점으로 하는 일본의 「협조 금리인하」는 G6, G7, G8 등의 형태로 대장성 장관(현재는 재무 장관) 참가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금고를 지켜야 할 구 대장성의 결정에 의한 판단ミス였다. 이 구 대장성은 원래 금고지기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은행 등 금융기관의 관할 관청=이익 대표이기도 했다. 이런 형태로서는 안돼 라는 인식하에 그 후 금융감독청→금융청이 분리되었지만, 어쨌든 은행 업계가 안고 있는 불량채권 문제가 대미 추종 외교의 귀결인 것이 중요하다.

혹은 좀 더 생각하면, 그들 금융기관이 정부에 고액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실은 아직 더 있다. 그것은 전장에서 본 것 같은 장기적인 달러 하락 경향의 배경에서는 세계 자금이 미국에 모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 경제가 파탄해 버리기 때문에 일본의 대미 투자가 구 대장성의 행정 지도라고 하는 형태로 은행 업계에 강제되었고, 그것이 다시 은행 업계로서는 거액의 손실을 낳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자세하게 해설한 吉川元忠 「머니 패전」(PHP 연구소, 2000 년)에 의하면, 1985 년의 달러 폭락에서는 합계 3.5 조 엔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국민 일인당으로 환산하면, 3 만 엔이 되는 이 거액의 손실이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금융기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대미 추종 노선도 이제 그 「이익」을 「불이익」이 상회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 거대한 쇠퇴 국가와 생사를

같이 하는 노선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는 이러한 사실이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납세자=국민과 지배층과의 모순을 수반하면서, 이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 「도둑맞은 일본」

이와 같이 본다면 「미국의 이익」에 대한 일본의 지배층의 기대와는 관계없이 일본의 대미 추종 외교는 서서히 그 유효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세계의 중심이 미국에서 중국·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자신도 자기자신을 컨트롤 해서 외교의 중심을 이동시켜야만 한다. 이것을 요령 있게 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무성과 일본 지배층이 본래의 「일본의 이익」을 유린해서 자신의 특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을 「매국」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상태는 일본의 원래 이익과 모순된다고 하는 의미로 「추종」이라고 하는 말보다 「종속」이라고 하는 말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만약 이 상태를 일본의 상황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측에서 보았을 때, 다른 차원에서 다양한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은 본서 제 4장에서 유태인은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맞고 있다(stolen)」라고 하는 이해의 수준으로 파악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일본도 또한 자신의 판단으로 「대미 추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도둑맞았다」라는 존재로서 보여진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함으로써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어디에 쓰기 위해 필요한 인재는 이민으로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발전한 미국 최대의 「획득물」은 유태인이었다. 크리스티교 문명이 이슬람 문명으로부터 유태인을 「훔치는」는 것에 성공한 사례로서 미국의 번영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서양의 세가지 종교의 테두리로부터 떨어져 동양을 포함한 세계의 문명 구조를 생각했을 때, 「일본」이라는 존재도 상당히 중요하고 큰 위치를 차지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나 자신도 일본에 있을 때에는 그만큼 강하게 느끼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정말로 다수의 민족·이민과 접하는 동안에 일본은 얼마 안 되는 선진국이라는 점, 제 7장의 표 1에서도 본 것처럼 일본만으로도 「유럽」이나 「북미」와 비견될 정도의 공업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다. 혹은 현재 미국의 전쟁조차 일본이라고 하는 원조자 없이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실은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이라크 전쟁 책임도 막중한 것이다.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는 과거의 사건보다 현재의 책임을 좀 더 중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미국은 제 2차 대전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일본」이라는 국가를 손에 넣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미국에게 「획득되었다」=「도둑맞았다」인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일본이 「문명」의 레벨로 본다면 원래 속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이며 「동양」이며 그것은 크리스티교 문명, 이슬람

문명. 유대 문명도 아니다. 그러한 이질적 문명으로부터 일본만이 잘라 내져 크리스티교 문명 혹은 미국 문명에 「도둑맞았다」. 아시아 문명, 동양 문명은 그 본래의 구성원인 일본을 그들에게 「도둑맞았다」라는 것이다. 동아시아 세계는 원래 강화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생각의 합리적인 측면)생각을 이런 식으로 나는 표현하고 싶었다.

물론 이러한 세계의 구조적 요인은 「냉전」에 있었다. 동아시아는 이 구조에 의해 분단 되었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과 한국이 「도둑맞았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에 의한 「동아시아의 분단」은 「냉전」의 종결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플러스 동남아시아 규모의 「동아시아 경제 협의회(EAEC)」의 제안이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에 의해 제기 되었던 것이 1992 년의 일이지만(그것에 앞서 1990 년 말에는 「동아시아 경제권(EAEG)」구상의 제안이 있었다), 그것이 「ASEAN+3」의 형태로 실현된 것은 기껏해야 1999 년 말이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강한 반대로 실현조차 불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다. 미국은 이 범위의 국제 협력 기구에서는 자신의 영향력이 강화,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대신에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를 제안했다. 일본이 동조해서 EAEC 의 설립이 저지되어 버렸다는 것이 당시의 뒷이야기인 것이다. 미국은 그 후, 「아시아 위기」를 통해서 아시아의 자립화를 위협이라고 느끼지 않게 되어, 간신히 1999 년에는 그 설립이 「허락되었다」 것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시아 위기에 의한 아시아 각국의 약체화가 있기 이전에 일본에 대한 중국의 부흥이 결정적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월간 아시아 리뷰」 제 108 호(2002 년)에 게재된 古川栄一의 논문에 의하면 미국의 의향을 받은 일본 정부의 지역 협력 기구 설치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를 무시하고 1995 년 말에는 ASEAN 각국이 한국·중국과 협의하여 일본을 제외한 지역 협력 기구의 설립을 추진한 것, 혹은 이와 관련해서 그 다음 해에는 메콩 개발 각료회의에서 일본을 초청하지 않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자 당황한 일본 정부는 그 태도를 바꾸었다고 한다. 원래는 「자금 제공국」으로서 일본의 협력 없이는 협력 기구의 설립이 있을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일본을 제외시키고도 중국의 참가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해에서 각국은 그 태도를 바꾸었다. 이것은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성장이 그 자립을 촉진시켜 일본도 또한 그러한 추세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2 년의 가을에는 중국과 타이 사이의 농산물 관세가 큰 폭으로 완화되어 중국·ASEAN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는 없다」라는 초조감을 만들었고 따라서 일본의 대 아시아 외교에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야스쿠니 참배나 유사법제를 포기하고 보다 좋은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면 현재보다 더 좋은 기반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까지를 일본에게 기대하는

것을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중국 등 동아시아 각국의 발전과 그러한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자립하고 있다는 불균등 발전이 위에서와 같은 의미로 「도둑맞은 일본」을 다시 아시아로 되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러한 큰 흐름 안에서 일본의 외교를 다시 이해할 수가 있다.

제9장 북한 경제와 한중의 역할

90 년대의 북한 경제

앞장에서는 동아시아의 분단 세력으로서의 미국과 일본의 능동적인 각 전략을 북한 문제와 「일본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이번 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공격 대상인 북한의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 혹은 그 문제를 비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평화 세력」으로서의 한중의 역할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우선 이 북한의 핵 문제를 「외교 카드」라고 한 앞장의 결론을 이해한 후에 논의를 전개하고 싶지만, 이 「외교 카드」를 북한이 필사적으로 내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 그것은 사실 북한이 초초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폐쇄 경제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면 따로 외교에 힘을 쏟을 필요도 없고, 또한 「카드」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북한 외교의 적극성에는 국내 경제 위기가 있다라는 관측을 성립시키게끔 하는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 1 을 참고해주기를 바란다.

● 표 1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추이(단위:%)

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농림 수산업	-9.7	2.8	-2.7	-7.5	2.7	-10.4	0.5	-3.8	4.1	9.2	-1.9	6.8	
경공업	-0.7	-3.9	-6.8	4.3	-0.2	-4.3	-6.8	-12.5	-0.2	2.4	6.2	2.3	
중공업	-4.3	-15.6	-21.6	-4.2	-5.2	-5.6	-9.8	-18.8	-4.6	11.6	-1.5	4.1	
전기 가스 수도업	-3.2	-4.4	-5.4	-8.6	4.2	0.1	-7.7	-9.5	-9.2	6.8	3.0	3.6	
건설업	5.9	-3.4	-2.2	-9.7	-26.9	-3.2	-11.8	-9.9	-11.4	24.3	13.6	7.0	
정부 서비스업	1.2	4.4	2.4	2.2	3.3	2.8	1.8	2.2	-0.3	-4.5	0.5	-0.4	
GDP	-3.7	-3.5	-6.0	-4.2	-2.1	-4.1	-3.6	-6.3	-1.1	6.2	1.3	3.7	1.2

출처) 2001 년까지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ni-chika.pobox.ne.jp/dprk/economy/contents.htm>),

2002 년은 2003 년 6 월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추계숫자

이 표에서 우선 1998년까지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어려웠던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장률을 해마다 곱하면, 1998 년의 산업별 생산액은 1989 년 수준의 77%(농림 수산업), 72%(경공업), 38%(중공업), 63%(전기 가스 수도업), 45%(건설업), 122%(정부 서비스업)가 되고, GDP 전체에서는 70% 수준까지 축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장 가동률이 30%이하 라는 정보도 있다. 나는 1992 년에 출판한 서적(「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주의」大月서점)에서 경제 개혁이 없다면 북한은 경제 파탄에 의해 정권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권 붕괴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 이상할 정도의 경제 파탄인 것만큼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은 여기서 말하는 「정권 붕괴가 없었다」라는 평가는 「정권」의 정의에 따라 다르다. 김정일이 총서기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정권 붕괴가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경제위기가 가장 엄격해진 1998 년에 실은 김정일 자신이 자신의 정권에 대해서 일종의 「쿠테타」를 행하고 있다. 「선군정치」라는 슬로건아래, 노동당을 실질적으로 정권의 주도적 지위로부터 격하시키고, 그 대신에 군대를 그 지위에 오를 수 있게끔 헌법개정을 단행했던 것이다.

이 헌법개정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고인을 「영원의 주석」으로 모신다는 기묘한 것으로 세계에는 인식되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떤 지위에 현실의 권한을 두어야만 하는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국방 위원장」이며, 거기에 김정일이 앉게 되었다. 김정일은 그 후, 기본적으로 「국방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북일 정상회담시의 「평양 선언」도 그 직함이며, 이것은 앞의 重村에 의하면 당의 총서기보다 국방 위원장이 상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김영남 최고 인민 회의 상임위원장의 헌법개정 직후의 최고 인민 회의에서의 다음과 같은 연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국방 위원장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를 인솔해,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 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국가의 방위력과 전반적인 국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하며,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 직무이다」

이렇게 해서 국방 위원회와 그 위원장은 단지 「국방」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전반을 담당하는 상위의 기관이 되었고 한편 당대회는 1980 년 이후 개최마저 되지 않았으며 또한 작년의 경제개혁 이후는 소기업내의 당서기를 사실상 폐지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김정일은 부패로 심각한 당 조직에 염증을 느끼고 관료주의를 계속해서 비판해 왔다. 1998 년의 경제위기의 심화는 결국 그 힘을 헌법 레벨에서 없애버리고 그 대신으로 군에 의거한 경제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 부연하자면, 뒤에서 말하는 신의주 특구의 건설에 동원되고 있는 사람도 1 만 명을 넘는 인민군 병사이다. 김정일이 얼마나 군에 신뢰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현재의 「재위기」와 경제제재

다시 표 1 로 돌아와 경제 성장률의 추이를 보면, GDP 성장률이 헌법개정의 다음

해부터 플러스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군정치」는 이러한 의미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2002 년부터의 움직임이다. 이 해의 7 월에는 뒤에서도 언급하지만 대규모 가격 개혁이 실시되고(「7·1 경제 개선 조치」라고 불리고 있다), 그 효과가 주목 받고 있었지만, 표 1 에 나타나는 성장률은 1.2%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만약 7 월의 개혁까지 1999-2001 년 정도의 성장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7 월 이후의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규모 가격 개정 전후의 경제 성장률을 통계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어쨌든 또 한번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2003 년에 접어든 이후 「조선일보」에서는 군대 내조차 영양 실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 식량부족으로 난민·도적화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점, 우대를 받고 있던 평양의 과학원 박사마저 1 개월의 식량으로서 옥수수 20 일본 밖에 배급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도하였고 또한 「중앙 일보」는 2003 년 1 월에 유엔 세계 식량계획(WFP)이 북한에 대한 추가 원조를 하지 않을 경우, 북한 주민의 3 분의 1 에 해당되는 700 만 여명에 대한 식량 공급이 정지된다고 보도했다. 유엔 세계 식량계획(WFP)의 추계에서는, 22 만 명의 아사자를 낸 1995-97 년 최악기와, 2000-01 년 정도의 심각함은 아니지만 56 만 톤의 곡물이 부족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에너지 부족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듯 하다. 농촌에서는 얼마 안 되는 버스도 목탄차로 운행되고, 평양 시내에서도 호텔에 난방이나 전기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지 않다는 보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북한이 이용 가능한 원유가 50 만 톤 조금 넘는다는 사실로부터도 상상이 가능하다. 즉 이렇게 해서 현재 북한에 있어서의 식량과 원유 그리고 에너지의 부족이 위기의 국면에 놓여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은 이러한 사정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 지원은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경제협력 레벨로 계속하고 있던 쌀 지원을 2003 년부터는 인도 지원 형식으로 전환해 40 만 톤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것은 북한 전국민에 필요한 양의 몇 분의 1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국민 한 사람이 1 일 300 그램의 쌀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2200 \text{ 만 명} \times 300\text{g} \times 365 \text{ 일} = 240 \text{ 만 톤}$ 이 필요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2000 년 북한의 통계에서는 쌀 생산량이 169 만 톤이었기 때문에 그 부족 현상은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 미국도 인도적 원조로 4 만 톤의 원조를 계속하고 있지만 역시 이러한 한국의 원조가 결정적인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유에 대해서는 전술과 바와 같이 북한의 전 사용량의 대부분이 중국 제공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이들 2 가지 품목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결정적이고, 그런 만큼 반대로 이 양국의 지원이 끊기면 북한 경제는 틀림없이 유지 불가능이 된다. 즉 한중이 진심으로 경제제재를 한다면 북한이 죽는 소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양국이 결정적인 지원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대부분 결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일본과 미국의

「경제제재」는 현재 그들의 지원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하는 점, 경제제재를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조건은 현재 이미 결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일본국내에는 납치 문제 등으로 반복한 감정도 강하고 현재 상태로서는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경제 원조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렵다. 또 일본국내에서도 북한 독재체제의 붕괴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제재를 주장하는 진지한 논자가 있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상황으로, 결국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것은 한국과 중국의 2 나라에 한정되어 있다. 혹은 별로 원조를 해 오지 않았던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무력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미일 2 나라가 군사 공격을 주저하지 않는 데에 반해 한중은 어디까지나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논의의 레벨을 좀 더 이론적으로 해서 확인을 해 두어야 할 듯싶다. 그런 이유로는 우선 우리가 앞의 제Ⅱ부에서 확인한 것처럼 「제국주의」가 군사적 방법을 모색하는 하나의 이유는 경제력에 의한 지배가 불가능하게 된 점에 있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북한에 대한 미일의 대응에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중국은 반대로 석유 공급의 여력을 어떻게든 확보 할 수 있는 것에 의해(그러나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제 3 장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으로의 석유 공급원을 미국은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즉 그 발흥 하는 경제력이 조건이 되어 북한에 대한 평화적인 교섭력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다(이 문맥으로 이미 공급 삭감이라고 하는 「제재」를 시작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물론 한국의 북한에 대한 포용의 깊이도 그 민족주의와 함께 그 경제적 자신감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미일과 한중의 경제적 불균등 발전이 앞장에서 본 대북정책의 현저한 차이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기반으로 북한 문제도 또 세계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이 필연화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간 마찰이라고 하는 역사적 필연의 일부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개혁은 진행되고 있을까①

그러나 이러한 북한 경제의 행방은 그 경제개혁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가격 개혁으로 현재 실패하고 있는 북한 경제도 향후에 회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 이러한 경제개혁의 문제를 좁혀서, ①경제개혁의 의지 ②경제개혁의 내용 ③경제 특구의 상황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해 보고 싶다.

여기서 우선 첫 번째 경제개혁의 의지에 대해서이지만 여기에서는 그 의지를 의심하는 논의가 많기 때문에 중국 경제개혁에 관해서도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반복해진 「중국 경제개혁의 불충분성」론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현재는 중국의 강하고 확실한 경제개혁의 의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만,

「공산당 체제인 이상 체제 개혁은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매우 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유기업 개혁을 시작할 때, 천안문 사건이 일어날 당시, 그리고 등소평의 죽음에 있었던 시기에 「보수파의 복권」과 「개혁의 정지」가 항상 주장되어 왔지만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명명백백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또한 모르면 안 되는 것은 그 중국조차 「점진 개혁」의 형태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계획 위원회」, 「발전 계획 위원회」라는 이름(조직 자체는 지금도 남아 있다)은 개혁 개시 후 25 년째의 올해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간판을 유지하면서 실행된 개혁이기 때문에 북한도 당연히 이러한 외관을 의도적으로 유지할 것이지만, 거기에 혼란스러워져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이란 아주 일부의 주식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붙여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일본 항공을 「국유기업」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획」이나 「국유 경제의 유지」라고 한 북한의 공식 견해를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 최근의 정보에서는 종래 사용하지 않았던 「경제개혁」이라는 말도 「조선통신」에서 등장했다고 한다.

혹은 구 소련·동구에서와 같이 급진적 개혁을 취하지 않고 중국식의 점진 개혁으로 경제 전환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 개방(이 말도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북한에 있어서의 많은 개혁 조치에 대해 말해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 중 가장 최대의 규모는 쌀 생산 확대를 노린 가격 개혁과 농민 각 호가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자유시장에서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코리아·뉴스」등 다수의 한국 정보에 의하면 적어도 북서부의 중국 국경 부근에서는 협동 농장이 폐지되고 또한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배급제를 폐지해 자유시장이 확대되고 이것이 2003 년 5 월의 김정일의 「특별 지시」에 의해 규모가 확대되어 농촌부의 자유시장도 지금까지의 주 1 회였던 것이 1996 년부터는 매일 열리게 되었다. 또 남겨진 협동 농장에서도 계획을 웃도는 생산물의 여분은 자유시장에서 판매 가능해지고 있어 이러한 거래를 위해 국민은 장기의 국내 여행이 허용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농업 분야 이외에도 이전부터 말하여지고 있던 국유기업의 독립채산제화가 이제 추진되고 있다. 2000 년에 대규모 기업집단제도를 폐지해 작은 기업 단위로 기업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서, 2001 년에는 노동자의 임금을 노동 시간에 의한 것으로부터 「이윤」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만만보 라고 하는 메일 매거진의 齊藤祥男의 조사보고에서는 평양의 봉제공장에서(www.yorozubo.com/0301/030118.html) 능률성과급이 도입된 것, 수출용의 어패럴 공장에서는 개인별 생산량의 그래프가 내걸려 있고 이로 인한 성과급제가 도입되고 있는 것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독립채산제화는 세제나 지가제의 도입, 물과 전력의 공급 유료화도 수반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평양 시내에서는 구두,

아이스크림 등 공업제품이 개인 노점상에 의해 공급되게 되었고, 2002 년 12 월에는 자유시장에서 일반 주민이 공업제품을 취급하는 것조차 가능해졌다. 좀 더 말하자면, SARS 가 유행하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것들을 알고 있는 한 「북한은 지금도 아직 개혁 개방의 의지는 불명확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판단ミス이다.

경제개혁은 진행되고 있을까②

그러나 「개혁의 의지」가 명확하다고 하는 것과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전술과 바와 같이 2002 년의 가격 개정이 적어도 그 후 1 년 동안 생산 확대를 잘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배급 가격을 시장가격에 통일하는 목적으로 실시된 가격 개정은 가격안정을 의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는 가속된 듯이 보인다. 우선, 그 전후사정을 이 가격 개정의 본래 목적의 설명에서부터 소개하고 싶다.

●표 2 북한에 있어서의 2002 년 7 월의 가격·임금개혁(단위:원)

	구 가격·임금	신가격·임금	상승률(배)
쌀(생산자가격: 1kg)	0.8	40	50
쌀(소비자가격: 1kg)	0.08	44	550
옥수수(생산자가격: 1kg)	0.5	31	62
옥수수(소비자가격: 1kg)	0.07	33	471
전기요금(1 k w h)	0.035	1.8	51
버스·지하철요금	0.1	2	20
냉면(1 그릇)	15-20	150-200	10
남성용 셔츠	25	225	9
남성용 점퍼	55	555	10
일반노동자 임금	110-150	2000-3000	15-20
광산노동자 임금		6000	
정부기관 사무직원	180-200	3500-4000	19-20
대학교수	200	4000-5000	20-25
대학교수(박사이상)		7000-8000	
미 달러	2.19	150	68

주)重村智計 『최신 북조선 데이터 북』 장담사 현대신서, 2002 년 및

Frank, Ruediger, 'Socialist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The Price Change of 2002 and Their Implications', presented at Weatherhead East Asian Institute Brown Bag Lunch Lecture of Columbia University, February, 18, 2003.

여기서 우선 제 2 표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이것은 앞의 重村가 쓴 책의 숫자를 기초로 해서, 콜롬비아 대학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숫자를 더해 만든 것으로, 가격 개정의 의도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가격 개정 가운데 버스·지하철 운임으로부터 의류까지의 상승률은 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정도 혹은 동일한 정도에 있는데 비해서, 사회적으로 부족한 식량과 전력의 가격 인상률은 높다. 이것은 좀더 부족한 상품의 생산 확대를 우선하고 그 분야의 생산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경제학의 교과서 그대로 제대로 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물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식량이나 전력이 가격 인상된 이상, 노동자의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것, 그리고 쌀과 옥수수 생산자 가격·소비자가격간의 시세차익 폐지로 분명하듯이 식량 가격 인상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정부의 국민 생활에 대한 보조의 폐지에 있던 것도 알 수 있다. 특히 이전에는 무료와 다름없이 배분 받던 식량이 이러한 결과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 일 1 명이 먹는 쌀을 300 그램으로 했을 때, 4 인 가족에서는 한 달에 $9\text{kg} \times 44 \text{ 원} \times 4 \text{ 명} = 1600 \text{ 원}$ 의 지출이 쌀을 사는데 필요하지만, 각 가족이 두 명의 일반 노동자를 가진다면 매 한 달의 수입은 4000 원이다. 「조선일보」 2002 년 10 월 16 날짜로는 이 가격 개정으로 가게에서 차지하는 식량 지출이 50%가 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는 것이 거의 부합하는 수치이다. 덧붙여서 이 가격 개정 이전에는 우리의 계산에서는 $(9\text{kg} \times 0.08 \text{ 원} \times 4 \text{ 명}) / 220 \text{ 원} = 2.88 \text{ 원} / 220 \text{ 원} = 1.3\%$ 였다.

하지만 실은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식량의 가격상승이 그 후에도 멈추지 않은 것이다. 「중앙 일보」 2003 년 5 월 22 날짜에 의하면 2003 년 4 월에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185-195 원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앞의 계산에서는 $9\text{kg} \times 190 \text{ 원} \times 4 \text{ 명} = 6480 \text{ 원}$ 이 되어 가게 수입을 넘어서 버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태는 정말로 심각해지며 시장이 쌀이 절대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양상이 되어버린다. 먼저 본 것처럼 한국은 40 만 톤의 쌀을 인도적 차원의 원조로 결정했지만, 이 결정이 이루어진 5 월 이전에는 적어도 이러한 부족 상황을 시장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경제개혁의 상황은 매우 혹독하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평가에도 긍정적인 면에서 약간의 유예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가격 개혁 이전부터 시민들의 쌀 등의 조달 중에서 60-70%는 이미 자유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쌀 소비자용의 실질적인 옛날 가격은 과중 평균치의 킬로그램당 30 원 정도인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실질적인 가격 상승률은 1.5 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혹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킬로그램당 185-195 원 수준까지 인플레이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도 그 상승률은 6.3 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임금 상승률보다 낮게 된다. 또한 원래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쌀의 과소 공급에 있었으니까 생산증가가 없는 단계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것 자체를 기능 부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쌀의 불박이 생산과

증산 의욕은 가격 개혁의 다음 해 즉 2003 년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점에서 흥미로운 정보는 「코리아·뉴스」의 보도로 북한 북서부의 중국 국경 부근에서, 이전에는 옥수수 밭 이었던 것이 콩이나 야채 밭으로 변해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격 개혁전의 정보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아직 옥수수가 상대적으로 싼던 상황하에서 농민이 보다 가격이 높은 작물로 전환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기에서는 가격에 반응하는 농민의 경작 태도가 나타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나 쌀 등의 생산이 부족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북한 정부가 가격 개혁을 서두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2003 년의 가을에는 북한의 곡물 생산이 전년대비 4.7% 증가했다는 정보가 보도되었다. 이 가격 개정에 농민이 불박이 생산으로의 전환이라는 형식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제 경제개혁의 제 1 단계가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미는 크다.

경제개혁은 진행되고 있을까③

그리고 마지막으로 3 번째의 논점 즉 경제 특구의 문제를 살펴보고 싶다. 이것은 일반의 국내 경제개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대외 개방의 중심적 정책이며 또한 「글로벌라이제이션」 문제에 관련되는 논점으로서 특별히 중요하다. 중국 단둥시 건너편에 있는 북한의 신의주 특구 구상은 2002 년 중순이 되어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성과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게다가 이 신의주 특구는 초대 장관이 부정 의혹으로 중국 당국에 체포되고 중국의 심토천 특구와 같이 다른 지역과 차단시키는 장벽의 건설 등으로 개업까지 아직 수년이 걸리는 점, 지역 주민을 타 지구에 이주시키는 사업도 필요한 일 등등 아직 문제도 많다. 하지만 역시 이것은 아직 시작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래적인 의의가 상당히 크다는 것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구나 공업지역의 건설은 그 초기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장래에 대한 불안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는 1996 년에 베트남의 공업 지구로서 경제도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 호치민시 근처의 공업지구에 갔던 적이 있지만, 아직 거기에는 간판만이 내 걸려졌을 뿐이고 불도저조차 들어가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공업 지역을 포함해 베트남은 경제개혁의 우등생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즉 경제 특구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라는 문제가 아닌 향후의 가능성과 북한 당국의 의욕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이 새로운 특구가 홍콩이나 심토천, 네덜란드의 특구 운영 시스템을 기본으로 구상되고 있고 외국 기업에 있어서 시장으로서는 매력이 없는 북한도 그 저임금과 양질의 노동력은 매력적인 점, 그 임금은 환율 개정에 의해 더욱 낮아진 점, 해안부에서 또한 발전이 눈부신 중국에 접해서 입지된 점, 그 때문에 인민 원이나

달러가 직접 통용되는 시스템이 생각되고 있는 점 등 구상의 적극성은 분명히 눈에 띄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외자의 도입에 그 운명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다지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것이지만 이제 곧 중국 기업도 가전 업계를 중심으로 공장을 해외에 입지시킬 단계에 이르고 있다. 중국 기업이 국경을 1 보 넘어 신의주로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벌써 북경의 조선족 기업가는 신의주 중심부의 부지 구입 계약을 하고 있고, 또한 다른 투자가의 모집을 대행할 수 있을 권리를 취득해, 2002 년 6 월에는 중국 대표단이 시찰에 들어가 있다. 재빠른 기업가의 투자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덧붙여 이 신의주와 관련되어 이웃의 중국 단둥시와 북한 전 국토와의 무역 품목의 변화도 주목 받고 있다. 「코리아·뉴스」의 보도를 통해 판단하면 북한의 대외 무역의 80%이상은 여기서의 거래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단둥시를 통해서 북한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이 과거의 식량 편중으로부터 컴퓨터를 포함한 전자 제품, 철강, 건축 자재, 생활 용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신의주보다 미리 2 년 전에 한국 현대 그룹과의 합의로 추진된 평성 부근의 개성 특구도 드디어 2003 년 6 월말에 건설에 들어간다고 보도되었고, 그 첫 번째 단계는 2004 년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출입국 증명서가 있으면 비자 없이 출입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관리 기관 이사장은 한국 사람이 임명될 것이라고 남북간 합의되고 있다. 나는 실제 한국측 전망대의 망원경으로 이 건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 개발도 기대된다.

또 하나 환율의 대폭적인 인하도 중요하다. 이 목적의 하나는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으로 꺼내게 하는 것에 있지만, 그것과 함께 수출 공업을 육성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환경 정비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북한의 노동자는 근면해 노동쟁의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런 노동자의 임금이 이 환율의 인하로 한층 더 싸진다. 또 이것과 관련되어 공업의 중심이 중공업으로부터 경공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놓칠 수 없다. 앞의 표 1 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1990 년 양자의 GDP 구성비가 중공업:경공업=25. 6%:6. 2%인 것이, 2001 년에는 11.4%:6. 7%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개혁의 추진이 아무리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는 해도 북한은 해야 할 일들을 기본적으로는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 「개방적 민족주의」의 가능성

그러나 물론 북한에 있어서의 핵무기의 개발이나 국내의 독재체제 등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 표시로서 「제재」나 외교 노력, 유엔 등 국제기관에서의 안전 상정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미일의 경제제재가 먹히지 않아도 한중의 경제제재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대중 조직도 또한 북한의 위협을 부추기지 않게 주의하면서 시위 등의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단지 이러한 「압력」 만이 아니고, 그들을 국제 사회 안으로 지금보다는 더 그 틀 속에 구성체로서 짜 넣는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간주하지만 실은 미국의 감각에서는 핵무기 개발 당시의 중국도 일종의 「악의 축」이었다. 하지만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중국을 당시와 같이 위험 국가라고 보고 있지 않다. 즉 비록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도달했다고 해도 그것을 위험한 위협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간을 들이면 가능하다. 즉 요컨대 여기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개혁 개방 후의 중국이 이런 변화를 북한에도 일으키게 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을 동아시아의 정상적인 국제 관계 안에 짜 넣어 가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북한의 경제면에서의 개방 노력은 충분히 시작되고 있다. 이 조건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한국의 말에 의하면 햇빛정책, 혹은 본서의 말로 말하자면 동아시아의 분단 정지를 진행시키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우리의 논의는 우리의 이 동아시아의 경제적 통합 과정을 어떻게 추진시키는가 하는 문제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그 때, 한반도의 남쪽의 나라, 한국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한중일 내지는 한북한중일을 유럽과 같이 하나의 경제적 통합체로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중일」 속으로 들어오는 한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이나 북한)의 너무 강한 민족주의에 대한 위화감이 일본과 중국에는 있지만, 그것도 또한 동아시아의 통합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본 장의 마지막에 그것을 논의해 두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근거는 이런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중일 내지는 한북한중일의 통합화에 주저 하는 데는 그것에 의해 한국이 두 개 대국 사이에서 파묻혀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뉴욕의 재팬·소사이어티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한일 관계의 장래」라고 제목을 붙여 공동 개최한 큰 심포지엄에서도 한국측 보고자가 한국의 GDP가 일본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음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었고 그러한 의식이 너무 강하면 역시 「중일 양 대국의 사이에 파묻힌다」라는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실은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며 그것을 최근에는 급속한 스피드로 획득해 온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이 나의 관찰이다. 예를 들어,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의 선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그리고 누구나가 예측하지 않았던 스피드로 아시아 위기를 탈출한 사실이다. 좀 더 말하자면 이 자신감은 한국의 대미 의존도의 극복에도 충분히 공헌함과 동시에, 일본 문화의 국내 개방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만약 북한과 한국이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더욱 이러한 경향은 강해지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된다. 물론 배후에 있는 장기적인 한국산업의 발전이 그 기초에 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좀 더 「한국론」으로서 한국의 본질에 관련되는 특징에 나는 주목하고 싶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한국도 그 문화의 기초가 중국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에 대한 그 영향은 일본에 대한 그것을 몇 배나 상회한다. 이것은 일본이 6

세기 이래 일관되게 불교 국가인데 대해서 한국(북한)은 불교 국가를 경유해 유교 국가로 변했고 그 후에는 크리스티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사실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불교 국가인 수당나라 시기에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후에는 그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았고, 따라서 불교 국가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지만, 한국(북한)은 그 후도 명조 등에 의해 유교 체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이조 시대에는 상당히 엄격한 「유교 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당시 불교가 탄압되었던 것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연장해서 말하자면, 한국은 청조 말기부터 2 차 세계 대전 종료까지는 일본과 서양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2 차 세계 대전 후는 미국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민의 3 분의 1 이 크리스티교 신자가 되었던 것이다. 즉 한국(북한)은 항상 가장 발달한 문화를 수입하는 능력에 뛰어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항상 선진적인 문화와 문명을 가질 수 있던 이유가 되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의 「주체 사상」 등은 민족주의가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취급했던 시대였지만, 그 북한조차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중국이나 네덜란드의 경험을 배우려 하고 있다. 개방적인 민족주의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으로 매우 특수한 국가라고 생각된다.

이것을 내가 강하게 느낀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유학생수이다. 일본도 또한 해외 유학생이 많은 나라의 하나이지만, 인구가 그 3 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한국이 거의 동수의 유학생을 미국과 중국에 보내고 있다(중국으로의 파견숫자는 일본보다 더욱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활약도 눈부시다. 이것은 정말 인구로 친다면 190 만 명 밖에 없는 중국 국내의 조선족이 중국 국내에서 눈에 띄게 활약하고 있는 것과도 상응한다. 실은 일본도 세계적으로는 한국과 닮은 특징을 가지지만 자국에서 밖에 통용되지 않는 문자의 폐쇄성과 실질적인 「단일민족국가」(이것은 실제로 전세계에서 일본, 한국, 북한 밖에 없다)로서 일본 국내에서는 타민족과의 교류를 잘 가질 수 없는 한편 그러한 타민족 문화를 자국의 문자와 자민족의 학자의 것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나라 사람의 두 배 이상으로 해 왔다는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정말로 다수의 외국 문헌이 번역되어 자국어만으로 대부분의 학문 분야를 연구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일반 국민 레벨에 있어서의 높은 지식 수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또 내가 속한 콜롬비아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의 한국·북한 문제의 전문가가 한국인과 독일인인 것처럼, 미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성이 있지만,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민족이 학문의 모든 분야를 커버해, 자민족의 손으로 자민족이 교육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이지만 그러한 일종의 「민족주의」가 반대로 외국 문화의 수입에 힘을 쏟게 했던 것이다. 민족주의는 이렇게 할 때에만 개방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한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의 민족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확장시켜 가는 것이다. 한국과

북한의 민족주의는 한반도의 통일에 지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낸다. 그리고 그 연장에서 이 「민족주의」의 범위를 조금 확장시켜 「동아시아 민족주의」까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무법성,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서의 미국의 「오심」 등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분단을 기도 하는 미국과 한국과의 모순은 앞으로 한층 더 깊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불균등 발전아래에서 미국의 무례한 태도가 필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중 관계의 밀접화 등 동아시아의 경제적 교류 강화는 급상승의 물결을 타고 있다. 결국, 동아시아는 분단의 지속인가 아니면 교류 강화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제 10 장 중국 위협론과 민족적 장벽의 극복

「레닌적 분쟁」으로서의 중국 위협론

제 8 장에서는 동아시아의 분단자로서 미일의 군사적 제국주의를 논하고 이어지는 제 9 장에서는 분단의 한쪽 편인 한국, 북한, 중국의 경제발전이 분단 극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 경제발전은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국제 마찰도 일으킨다. Lenin의 제국주의론 자신의 주장이 그랬다. 따라서 이러한 「동아시아 문제」를 논할 때에도 그 중심은 역시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르는 국제 마찰의 문제, 「Lenin 적 분쟁」의 문제가 이론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 위협론」이라는 형태로 이미 시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 한번도 일본이 다른 나라에게 추월을 허락하지 않았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가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일본인이 개발한 뛰어난 공정관리 시스템이 잇달아 중국 공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일본에서는 일자리가 차례차례로 없어질 것이고, 반대로 중국 제품이 시장에 넘칠 것이다. 그것은 바야흐로 전후 반세기 사이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계속 느꼈던 것 그 자체였다. 2002 년 8 월에 실시된 読売신문의 여론 조사에서는 중국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55%로, 88 년에 이러한 질문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신뢰할 수 있다」(37%)을 웃돌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88 년 조사(76%)에 비해 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 하나, 국민의 의식 수준에서 마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예시하자면, 「문예춘추」 2002 년 8 월호에서와 같은 매스컴의 反中 캠페인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이 특집에 대한 필자의 개개 논문의 내용과 편집부에 의해 붙여졌다고 생각되는 제목과의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문예춘추」 2002년 8월호 「총력 특집 중국 불신」의 논문 제목과 저자

논문 제목	저자명
중일국교 회복 환멸의 30년	中西輝政
친중파에게도 말하게 하라	野中広務
「중국에 아첨하는」 정치가를 꾸짖다	深田祐介・古森義久
포스트 강택민 호금도의 육성	上村幸治
좋은 중국 진출 나쁜 중국 진출	藍 正人
뭐야 이견, 중국의 한자	高島俊男
경제성장 7%대의 거짓말투성이	岩瀬彰
실리콘밸리-中関村 르포	樽谷哲也
재일 중국인 극악 범죄 사정	佐々淳行・佐々木知子
중국인 유학생의 「은인 살인」의 어둠	森健
젊은 천재 작가 한한의 교육 비판	桑島道夫
실록 「중국주」를 사 보았다	田中信彦
위험한 중국 야채의 분별법	推名玲
상하이 모리빌딩 50억 엔의 낭비	青木直人
부패 국가의 신흥 벼락 부자들	黄文雄
상하이 일본계 기업 OL의 본심	須藤みか

예를 들어, 따로 적은 특집 목차를 보아 주길 바란다. 각 논문 중, 사실은 처음의 中西 논문, 세 번째의 대답을 제외하면 그만큼 심하게 중국을 비판한 내용은 아니다. 제 8장에서 언급한 「뭐야 이견, 중국의 한자」라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는 高島 논문을 예로 들면 한자의 약자화는 일본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그가 주장하는 번째자의 중시는 일본에서보다도 중국 쪽이 좀더 중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좋은 중국 진출 나쁜 중국 진출」이라는 제목을 붙인 논문도 말의 이런 저런 면에서 신경이 쓰이지만 「좋은 중국 진출」의 조건도 정당하게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성장률 문제를 논한 岩瀬 논문도 ①「중국 위협론」을 부정 ②그러나 일본이 태만하게 날들을 보내면 급속히 캐치 업 당할 것이다 ③하지만 일본과의 공존공영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집의 제목 전체를 바라보고 느끼는 인상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쓰는 사람의 주장과 편집부가 특집을 구성한 의도에는 어떤 엇갈림이 있다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편집부는 반중의 목적으로 특집을 짜려고 했고, 비학자계의 집필자를 중심으로 실제 그 의도에 충실했지만, 자기의 서명이 들어간 문장을 쓰는 이상, 아무리 원고료가 비싸도 터무니없는 논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덧붙여서 두 번째의 野中広務의 논문이 들어가 있는 것도 흥미롭다. 그의 주장 자체는

매우 설득력이 있지만, 지금은 「수구파」로서 인기 최악의 野中를 「친중파」의 대표격으로서 등장시킨 것도 또한 편집부의 절묘의 캐스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편집부의 의도는 분명하게 그에게 반론을 시키는 것으로, 보다 독자의 「반중」 감정을 부추기려는 데에 있다. 몇 번이나 말하건대 이러한 반중 감정의 근본적 원인은 양국간의 경제적 불균등 발전에 있지만, 그 흐름 안에서 보다 많은 매상을 올려 이를 통해 한층 더 이러한 감정을 부추기는 미디어의 존재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폐쇄적인 민족주의는 어떻게 극복 될 것인가

하지만 실은 불균등 발전이 일으키는 국가간 마찰도 그 불균등 발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후진국의 경제발전이 결국 그 마찰을 해소시킨다고 하는 장기적인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선 기업가가 발전하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 그 지역과의 무역, 투자를 계획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대만에서의 분리주의 극복이 기업가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 일본에 있어서도 기업가층에 「아시아 주의자」가 많은 것은 이러한 결과이다. 그 작용도 또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 과정은 대중적인 감정의 수준에서도 진행된다. 일본만이 풍요한 사회였던 시대에는 해외 여행을 한 일본인이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을 오히려 강화시킨 듯한 과정이 존재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타적으로 자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혹은 후진국, 개발도상국이 발전을 하면 주는 측, 받는 측의 관계를 해소해 대등한 관계를 취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경제이론과 통계학의 두 영역에서 특히 중일 간의 학술 교류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일본측의 지출」이 많았던 국제회의도 오늘날에 와서는 대등의 조건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은 이런 의미에서 역시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해외 여행, 기업 진출에 의한 인적 교류, 그리고 대량의 유학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람의 흐름은 무엇보다도 본원적인 요소이다. 타민족을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타민족은 본래 「야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동이서융북적남만」이라는 관념은 「이」도 「융」도 「적」도 「만」도 아닌, 같은 인간인 것을 인정한다는 인식만이 그것을 폐기할 수 있는 것이다. 좌익사상에는 과거의 좁은 농촌 공동체의 인간 관계를 미화하는 풍조가 반복해 나타나지만, 이러한 좁은 공동체는 공동체 내부만의 평등 사회이며, 이웃에게 좋은 이러한 사람들이, 전쟁터에서는 보다 야만스럽게 변화한다는 것은 자주 듣는 이야기 그대로이다. 제 5 장에서 말한 것처럼 제국주의에 의한 「각국민의 전면적 교류」이 적극적인 것으로서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눈앞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견해도 바꾼다. 일본에 있어서는 제일 한국인이나 조선인에 대한 편견과의 투쟁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지만, 그것이 드디어 젊은층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그 이외의 외국인이 일본국내에 많아졌기 때문은 아닐까. 특히 졸업 후 그대로

일본에 남아 일을 하는 다수의 유학생의 존재는, 그 동료들에게 그들과 대등하게 교제하는 제일 한국인·조선인을 차별하는 이유가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해 준다. 일하는 장소에서, 배우는 장소에서 많은 외국인이 진출할 수 있는 사회로의 진화는 이런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진보적 성격을 가진다.

중국에 있어서의 「애국주의」의 문제/

그런데 이와 같이 해서 사람들의 많은 교류가 사람들 사이의 정신적 거리감을 없애주는 것, 같은 인간으로서의 감성을 배양하는 것은 우리의 땅,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경험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원래 중국에 있어서 「한민족」의 성립 자체가 원래 이민족에 지나지 않았던 많은 각 민족 사이의 장벽을 없애고 따라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형성된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도 또한 북방의 한민족은 키가 크고 가름하고, 남방의 한민족은 반대로 얼굴이 둥글고, 절강성 근처의 한민족은 몸집이 작고, 사천성에 가면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 등등. 이러한 면면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나가 「민족」으로서의 한민족이라고 자인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의 교통·통혼은 활발하다. 이 과정은 미국에서 「미국인」이라고 하는 개념의 성립 형태에서도 진행 중 이지만, 현재 먼 장래, 동아시아 전역에서 혹은 전 세계적으로 생길 민족 사멸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러한 의미에서 흥미가 끊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 중국이 「민족주의」를 가지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면과 부정적 측면 양쪽 모두를 여기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시달려 온 약소국의 민족주의는 항일전쟁을 치르고 반중 포위망을 타파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했지만, 그것이 미국을 대신하는 초강대국으로서 등장할 때에는 부정적인 면도 아울러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나는 미국에 의한 유고슬라비아의 중국 대사관 폭격 사건 때에 특히 강하게 느꼈다. 당시의 중국 국내의 논의는 정부 주도로 「우리는 약한 나라이니까 이런 경우를 당했다. 국가 건설로 그렇게 되지 않게 노력하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세계 질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한다면 약소국인 이라크는 폭격되어도 강대국이나 「우호국」인 인도·파키스탄은 폭격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당국의 인식은 옳바르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캠페인은 중국 국내가 단번에 반미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당국이 여론 유도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점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이 자신을 「약소국」으로서 인식하는 시대는 벌써 끝나고 있다. 「ASEAN+3」을 통하여 그 영향력을 남쪽으로 확장해가고 있고, 「상하이 6(상하이 협력 기구)」을 통하여, 중앙 아시아로 나아가고 있으며, 한국이나 북한에도 영향력을 넓히는 중국, 아프리카나 유럽 외교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은 벌써 충분히 강대국이며, 그러한 나라가 「강해지면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주장만을 계속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된다. 세계가 벌써 강대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때, 「강대국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세계관만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슬로건을 볼 때,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행동에 불안을 품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점에서 「중국 위협론」에는 중국측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실제, 중국이 정말로 강대국이 되려고 한다면 본서 제 6 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현실의 행동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미국조차 「인권 외교」나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간판을 그들의 대외 정책의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다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대외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현실은 그렇지만) 그러면 그 대외 정책 자체도 타국의 저항에 부딪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일본이 거액의 해외 원조를 하면서도, 그 철학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존재를 강화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돈」은 내지만 미국의 투표 기계가 되었을 뿐이고, 자신의 철학을 어필하지 않았던 일본은 그 미국에게조차 기분 나쁘게 인식되는 것이다. 일본의 주변국들에게 일본이 때때로 「위협」이라고 느껴지고, 미국에게조차 핵무기 보유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문화대혁명과 제 3 세계론

그러나 혁명 이후 신 중국의 외교는 본래 이러한 것은 아니었다. 아직 대일전이 한창이던 1945 년 8 월 초순에 미국의 원폭 투하에 항의한 세계에서 유일한 외국당은 중국 공산당뿐이었다. 또한 전범도 극진하게 대우(病死의 1 명을 제외해)해서 전원을 처형하지 않고 사면한 세계사에도 드문 경험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단순한 임시 방편의 전술이 아니었음을 믿게 하는 강력한 철학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원폭 투하의 문제에서는 「적은 일본인민이 아니고 지배계급이다」라는, 전범의 경우에는 「인간은 개조될 수 있다」라는 마르크스주의 사상 혹은 모택동 사상의 철학이 깊숙이 관련되고 있다. 이 원리주의-어쩌면 중국이 통합된 형태로서는 처음으로 손에 넣은 원리주의는 광폭하기는 했지만, 메시지는 강력했고 중국의 위에서 설명한 태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신뢰를 받기에 충분했다. 중소 논쟁 시에 제출된 「제 3 세계론」도 또한 같다. 일본을 포함한 온 세상에 무수한 마오이스트와 친중파를 만들어 낸 그 철학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문맥으로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 중국에 있어서 모택동의 시대는 실제로 상식과는 다르고, 중공업과 철도, 항만 등의 건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시대이며, 등소평의 개혁 개방 노선은 그러한 사회자본 정비 위에 선 「수확기」라고 이해해야 한다. 또한 개혁 개방 초기의 중국 공업을 지지한 향진 기업(농촌 기업)도 인민공사에 의한 농촌으로의 공업화 이식 위에 성립된 것이다(이러한 점은 大西・矢野編 「중국 경제의 수량 분석」 세계 사상사,

2003 년 서론 참조) 그리고 그것들 이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대혁명이 「문화 혁명」의 목표로 삼았던 유교 정신 비판의 사상과 운동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문화혁명의 유교비판 없이 유교의 본국, 중국의 유교가 한국의 유교보다 몇 배나 약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왜 그 유교 비판이 중국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 대답의 반은 연장자와 남성의 지배를 깨는 것에 있고, 그것이 그 경험을 가지지 않은 한국이나 북한과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잘못된 실은 여기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모택동은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과는 달라서 일체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대답의 반은 유교 정신이 가지는 좋게 말하자면 현세주의, 나쁘게 말하면 처세술 우선의 자기 보신주의에 문제가 있다.

물론 잘 알려져 있듯이 공자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전국 세상의 통일을 시황제와 같이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좀 더 평화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진지하게 찾은 인물이다. 혹은 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 덕이 지배하는 사회를 목표로 했던 것이라라고 보다 근본적으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이상을 이상으로서 이야기만 하면 실현된다고 할 정도의 철부지가 아닌 공자는 그 실현을 위해서 정과 사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천자나 제후에의 반역자를 섬기고 있던 공자는 그 제자 자공에게 비판을 받고, 「누구를 섬기든 자신에게 정치를 맡겨 준다면 곧바로 이상사회를 실현한다」라고 대답해 자공을 속이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반역을 「부덕」이라고 하는 본래의 공자의 생각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자는 이상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솔직히 이야기 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좋은 일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원리주의를 가진 서양 종교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사상의 정직함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보신주의적 문제점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노장은 정말로 이러한 타협을 일체 거부하는 것으로, 이상이 실현될 수 없으면 은둔의 길을 선택한다. 노장사상이 자주 은자적 생활에 의해 이미지화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노장에게도 또한 다른 종류의 처세술적인 면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생략 한다). 그리고 모택동도 예를 들어 「반대 자유주의」라고 하는 문장 안에서 「군자는 사려 깊고 몸조심하여 쓸데없이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보신술(명철 보신), 「면중후언」의 보신술, 「공이망사」의 과별심, 조직으로부터 이익만을 요구하는 개인주의, 무사안일주의 등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들 자체가 직접적으로는 국내적 개개인의 자세를 문제 삼았던 것으로 외교 자세를 논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이 사상과 「제 3 세계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그가 문제시했던 세계관에는 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극동의 약소국에 지나지 않았던 중국도 약소국이기 때문에 더욱 세계의 「제 3 세계 제국」과 연대해서, 그것을 통해 세계에 당당히 발언을 해 왔던 것은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이론상으로는 국제화에 의한 후진국이 발전하는 경향을 볼 수 없었다 라는 등 이 「제 3 세계론」의 내용에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 문제점을 날려 버릴 정도의 명확한 철학 사상으로서 세계에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현재의 중국 외교의 태도에는 철학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라크전쟁에 반대하기는 했지만 프랑스와 같이 거부권을 사용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배려였을 것이다. 하지만 「배려」함으로 인해 적대국을 만들지 않는다는 태도가 아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정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의견은 다르지만 하나의 훌륭한 입장을 가지는 나라라고 평가되어서 얻어지는 이익을 이제야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약소국이라면 모를까, 각 국가의 상황을 보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강대국을 각국은 존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협으로조차 느낀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점진 개혁 노선」으로서의 반전 운동론

이와 같이 말하면 나도 또한 「반중」의 동료로 간주 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세계의 불균등 발전 과정에서 쇠퇴 국가도 발흥 국가도 통상 발생하는 적대적인 민족주의의 문제이며, 그 법칙에 저항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는 문제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바야흐로 중국도 그 법칙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법칙을 중국은 때때로 돌파한 경험을 가진 세계사에 드문 나라이다. 그 하나가 상술의 원폭 투하에 대한 항의, 전범의 사면, 거기에 장개석이 선도했다고는 하나 배상의 일방적 포기, 「제 3 세계론」의 제기이다. 현재의 중국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대는 자신의 과거에 있다. 이러한 태도에 의해 중국은 무기 없이 각국에 친중파를 다수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해, 결국 앞의 의미에서의 「위협」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역사의 일반법칙 이외의 패거로서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거론하고 싶은 경의를 표해야 할 수준의 하나로서 들고 싶은 것은 「중국의 지혜」이다. 이것은 등소평에 의한 경제개혁의 성공이다. 그 자세한 것은 다시 大西・矢野編 「중국 경제의 수량 분석」 세계 사상사, 2003 년으로 미루지만, 구 소련이나 동구의 제국이 급진 개혁에 의해 경제 파탄을 부른 것과는 대조적으로, 등소평은 그들보다 10 년이나 앞서서 경제개혁을 시작해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장지속의 경제개혁을 완수했다. 이 지혜는 세계의 모든 대규모 경제체제 전환이 혁명이나 전쟁 없이 완수할 수 없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음의 체제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절묘한 컨트롤로서 다음체제로 이행을 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업은 그 후 베트남이나 쿠바, 또한 현재의 북한을 제외하고 세계의 어디도 이를 수 없었던 것이다. 후르시초프나 인도의 라오가 그것을 이루어 낼 듯 보였지만 역시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에 이끄는 지혜를 가진 것은 그들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베트남, 쿠바, 북한은 중국을 흉내 내고 있을 뿐이니까 그 「지혜」는 중국 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특히, 이 지혜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역사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 또한 평화적, 점진적으로 전환을 수행한다」라는 문제는 본서 전체가 논하고 있는 「강대국의 쇠퇴」의 본연의 자세에도 연결되고 또한 의미가 통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나 일본)이 그 쇠퇴의 역사 경향을 인식해서, 만약 위정자가 그것을 컨트롤하고 등소평 이 수행한 것과 같이 점진적이고 절묘하게 할 수 있다면, 전쟁으로 발버둥을 치고, 그 때문에 자신의 쇠퇴도 가속시킨다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Ⅱ부의 마지막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전환에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동반한다. 이 어려움이 「전쟁이 불가피하다」라는 이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 「법칙」을 깨는 지혜가 세계에 없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 제Ⅱ부 말미에서 말한 것처럼, 위정자는 지배계급의 이해에 얽혀 있고 따라서 이 이해를 넘어 움직이는 것은 궁정 혁명을 의미할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무리한 이야기 일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다음가는 차선택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만약 국내의 반전 운동이 강하고 따라서 위정자가 의지대로 전쟁을 할 수 없다면 그 때에는 세계가 해당 제국주의를 「국제적 범죄자」라고 비난 할 필요는 없어지며, 그 범위 내에서는 세계로부터의 고립을 회피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미국에서 실행되었더라면 미국이 유엔에서 고립되고, 프랑스나 독일 등 동맹국의 반발도 불러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전쟁 국가 내부의 반전 운동은 실로 「애국적」이며, 마찰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국제 질서의 「점진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경제개혁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었던 그 지혜는 전쟁 회피의 지혜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 된다. 이것을 떠 말아야 하는 것은 반전 운동이며, 또한 세계 질서의 역사적 법칙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적, Lenin 적 사회과학의 역할은 중대하다. 본서가 거기에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었다면 기대한 것 이상의 행복일 것이다.

맺음말

「반전 배지」와 애국주의

뉴욕 체제 중, 몇 번인가 반전 집회에 참가하던 중 아들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던 한 어머니와 친하게 되었다. 「애국자가 되어야 함」을 강요하는 미국 사회 속에서, 군대에 입대하는 젊은이가 끊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아들도 입대 할 때에는 이러한 전쟁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이 분의 지인 중에는 장학금 관계로 입대해 부득이 파병된 아들을 가진 분도 계셨다. 이러한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미국병사」도 또한 미국의 민중이라고 하는 당연한 사실을 실감할 수가 있었다. 미국 여론은 얼마나 전사자가 나오는가에 따라 움직인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로는 전사자의 수가 하나의 관심이 되었지만,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뇌리에 떠오른 것은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우리의 공격 목표는 「전쟁으로 몰아넣는 사회 구조」이지, 미국병사는 아니다.

이것을 Lenin 은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바꾸어라」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리고 실제로 Lenin 이 지도한 러시아 혁명이란, 이 무익한 제국주의 전쟁을 정지시키기 위한 호전 정부의 전복이었다. 민중이 병사로서 시민으로서 살육하고 살육 당하는 사태를 즉각 정지시키는 것. 그 슬로건 밑에서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반전의 정부」를 수립시켰던 것이다. 전쟁 돌입 후의 정권 전복이었지만 적어도 전쟁의 중지에도 의해 많은 생명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의미로 미국의 반전 운동도 본질적으로 「애국적」인 것이며, 한편 정치 변혁과 밀접하게 연관된 운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반전 집회에 참가해 반전 배지를 붙이고 거리를 걸었던 나도 또한 이런 의미에서는 진정한 「친미파」였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많은 인파 속에서 반전 배지를 계속 붙이고 다니는 것은 솔직히 말해 무서웠다. 특히 전쟁 돌입 후의 미국의 보도는 심한 언론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전쟁 지지파 집회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내가 백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팬찮았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봐도 외국인인(재미 일본인은 거의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는다) 인간의 반전 배지는 「반미 배지」로 비추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실 여러 나라의 반전 집회는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는 집회인 이상 「반미 집회」였다. 미국이 이 전쟁에 의해 보다 한층 국제적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나라의 민중은 전쟁에 반대할 수 있었다. 본질적으로 미국인이 아닌 나의 반전 운동도 그러한 의미에서 「반미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상황속에서도 배낭에 반전 배지를 붙일 때에 나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일을 생각했다. 그것은 즉 미국에서는 전쟁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일본에 돌아가서 반전 운동을 한다. 그러한 방식과 미국에서 이러한 행동을 해서 그 시민에게 반전을 호소하는 것과 어느 쪽이 「친미적」인가 라는 문제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의 결론은 반드시 미국에서 미국 시민에게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즉 본서에서 반복하여 주장한 「미국의 쇠퇴」라고 하는 역사의 필연 속에서 무엇이 가장 피해가 적은 길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역시 전쟁을 하지 않는 형태로의 「미국의 퇴각」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은밀하게 닌슨 대통령의 금 달러 교환 정지, 변동 환율제로의 이행과 베트남 전쟁에서의 북폭 정지와 군비삭감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자신의 퇴각을 컨트롤 하는 그러한 지혜를 느끼고 있었다. 즉 미국 정부가 자신의 손으로 퇴각을 선택할 때, 그것은 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해,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의 상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이번도 만약 부시 정권이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길을 걸을 수가 있었다.

나의 생각에서는 이것이 가장 「애국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물론 이 책이 군사적 제국주의가 불균등 발전의 귀결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러한 「퇴각의 의식적 제어」가 매우 어려운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지배계급으로서 군림한 계급이 스스로의 손으로 그 지위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패권 국가로서 군림한 국가가 스스로의 손으로 그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적인 혁명이 정권 교체 없이 보통 행하여 질 수 없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국제 질서의 변혁도 쇠퇴 국가의 야만스러운 발버둥을 항상 가져오게 한다. 정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역사 법칙」에 저항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일설에서는 닉슨 대통령 자신도 위에서 이야기한 「퇴각 전략」 때문에 호전 세력의 함정에 빠졌었다고 한다. 이것은 경제개혁의 단행으로 관료층에 의해 실각 당한 후르시초프를 상기시킨다. 어쨌든 이 길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무엇이 차선의 길이 될 것인가. 나는 이러한 경우, 미국인이 미국인의 손으로 전쟁을 중지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베트남 반전 운동도 이러한 문맥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도 타국과의 마찰을 줄여서 그리고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의 쇠퇴를 가능한 한 회피할 수가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미국인 모두가 호전파로 채워진다고 하면 그 전쟁의 중지는 미국의 완전한 국제적 고립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여론이 미국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사상 투쟁을 하면서도 미국인을 향해 직접 말을 거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한 나의 생각은 이러한 이유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본서의 집필은 보론 ①에서 보여준 논문을 제외하고 그 모두가 뉴욕·콜롬비아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에 체재하던 중에 작성되었다. 2002년 8월부터 2003년 5월까지가 나의 재미 기간이었지만, 이것은 정확히 9/11 사건의 1주년을 지나서 이라크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기간, 그리고 또한 그 전쟁으로부터 다음의 단계로 미국이 나아가던 기간이었다. 이 기간 처음에는 반전 정보를 포함해 미국의 각종 정보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에세이나 논문의 형태로 일본에 보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본서에서는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줄거리와 논리를 정비하여 이러한 형태로 다시 만들었다. 원래는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논문이나 에세이였기 때문에 이 작업은 간단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세상에 나의 견해를 물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역시 정세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전 소련의 붕괴에 접해, 그 붕괴에 대해서 사회과학자의 이해가 혼란스럽다고 생각했을 때, 서둘러 서적을 새로 써서 여론에 나의 생각을 물어보았던 적이 있었다. 1992년의 봄에 출판한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주의」라고 제목을 붙인 책이지만, 이것도 또한 大月서점에서 출판을 해 주었다. 이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에 의한 현대 세계의 설명에 혼란이 있다고 느꼈던 것이 본서 집필의 동기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과 뉴욕을 차분히 관찰하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으로서는 정말로 행복한 일이었다.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일본인

또 한가지 이 미국 체험 중에 생각했던 것은 미국인과 「동아시아인」 사이에 있는 인식차이의 크기이다. 미국인 중에서도 최고의 「동아시아 전문가」가 모이는 콜롬비아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에서도 우리의 땅 동아시아는 어떠한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일부 지역이나 일부 산업의 상세한 조사 결과가 매일 보고되고 있어도, 그것들은 항상 동아시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그 이외의 다른 것은 없고, 어디까지 가더라도 전체가 안 보이는 부분 연구의 집합체와 같은 느낌을 가졌다. 예를 들어, 이 연구소에서 「한국의 미국 이탈」에 대해서 논의되었을 때, 「한국통」의 연구자는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에 대한 판정 미스로 금메달을 박탈당한 사건을 알지 못했다. 혹은 콜롬비아 대학 소속의 연구자는 아니지만 「일본통」으로 꽤나 알려진 어떤 유명 미국인 경제학자는 그 자리에서 화제가 된 제갈공명을 몰랐다. 물론 우리도 중국이나 한국의 상식에 대해서 모르는 부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이러한 공통 인식의 유무는 중국이나 한국과의 인적 교류의 규모를 생각할 경우, 그 양은 일본으로부터의 그것이 미국으로부터의 그것을 몇 배, 몇 십 배나 상회하고 있다. 이 체험을 통해서 나는 우리 한중일의 3 국(사실은 북한도)에는 역시 「동아시아」 국가로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다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는 해도, 동아시아에 사는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태도에는 큰 문제가 있다. 물론 구미로부터 얻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아시아의 이웃에 대한 멸시가 구미 숭배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되는 그런 체험을 나는 몇 번이나 했던 적이 있다.

이것은 미국 체제 이전의 경험이지만 수년 전, 「미일 학생 회의」라고 제목을 붙인 양국 학생의 연합 조직의 의뢰를 받아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미국인 보다 일본인이 더 「친미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웠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개최된 어떤 세미나에서는 미국인마저 그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일본의 군사적 공헌」을 일본인 유학생이 주장한 일이 있었다. 이 일본인 유학생이 그러한 의견을 가지게 된 데에는, 주위의 영향이 크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가 전공하는 국제 관계론은 「대미 외교론」은 아니다. 파병되는 측의 나라, 그 동맹국, 그리고 제 3 국 등 전체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국제 관계론」인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만 하는」 타국의 국민 감정은 미국의 감정만은 아닐 것이다. 아시아의 각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라크 등 공격을 받는 나라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한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의 하나는 우리의 과도한 구미숭배에 있다는 것이 나의 느낌이다.

물론 미국은 많은 의미로 위대한 국가이다. 풍요하기도 하고 그 문화도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진국으로부터 자꾸자꾸 문화를 수입하는 것이 동아시아 각 민족의

민족적 특징이었다. 그러나 그 나라에게서 배운다고 하는 것과, 그 나라를 추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고대의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대부분을 배웠지만 「추종했다」라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문명 개화 후의 일본에서 노신이나 손문, 오려, 진독수, 주은래 등이 공부를 했지만, 「역시 추종했다」라는 것은 아니다. 자립한 인간의 모습은 이런 것이며, 위와 같은 유학생의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친미적」인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추궁 당하고 있는 것은 왜 「친미」로 되는가이다. 자립한 심성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정치의 동향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즉 자각한 존재로 자신을 단련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동아시아인」으로서 해야 할 일

이와 같이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국제인이 되어 민족적 편협을 뛰어넘으려는 목적에 있어서 이웃나라 민족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일본은 문화나 교육, 언어라는 측면에서 너무도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북한의 역사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다. 중국사는 동아시아의 일종의 당연히 알아야 할 교양으로 여겨지고는 있지만, 한국·조선의 역사는 교과서에서도 너무나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버리듯이 쓰여져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일본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문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차, 화도, 선, 스모, 일본 정원 등의 대륙 기원이나 수입 등에 대해서 도입시기나 과정 등을 말할 수 있는 일본인은 거의 없다. 우리가 「일본식」으로서 가장 자랑하는 문화에 대해서조차도 이렇기 때문에 문화의 대륙 기원에 대해서는 소위 의식적으로 잊고 지나가 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지 모른다.

특히 이 점에서 내가 특별히 주장하고 싶은 것에는 한자의 문제가 있다. 본문 중에서도 언급한 「문예춘추」의 반중 특집에는 중국의 간체자가 원래의 글자와 너무나 다르다라는 비판 논문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의 한자의 바꿔쓰기(요컨대 일본식의 간체자화)를 실시 할 때 중국, 대만, 일본, 한국과 북한 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인가. 이것은 물론 중국 측에도 말할 수 있는 문제로 모처럼 같은 글자를 사용해 온 동아시아의 각 민족이 현재 다른 글자를 사용하는 것은 명확하게 국제 교류상의 장애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똑같이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3국이 매년 한 번 언어의 조정 회의를 행하고 있다. 이런 일은 일본 정부의 눈이 아시아에 향해 있다고만 한다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금년의 4월에는 국립 국어 연구소가 outsourcing, moratorium 등 가타까나 외국어의 한자 표기의 통일을 시행했지만, 이것 등도 본래 가능한 범위에서 한자문화권으로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는 일본에서 최초 「전자계산기」라고 번역되었지만 「컴퓨터」라고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번역인가를 우리는 요즘에

와서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번역의 좋음 나쁨 이전에 한자문화권의 말을 여기서의 작업만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경영」 「회계」 「자본주의」 「은행」 등의 말은 문명 개화기의 일본 번역이 그대로 중국으로 가져가 졌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어의 발음 하나 알지 못하고서도 중국어 신문에 쓰여져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추측할 수가 있다. 일본인의 상당수는 영어와 같이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중국의 말에 접근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없어지고 있다. 국제 교류에 있어서의 언어의 특별한 중요성을 생각할 때 특별히 취급되어야 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중요한 일이므로, 한번 더 한자의 통일에 대해 말하고 싶지만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자의 오해와는 정반대로 중국의 간체자가 그 글자 본래의 의미를 소중히 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은 부디 알아 주셨으면 한다. 예를 들어, 「從」이라고 하는 글자를 간체자로는 「从」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일본인은 이것이 대체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래의 글자 「從」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의 「사람」에게 「따르며」 뒤에 「사람」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다. 이러한 의미로 일본의 글자체가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한 이상한 형태로 변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혹은 「豐」이라고 하는 글자를 간자체에서는 「丰」라고 쓰며 이것도 일본인은 그 간략함에 놀라지만 「풍」의 본래의 글자는 「豐」라는 것으로 그 글자의 중심은 이삭이 풍부하게 여물고 있는 관의 부분에 있고 그것을 「曲」이라고 생략한 일본의 방식은 글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약간 사족이 되겠지만 영어 이외에 동아시아 언어 2 개를 배우려면 다수의 국민에게는 말 할 수 없지만, 그 대안의 하나로서 내가 생각 하는 한중일(북한)의 언어 표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① 한자체의 통일 ② 외래어의 한자 표기의 통일 ③ 인명, 지명 등의 표현을 알파벳으로 한다 ④ 한국·북한에서도 일본과 같이 한자 한글을 섞은 문장을 사용한다 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을 실행하기만 한다면 한중일(북한)의 각 국민들은 무슨 추가적인 언어학습 없이도 각각의 언어로 쓰여진 문장의 개략을 거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언어학습의 수고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 제안의 옳고 그름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러한 사항이 검토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본서의 구성에 대해

마지막에 더 한가지, 본서의 구성에 대해 보충해 두고 싶다. 왜냐하면, 본서는 3 부로 구성 되어 있고 또 그 부의 각각이 조금 논리 차원이 다른 제 4 장을 제외하고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즉 3·3·3 의 구조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자본론」의 구성과 같이 Hegel 변증법의 정·반·합의 형태로 구조화 되어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3 개의 부에 대해서는,

제 I 부: 「미국 쇠퇴 과정의 군사적 제국주의」라는 현상의 정의

제 II 부: 제국주의로서의 이해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일견 역의 현상과의 관계

제 III 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으키는 동아시아의 발전이라는 발전 방향

제 I 부의 세 개의 장에 대해서는

제 1 장: 불균등 발전론으로서의 군사적 제국주의론의 정의

제 2 장: 불균등 발전론으로서의 국민 의식론=상부 구조론

제 3 장: 토대와 상부 구조의 구체적 전체

제 II 부의 세 개의 장에 대해서는

제 5 장: 제국주의 시대로서의 현재의 제국주의

제 6 장: 「反」으로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론

제 7 장: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을 매개로 한 제국주의론으로서의 구체적 전체

제 III 부의 세 개의 장에 대해서는

제 8 장: 동아시아의 분단자로서의 미일의 군사적 제국주의

제 9 장: 분단 된 한쪽으로서의 북한, 중국, 한국

제 10 장: 분단의 배경으로서의 중국 위협론과 분단 극복에의 길

또, 개별의 장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제 3 장은

들어가는 말: 단순한 경제 원인설

그 다음으로: 국민 의식 원인설

마지막으로: 경제 쇠퇴의 가속에 의한 국민 의식의 변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게다가 3 개의 부의 총괄 부분에 있는 반전 운동론도 3 장 관계를 이루고 있다. 불균등 발전론, 국가론, 변혁론, 정당화론, 글로벌라이제이션론, 전쟁론, 등등 마르크스주의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정확한 질서 인식 없이 본서와 같은 이론서로서의 과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독자에게는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재차 본서 전체의 구조에 대해 재검토해 주셨으면 한다.

어쨌든 본서의 집필에 있어서는 나의 미국에서의 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준 미국의 많은 친구들, 뉴욕의 많은 일본인 친구, 그리고 바쁜 학사일정을 빼 주시고 미국으로 보낸 주신 학부의 동료들에게도 이 장소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 또 일본의 관련 자료를 보내 준 아내에게도, 그리고 언제나 출판을 담당해 주고 계신 大月書店에도 답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大西広

2003 년 6 월